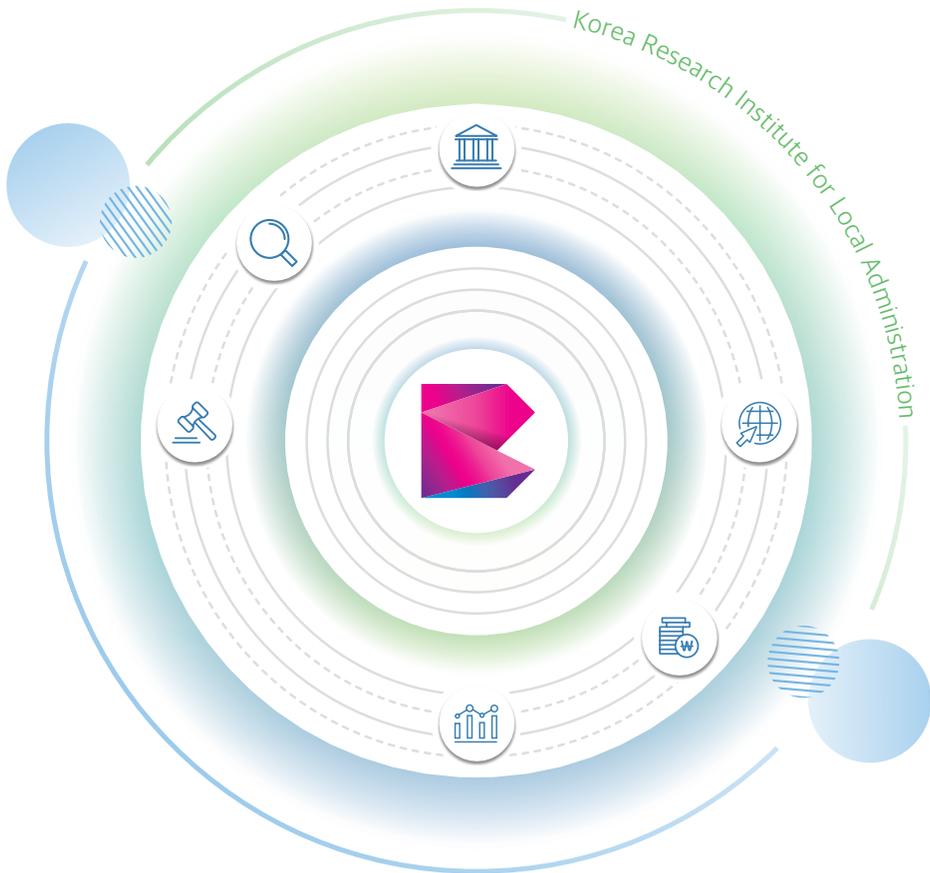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중심형 정책지표 개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이경은 · 최지민 · 유자영



저 자 이경은, 최지민, 유자영

연구책임자 이경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구 진 최지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자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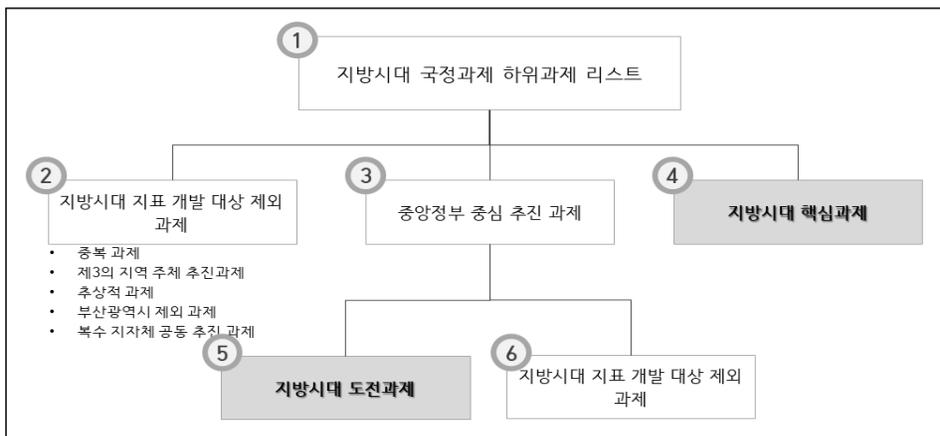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목표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연계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 2023년 6월 9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안’)'이 제정되었음
- ‘통합법률안’이 제정됨으로 인해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정목표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상황임
 - 지방시대라는 거대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구체적으로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와 얼마나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표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성과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대’ 구현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연구 발주처인 부산광역시에 관점을 중심으로 한 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춤

2. 주요 연구내용

□ 「지방시대」 국정과제 분석 결과

- 국정목표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를 연계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관점에서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지표 개발 대상에 적합한 하위과제를 선별함
 - ‘지방시대’ 국정과제 하위과제 리스트를 작성한 후, 중복과제, 부산광역시 제외 과제 등의 기준을 통해 지표 개발 제외 대상 과제와 중앙정부 중심 추진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를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선정함
 - 중앙정부 중심 추진 과제 중 중앙정부의 선행행위가 존재하나, 해당 행위가 종료된 이후 지역에 대한 경제적·재정적 지원이 예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경제적·재정적 자원 획득을 위해 지역의 잠재력을 보여야 하는 하위 과제를 ‘지방시대 도전과제’로 선정함

[그림 1]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 개발 대상 과제 선별 절차



자료: 저자 작성

- 분석 결과, 120개 '지방시대' 하위 과제 중 25개의 지방시대 핵심과제와 14개의 지방시대 도전과제가 추출되었으며, 지방시대 핵심과제 키워드는 9개, 지방시대 도전과제 키워드는 4개로 압축되었음
 - 25개의 지방시대 핵심과제의 주요 키워드는 ① 주민자치 강화, ②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 ③ 지방재정 자립, ④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⑤ 지방행정역량 강화, ⑥ 지역기업 육성, ⑦ 지역상권 육성, ⑧ 지역인재 양성, ⑨ 지역혁신 거점 개발 등 총 9개임
 - 14개의 지방시대 도전과제의 주요 키워드는 ① 교육자유특구, ② 기회발전특구, ③ 지방투자,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임

□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 개발

-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는 '지방시대 핵심과제'와 '지방시대 도전과제'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됨
 -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방시대 9대 키워드 및 각 키워드별 국정과제 하위 과제들을 고려하여 17개의 주요 정책 수단별 성과중심의 지표를 개발함
 - (지방시대 도전과제) 4개 키워드(또는 핵심 사업)와 유사한 사업의 성과를 통해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함
- 지방시대 지표 개발 결과, 지방시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총 101개의 지표 후보군이, 지방시대 도전과제에 대해서는 총 17개의 지표 후보군이 개발됨

□ 지표 우선순위 및 측정 타당성 검토

- 총 118개의 지방시대 지표 후보군에 대하여 각 정책수단별 지표 우선순위 및 개별 지표에 대한 측정타당성에 대해 검토함
 -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관리해야 할 지표의 중요도를 식별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지표에 의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임
- 지표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1순위 및 2순위 지표

들로 구성된 간소화 지표체계를 구성함

- 지방시대 간소화 지표체계(compact model)는 총 43개의 지표로 구성됨

- 측정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설문결과, 측정타당성 기준(80%)에 미달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표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 측정방식을 수정함

- 118개 지표 중 2개 지표에 대해서는 측정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아, 이를 지표체계에서 삭제하여 지방시대 통합 지표체계(full model)는 총 116개의 지표로 구성됨

3. 정책적 제언

- 지표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지표가 현 시점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더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지표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지표의 해석에 있어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음
- 본 연구에서는 지표 개발, 실행, 사후관리 과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관리체계를 수립을 위한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 거버넌스 구축

- 지방시대 지표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표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함
- 복수의 부서의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 지방시대 지표체계 및 지표관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및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함
- 지표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칭)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위원회)가 필요함

-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 지방시대 지표관리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주기적인 지방시대 지표체계 평가 실시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방시대 지표체계의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표체계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가운데 정책과제의 시행기간에 따른 지방시대 지표체계의 타당성 검증에 적절한 평가 주기를 설정하여야 함
- 지표 및 지표체계의 정책 적합성, 지표 측정의 일관성, 지표 측정의 효율성, 지표의 표준화 가능성, 지표 간 우선순위 재설정 필요성 등의 기준이 평가에 고려되어야 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5
3. 연구흐름	6
제2장 「지방시대」 국정과제 분석	7
제1절 분석 개요	9
1. 분석 목적	9
2. 분석 절차	9
3. 분석 대상	13
제2절 「지방시대」 국정과제 분석 결과	18
1. 지방시대 핵심과제 및 핵심과제 키워드 도출	18
2. 지방시대 도전과제 및 도전과제 키워드 도출	24

제3장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 개발	25
제1절 지표 개발 개요	27
1. 지표 개발 방향	27
2.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설계 개요	28
3.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설계 개요	29
제2절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설계	30
1. 9대 키워드별 주요 정책 수단 식별	30
2. 정책수단별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후보군	41
제3절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설계	87
1. 4대 키워드별 주요 정책 수단 식별	87
2. 정책수단별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후보군	90
제4장 지표 우선순위 및 측정타당성 검토	109
제1절 개요	111
1. 검토 목적	111
2. 검토 과정 및 내용	111
3. 검토 결과의 활용	114
4. 전문가 집단	115
제2절 지방시대 상위 목표 및 정책수단 우선순위 검토	117
1. 지방시대 상위 목표 간 우선순위	117
2.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간 우선순위	117
3. 지방시대 도전과제 정책수단 간 우선순위	119
제3절 지방시대 지표 간 우선순위 및 측정타당성 검토	120
1.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우선순위 및 측정타당성 검토	120
2.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우선순위 및 측정타당성 검토	126

제5장 결 론	129
제1절 지방중심형 지방시대 지표체계	131
1. 통합 지표체계 (Full Model)	131
2. 간소화 지표체계 (Compact Model)	141
제2절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방안	146
1.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의 필요성	146
2.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 방안 제언	147
【참고문헌】	153
【부록】	159

표목차

[표 2-1] 과제 유형별 특성 및 지표 개발 방향성 설정	13
[표 2-2] '지방시대' 10대 국정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14
[표 2-3] 지표개발 대상 제외 하위 과제 리스트	18
[표 2-4] 중앙정부 중심 추진 하위 과제 리스트	19
[표 2-5] 지방시대 핵심과제 리스트	20
[표 2-6] 부산광역시 관점에서 재구성한 지방시대 핵심과제	21
[표 2-7] 9대 키워드별 지방시대 핵심과제	23
[표 2-8] 지방시대 도전과제 리스트	24
[표 3-1] 키워드별 주요 정책 수단의 특성 및 성과 기준	39
[표 3-2] 주민자치회 지표 및 측정 방식	43
[표 3-3] 주민자치회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44
[표 3-4]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지표 측정 방식	46
[표 3-5]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46
[표 3-6]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지표 및 측정 방식	48
[표 3-7]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49
[표 3-8] 정보공개 지표 및 측정 방식: 현금성 복지사업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51
[표 3-9] 정보공개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현금성 복지사업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52
[표 3-10]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지표 및 측정 방식	53
[표 3-11]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54
[표 3-12]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지표 및 측정 방식	56
[표 3-13]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56
[표 3-14] 지방연구원 지표 및 측정 방식	58
[표 3-15] 지방연구원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58

[표 3-16] 규제혁신 지표 및 측정 방식	60
[표 3-17] 규제혁신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61
[표 3-18] 광역시도별 주력산업 현황	62
[표 3-19]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 지표 및 측정 방식	64
[표 3-20] 지역주력산업(기업)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65
[표 3-21] 로컬브랜드 육성 지표 및 측정 방식	68
[표 3-22] 로컬브랜드 육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68
[표 3-2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선정 지역	69
[표 3-24]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 지표 및 측정 방식: RIS를 중심으로	71
[표 3-25]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RIS를 중심으로	72
[표 3-26]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지표 및 측정 방식	73
[표 3-27]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74
[표 3-28] 창업훈련전문기관 육성 지표 및 측정 방식	75
[표 3-29] 창업훈련전문기관 육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76
[표 3-30] 청년창업지원정책 유형	76
[표 3-31] 청년창업지원 지표 및 측정 방식	78
[표 3-32] 창업훈련전문기관 육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78
[표 3-33] 혁신도시 지표 및 측정 방식	80
[표 3-34] 혁신도시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81
[표 3-35]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거점 조성 지표 및 측정 방식: 캠퍼스혁신파크를 중심으로	83
[표 3-36]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거점 조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캠퍼스혁신파크를 중심으로	83
[표 3-37] 유망신사업 거점지역 육성 지표 및 측정 방식: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85
[표 3-38] 유망신사업 거점지역 육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86

[표 3-39] 교육자유특구 유사 사업 비교	91
[표 3-40] 교육자유특구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 후보군 및 측정 방식	93
[표 3-41] 교육자유특구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94
[표 3-42] 기회발전특구 유사사업 비교	97
[표 3-43] 기회발전특구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 후보군 및 측정 방식	101
[표 3-44] 기회발전특구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102
[표 3-45] 지방투자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 후보군 및 측정 방식	106
[표 3-46] 지방투자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 후보군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106
[표 4-1] 전문가 조사 참여 인력 개요	116
[표 4-2]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117
[표 4-3]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118
[표 4-4] 지방시대 도전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119
[표 4-5]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별 지표 후보군 우선순위 검토 결과	120
[표 4-6] 측정타당도 기준 미달 지표	123
[표 4-7] 측정타당도 기준 미달 지표 관련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및 반영 내용	124
[표 4-8] 지방시대 도전과제 정책수단별 지표 후보군 우선순위 검토 결과	126
[표 4-9] 측정타당도 기준 미달 지표	127
[표 4-10] 측정타당도 기준 미달 지표 관련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및 반영 내용	128
[표 5-1] 지방시대 핵심과제 통합 지표체계	131
[표 5-2] 지방시대 도전과제 통합 지표체계	139
[표 5-3] 지방시대 핵심과제 간소화 지표체계	141
[표 5-4] 지방시대 도전과제 간소화 지표체계	144

그림목차

[그림 1-1] 본 연구의 목적	4
[그림 1-2] 본 연구의 흐름	6
[그림 2-1] 국정과제 세부 추진과제의 하위 과제 리스트 작성 예시	10
[그림 2-2]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 개발 대상 과제 선별 절차	12
[그림 4-1] 지표 중요도 산출 공식	113
[그림 4-2] 지표 측정타당도 산출 공식	113
[그림 4-3]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의 확정 과정	114
[그림 4-4]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의 확정 과정	11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선정하였으며, ‘지방시대 본격 추진’을 20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음
 - 지방시대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지방시대위원회 조속 출범’,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업의 지방이전 환경조성’ 등이 포함됨
- 현 정부는 2023년 6월 9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안’)'의 제정하였음
- ‘통합법률안’이 제정됨으로 인해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정목표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상황임
 -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시대라는 거대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와 얼마나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매우 부족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성과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대’ 구현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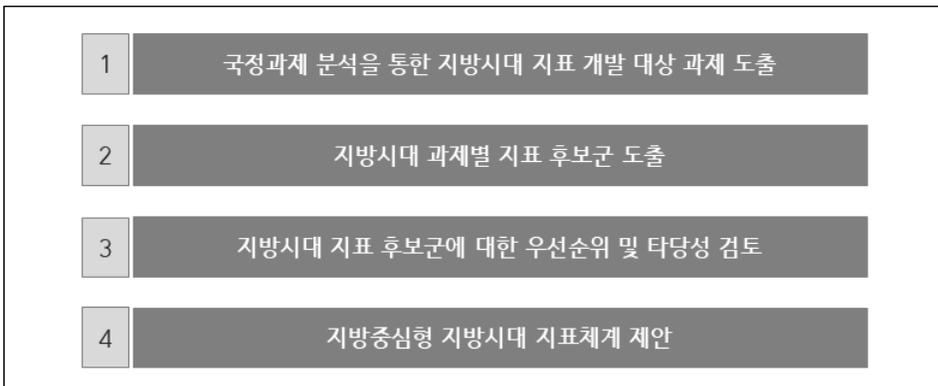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연구 발주처인 부산광역시에 관점을 중심으로 한 지표 개발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시대’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부 추진과제를 분석하여 부산광역시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주력하여 관리하여야 할 과제¹⁾들을 도출하고자 함
- 둘째, 지방시대 지표 개발 대상 과제별로 부산광역시에서 관리되어야 할 지표 후보군들을 개발하고자 함
- 셋째, 지표 후보군들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통해 과제별로 우선시 되어야 할 지표들을 식별하고, 지표에 대한 측정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관점에서 바라본 지방중심형 지방시대 지표 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그림 1-1] 본 연구의 목적



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지방시대 핵심과제’와 ‘지방시대 도전과제’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제2장의 ‘지방시대’ 국정과제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1) 공간 범위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
 -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시대’의 핵심 국정과제 목표 달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공간 범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임
 - 다만, 본 연구의 중점 측정 대상은 부산광역시이므로, 부산광역시를 본 연구의 핵심 공간으로 설정하고, 부산광역시와의 유사 광역지자체에 대한 비교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2) 내용 범위

- 현(現)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시대’의 국정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분석을 통해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 개발 대상 과제 도출
-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 개발 대상 과제별 지표 후보군 개발
- 지방시대 지표 후보군에 대한 전문가 설문 실시
- 지방중심형 지방시대 지표체계 수립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지방시대 지표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국내외 문헌분석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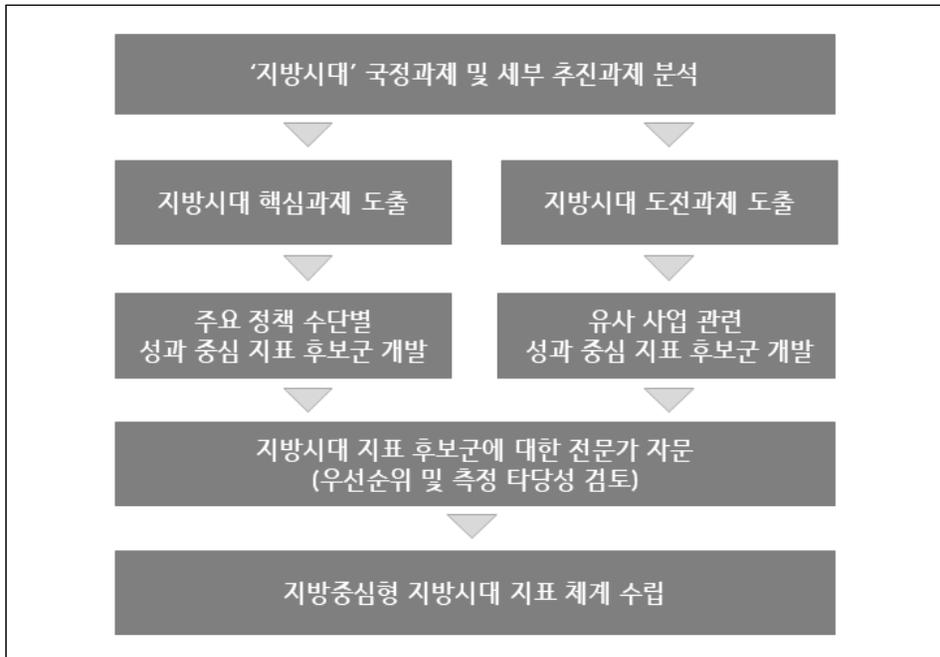
○ 면담조사(또는 설문조사)

- 지방시대 지표 후보군 도출, 지표 선정 및 측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3. 연구흐름

○ 본 연구의 흐름은 [그림 1-2]와 같음

[그림 1-2] 본 연구의 흐름





제2장

「지방시대」 국정과제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지방시대」 국정과제 분석 결과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 국정목표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를 연계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함
- 본 장에서는 현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10대 국정과제와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분석함
 - 첫째, 「지방시대」 국정과제 중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 개발 대상에 적합한 하위 과제를 식별함
 - 둘째, 하위 과제 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표 개발 방향성을 설계함
 - 셋째, 국정과제의 형성 과정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한 지표의 통합적 발굴을 위하여 단일 혹은 복수의 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추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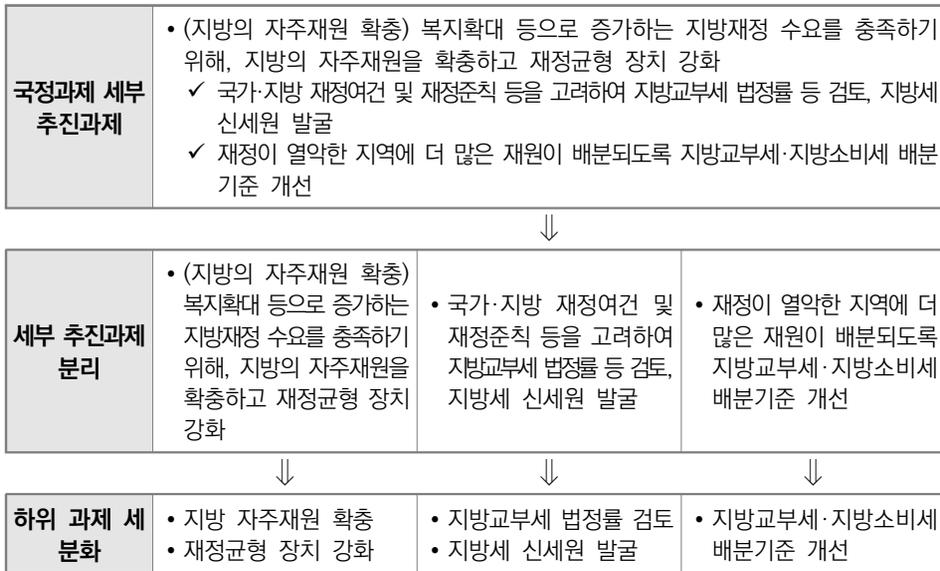
2. 분석 절차

1) 10대 국정과제 세부 추진과제의 하위 과제 리스트 작성

-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10대 국정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는 단일 과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나, 복수의 과제가 하나의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된 경우도 존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과제가 하나의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된 경우,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국정과제 분석 대상 과제 리스트를 작성함

- 예를 들어,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및 지역 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 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이라는 과제는 ①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확대, ②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③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 ④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등 4개 과제로 세분화함
- 또한, 하나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용 간 완전한 중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세부 추진과제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분화 과정을 거침

[그림 2-1] 국정과제 세부 추진과제의 하위 과제 리스트 작성 예시



2) 지방시대 지표 개발 제외 대상의 식별

-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 개발이므로 전체 과제들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이를 지표 개발 대상에서 제외함
-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 개발 대상 과제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중복 과제**) 한 하위 과제의 내용이 다른 하위 과제의 내용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는 지표개발 대상에서 제외함(예. 인구감소에 대한 지역주도의 상향식 대응계획 마련 vs. 지역 주도의 지방 소멸 대응 전략 수립)
- (**제3의 지역 주체 추진과제**) 지방대학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제3의 지역 주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는 지표 개발 대상에서 제외함(예. 지역 대학 내 로컬 크리에이터 과정 신설)
- (**추상적 과제**)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과제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표 개발 대상에서 제외함(예.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 (**부산광역시 제외 과제**) 과제의 대상 지자체의 범위에 부산광역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표 개발 대상에서 제외함(예. 행정수도 세종 완성)
- (**복수 지자체 공동 추진 과제**)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 및 집행하여야 하는 과제로 부산광역시 단독으로 관리할 실효성이 낮은 과제는 지표 개발 대상에서 제외함(예. 초광역산업발전 전략 수립 및 이행)

3) 중앙정부 중심 추진 과제 식별

- 세부 추진과제 중 법 제도의 제·개정, 정책 실행을 위한 공통기준 개발, 정책 추진 모형의 설계 등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이하 '중앙 정부 중심 추진과제'라고 함)를 식별함(예. 국가-시·도-시·군·구 사무 배분기준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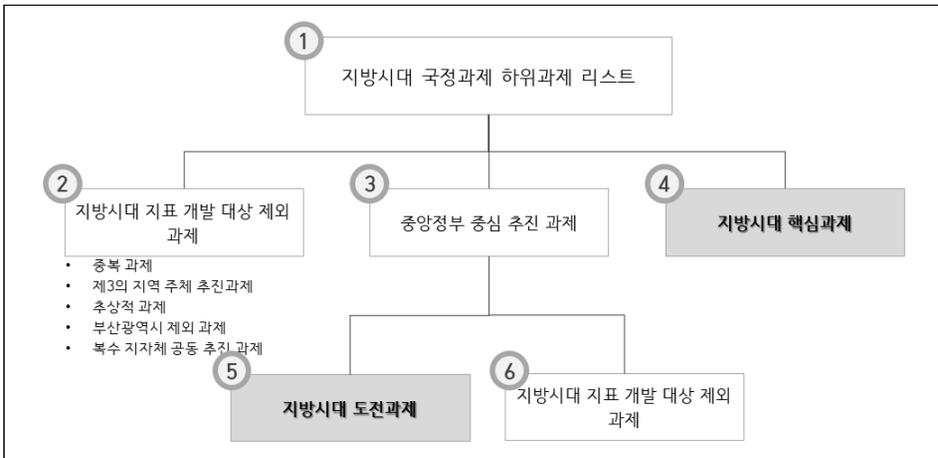
4) 지방시대 핵심과제 및 지방시대 도전과제 리스트 결정

-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 개발 대상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지방시대 핵심과제**) 중앙정부의 별도의 선행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로써 부산광역시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 (**지방시대 도전과제**) 중앙정부의 선행행위가 존재하나, 해당 행위가 종료된

이후 지역에 대한 경제적·재정적 지원이 예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경제적·재정적 자원 획득을 위해 지역의 잠재력을 보여야 하는 하위 과제로서 지역 선정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도전이 필요한 과제

- 지방시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국정과제 하위 과제들 중 제의 기준에 해당하는 과제들과 중앙정부 중심추진과제들을 제외하여 결정함
- 지방시대 도전과제는 중앙정부 중심 추진과제 중 중앙정부의 선행행위가 종료된 후 지역에 대한 경제적·재정적 지원이 예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경제적·재정적 자원 획득을 위해 지역의 잠재력을 보여야 하는 과제들로 결정함

[그림 2-2]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 개발 대상 과제 선별 절차



5) 과제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 및 지표 개발 방향성 설정

- 본 연구에서는 각 과제의 유형별로 지표 개발의 방향성을 차별적으로 설정하고자 함
 - 지방시대 핵심과제의 경우, 지자체의 자체적 추진이 가능한 과제로 성과중심의 지표를 개발함²⁾

2) 성과(performance)라는 용어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연구의 목적, 범위,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김태룡·안희정, 2007; 김규환·남영준,

- 지방시대 도전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와 유사한 사업의 성과를 통해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함

[표 2-1] 과제 유형별 특성 및 지표 개발 방향성 설정

구분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방시대 도전과제
과제의 특성	중앙정부의 선행행위 불요	중앙정부의 선행행위 필요
지표 개발 방향성	성과 중심 지표 개발	유사 사업 성과 중심 지표 개발

6) 지방시대 핵심과제 및 도전과제 키워드 도출

- 국정과제와 그 세부 추진과제의 형성과정은 고도의 정치적 선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황혜신 외, 2022),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세부 추진과제의 내용들은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및 전략 내용 중 일부에 편중되어 있거나 정책 목표 및 전략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위 과제를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적으로 지방시대 핵심과제 및 도전과제들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선정함
- 이와 같이 선정된 키워드별로 지방시대 핵심과제 및 도전과제를 배치하여, 향후 해당 키워드에 해당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표를 통합적으로 발굴함

3. 분석 대상

- 본 장의 분석 대상은 ‘지방시대’ 10대 국정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들(총 66개 과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2]와 같음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도 지방시대 핵심과제의 지표 개발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과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제3장 참조).

[표 2-2] '지방시대' 10대 국정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국정과제	세부 추진과제
6-21-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 기능조정) 보충성 원칙에 따른 국가·시·도·시·군·구 사무 배분기준 보완 및 사무총조사,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이양 기반 마련 • 특례시와 시·군·구에 맞춤형 특례 부여, 자치분권사전협의 근거법을 상향 •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권 확대 및 자치 조직·인사 제도 개선, 계획수립권한 지방이양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이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시범실시 • (주민자치회 개선)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및 지역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 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 (자치경찰권강화) 범정부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후 성과분석·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시행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및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계강화 방안 마련 추진 •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특별자치시·도(제주·강원·세종) 대상 권한이양·특례 부여를 통해 지방주도적 지역발전 모델과 선도적 분권 모델 마련
6-21-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기재부,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주도 기반 목표 설정) 재정자주도 제고를 지방재정 강화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임기 내 적정 수준의 재정자주도 달성 추진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복지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균형 장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 재정여건 및 재정준칙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검토, 지방세 신세원 발굴 ✓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개선 •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및 지역자율사업의 유형 확대(지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점진적으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 •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분석·공개·환류 등 책임성 강화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분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 개선)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 세부기준 도입, 지자체의 비효율적·무분별한 재정 운영에 대한 제재조치 구체화 등 제도 정비

국정과제	세부 추진과제
<p>6-21-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 다양화) ‘(가칭)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여 특구 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유특구 내에는 다양한 대안학교가 함께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관련 규제완화와 함께 재정지원 강화 •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이 함께 협업하여 재원을 공동편성·집행하는 공동사업을 발굴·추진 • (지자체책임 강화)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양성-취업-정주’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중심 창업·산학협력 및 우수유학생 유치 강화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 등 개선, 지역인적자원의 지방공기업 등 채용확대 방안(수도권·비수도권 기관 현황 분석 및 적용방안 강구 등)검토
<p>6-21-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 협력 강화 (행안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역량·경쟁력 제고) 지방 국·과장급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인사교류 확대 지원, 지방연구원 설립 확대 및 지방규제혁신 강화 •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의 정책결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e직접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참여 활성화, 주민조례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실효성 제고 • (지방의회 자율·투명 강화) 지방의회의 견제 역량 제고 및 주민신뢰 확보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활성화,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 • (이장·통장 처우개선)이장·통장 법적근거 마련 및 기본수당 인상 • (초광역지역연합구축지원) ‘(가칭)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특행기관 등)-지자체-초광역지역연합 간 기능·업무 조정방안 마련 및 범부처 현장기반 통합지원(범부처전문가 워킹 그룹을 지자체에 파견하여 중앙-지방메가시티 발전전략 공동수립) • (지자체 간 협력·조정 강화)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약제도 도입·조합 제도 개선, 분쟁조정기구 공정성·전문성 제고 •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중앙지방 협력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간담회, 현장방문국정설명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기제 운영
<p>6-22-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산업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3종특례를 적용하고, 규제특례를 국가에 사후요청시 신속결정 ✓ 공장설립 등 관련 인허가원스톱처리, 산업기반시설 우선설치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협력기업의 동반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조성 •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EU 등 해외선진국과 동등한 투자유치경쟁이 가능하도록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속지원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설계 추진

국정과제	세부 추진과제
<p>6-22-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 • (공공기관 추가이전)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 (혁신도시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교통·의료·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주거·산업·공공시설이 입주 가능한 복합혁신공간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을 구축하여 산학연네트워크 형성 촉진 ✓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구축, 가족동반이주 촉진을 위한 어린이·가족특화시설 건립 등
<p>6-22-117. 지역 맞춤형 창업· 혁신 생태계 조성 (중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혁신거점)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혁신벤처의 성장거점인 「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및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 (지역기업생태계) 지역주력산업(기업)의 전주기 성장경로지원과 「연어형지역인재」에 정착지원 • (지역벤처투자) 지역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혁신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지역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용 • (정책금융지원) 지역주도-중앙지원방식의 정책금융운영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 추진
<p>6-23-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권역별 초광역산업발전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고 권역별 전략산업의 선정·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부지, 군공항종전부지등을활용한지역주도의초대형프로젝트추진 • (강소도시 산업 활성화) 민관이 협력하여 자력경제를 견인하는 투자 창출(‘가칭 강소도시투자유치사업’), 지역주도 위기 예방 및 정부지원 • (혁신거점육성 고도화) 혁신자원 집적도 등을 고려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인프라 확충(신성장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개편) 등 • (지역일자리사업 재구조화) 지역별 인력 수요, 노동상황 등을 반영한 지역 일자리 사업의 확대·개편 등 지역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연계특화사업 신설 등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확대·개편, 고용위기 단계별 지원체계 내실화
<p>6-23-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중기부·행안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대학 내 로컬크리에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실전창업, 인턴십 등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창업 훈련기관 육성 • (로컬브랜드)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동네단위 로컬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 (로컬인프라) 민간주도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네상권발전소, 직(職)·주(住)·락(樂) 공간을 조성하고, 상권기획자·발전기금·민관협업투융자 등 제도도입

국정과제	세부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커뮤니티 기반조성)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참여로컬브랜딩 생활실험 등을 통한 로컬창조커뮤니티 단계적 확산 • (맞춤형종합지원) 초광역권 지역발전 투자협약 활성화 등을 통한 지자체-多부처 간 협력촉진 • (지역특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브랜드화, 청년창업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가 있는 도시재생 추진
6-23-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및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보육·교육·의료·문화분야 등의 특례부여 및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 계획 마련 지원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소멸대응전략을 수립, 국가는지방소멸대응기금(연1조원,10년간10조원)을 지원 • (균형발전지표활용) 지역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종합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균형발전지표의 지속적 발전 및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지표 갱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통계청,시·도등), 지표체계 발전 및 중앙부처 등 활용 확대 지속추진 • (지역공약추진체계) 국정과제 담당 부처 지정 및 (가칭)지역공약이행체계를 구성(지역균형발전거버넌스,지역전문가,지역공약관련부처 및 지자체(역할)부처별 지역공약이행상황 총괄, 세부이행계획 점검 및 개선안 협의·조정 등)하여 반기별로 지역공약 추진현황 점검 • (지역주민의견수렴) 지역순회 공청회, 균형발전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주도형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성 확보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introduce/govVisionList.do>) (검색일 2023. 03. 14)

제2절 「지방시대」 국정과제 분석 결과

1. 지방시대 핵심과제 및 핵심과제 키워드 도출

- 국정목표 ‘지방시대’의 10대 국정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세분화한 결과, 총 120개의 하위 과제가 도출됨
- (지표개발 제외 대상) 120개 하위 과제 중 21개 과제는 제1절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지표 개발 대상에서 제외됨

【표 2-3】 지표개발 대상 제외 하위 과제 리스트

제외 기준	하위 과제
중복 과제 (4개)	재정자주도 제고(‘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중복)/ 권역별 전략산업의 선정·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권역별 초광역산업발전 전략 수립·이행 지원’과 중복)/ 인구감소 관련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 계획 마련(‘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전략 수립’과 중복)/ 균형발전지표체계 발전 및 활용 확대 지속추진(‘균형발전지표의 지속적 발전 및 활용도 제고’와 중복)
제3의 지역 주체 추진과제 (2개)	지역대학중심 창업·산학협력 및 우수유학생 유치 강화/ 지역 대학 내 로컬크리에이터 과정 신설
추상적 과제 (8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지역인재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주민 조례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실효성 제고/ 지방의회 견제 역량 제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전략 수립/ ‘산학 융합지구’ 활성화/ 직(職)·주(住)·락(樂)공간 조성
부산광역시 제외 과제 (5개)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행정수도 세종 완성/ 세종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가칭)강소도시투자 유치사업’/ 강소도시 지역주도 위기 예방
복수 지자체 공동 추진 과제 (2개)	지역주도의 초광역 단위 초대형프로젝트 추진/ 초광역권 지역발전 투자 협약 활성화

- (중앙정부 중심 추진과제) 120개 하위 과제 중 74개 과제는 중앙정부 중심 추진 과제에 해당함
 - 이 중 향후 부산광역시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시대 도전과제를 선정할 예정임

[표 2-4] 중앙정부 중심 추진 하위 과제 리스트

제외 기준	하위 과제
<p>중앙정부 중심 추진과제 (74개)</p>	<p>국가-시·도-시·군·구 사무 배분기준 보완/ 사무총조사/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특례시와 시·군·구에 맞춤형 특례 부여/ 자치분권사전협의 근거법률 상향/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 조직·인사 제도 개선/ 계획수립권한 지방이양/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선택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 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전면 시행/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특별자치시·도 대상 권한이양·특례 부여/ 재정균형 장치 강화/ 지방교부세 법정률 검토/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개선/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및 지역자율사업의 유형 확대/ 지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 통합관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지방비 부담 수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강화/ 지방비 부담 수반 국고보조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지자체 의견 적극 수렴/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 세부기준 도입/ 지자체의 비효율적·무분별한 재정 운영에 대한 제재조치 구체화/ (가칭)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 교육자유특구 내 설립·운영 관련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 지역인적자원의 지방공기업 등 채용확대 검토/ '주민e직접'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참여 활성화/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활성화 /이장·통장 법적근거 마련/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 '(가칭)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특행기관 등)-지자체-초광역지역연합 간 기능·업무 조정방안 마련/ 초광역지역연합에 대한 범부처 현장기반 통합지원/ 지자체 간 협약제도 도입/ 지자체 조합제도 개선/ 지자체 간 분쟁조정기구 공정성·전문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간담회, 현장방문국정설명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기제 운영/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세제 혜택/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3종특례 적용 및 사후요청에 대한 신속결정/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인허가원스톱처리/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산업기반시설 우선설치/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지원 펀드조성/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속지원/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의 지방투자 인센티브 설계 추진/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지역혁신벤처펀드' 조성/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용/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의 정책금융운영 추진방안 검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 권역별 초광역산업 발전전략 수립·이행 지원/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개편/ 지역 일자리 사업의 확대·개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확대·개편/ 고용위기 단계별 지원체계 내실화/ 동네상권발전소/ 상권기회자·발전기금·민관협업 투융자 등 제도도입/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및 재정 지원/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특례 부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균형발전지표의 지속적 발전 및 활용도 제고/ 균형발전지표 관련 협력체계 구축/ 국정과제 담당 부처 지정 및 (가칭)지역공약이행체계 구성/ 지역순회 공청회, 균형발전박람회 운영</p>

- 총 120개의 하위 과제 중 21개의 지표개발 제외 대상 과제 및 74개의 중앙정부 중심 추진과제를 제외한 25개 하위 과제가 중앙정부의 별도의 선행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으로써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부산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도출됨

[표 2-5] 지방시대 핵심과제 리스트

10대 국정과제	지방시대 핵심과제
6-21-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확대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6-21-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기재부,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 집행결과 분석, 공개, 환류
6-21-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공동재원 활용 지역인재양성사업 추진
6-21-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장급 지방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국·과장급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 지방연구원 설립 • 지방규제혁신 강화 •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
6-22-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 •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복합혁신공간(주거·산업·공공시설 입주) 및 산학연네트워크 공간 조성(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 • 혁신도시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구축 • 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시설 건립
6-22-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거점 조성(「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등) • 지역주력산업(기업)의 전주기 성장경로지원 • 「연어형지역인재」에 정착지원
6-23-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인프라 확충

10대 국정과제	지방시대 핵심과제
6-23-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훈련기관 육성 • 동네단위 로컬브랜드 구축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 주민참여를 통한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발굴 • 주민참여로컬브랜딩 아이디어 구체적 사업 연계 지원(생활실험, 학습, 컨설팅 등) • 지역특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 청년창업지원

○ 부산광역시 관점에서 25개의 지방시대 핵심과제의 내용을 재구성하면 [표 2-6]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2-6] 부산광역시 관점에서 재구성한 지방시대 핵심과제

연번	지방시대 핵심과제	부산광역시 관점에서의 접근
1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확대	•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확대
2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 부산광역시-부산교육청 간 인사교류 활성화
3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 부산광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4	•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 집행결과 분석, 공개, 환류	• 부산광역시 현금성 복지사업 집행결과 분석, 공개, 환류
5	•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공동재원 활용 지역인재양성사업 발굴·추진	• 부산광역시·부산교육청·부산 내 지방대학 공동재원 활용 지역인재양성사업 발굴·추진
6	• 국·과장급 지방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부산광역시 국·과장급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7	• 국·과장급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 타 지자체와의 국과장급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8	• 지방연구원 설립	• 부산연구원 역량 강화
9	• 지방규제혁신 강화	• 부산광역시 규제 혁신
10	•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	• 부산광역시 의정활동 정보공개
11	•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	• 부산광역시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
12	•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복합혁신공간(주거·산업·공공시설 입주) 및 산학연네트워크 공간 조성(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 오피스 등)	• 부산광역시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현(現)센텀2지구) 내 복합혁신공간(주거·산업·공공시설 입주) 및 산학연네트워크 공간 조성(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

연번	지방시대 핵심과제	부산광역시 관점에서의 접근
13	• 혁신도시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구축	• 부산혁신도시 공동주거지(남구 대연동)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 결합 공간 조성
14	• 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시설 건립	• 부산혁신도시 공동주거지(남구 대연동) 어린이·가족특화시설 건립
15	•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거점 조성(「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혁신파크」등)	• 부산광역시 내 스타트업·혁신벤처의 성장거점 조성(「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혁신파크」등)
16	• 지역주력산업(기업)의 전주기 성장경로지원	• 부산광역시 지역주력산업(기업) 전주기 성장경로 지원
17	• 「연어형지역인재」에 정착지원	• 「연어형지역인재」 정착지원
18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유망신산업 거점 지역 인프라 확충	• 부산광역시 국가혁신클러스터(부산 해양 ICT 융합 클러스터) 육성
19	• 창업 훈련기관 육성	• 부산광역시 내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
20	• 동네단위 로컬브랜드 구축	• 부산광역시 동네단위 로컬브랜드 개발 지원
21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 부산광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지원
22	• 주민참여를 통한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발굴	• 주민참여를 통한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발굴
23	• 주민참여로컬브랜딩 아이디어 구체적 사업 연계 지원(생활실험, 학습, 컨설팅 등)	• 주민참여로컬브랜딩 아이디어 구체적 사업 연계 지원(생활실험, 학습, 컨설팅 등)
24	• 지역특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 지역특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25	• 청년창업지원	• 부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 총 25개의 지방시대 핵심과제의 내용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는 ① 주민자치 강화, ②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 ③ 지방재정 자립, ④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⑤ 지방행정역량 강화, ⑥ 지역기업 육성, ⑦ 지역상권 육성, ⑧ 지역인재 양성, ⑨ 지역혁신 거점 개발 등 총 9개임
- 9대 키워드 별로 지방시대 핵심과제를 재배치하면 [표 2-7]과 같음

[표 2-7] 9대 키워드별 지방시대 핵심과제

구분	9대 키워드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방자치 역량 강화	주민자치 강화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확대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지방재정 자립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 집행결과 분석, 공개, 환류 •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
	지방행정 역량 강화	• 국·과장급 지방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국·과장급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 지방연구원 설립
지역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기업 육성	• 지방규제혁신 강화 • 지역주력산업(기업)의 전주기 성장경로지원
	지역상권 육성	• 동네단위 로컬브랜드 구축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 주민참여를 통한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발굴 • 주민참여로컬브랜딩 아이디어 구체적 사업 연계 지원 (생활실험, 학습, 컨설팅 등) • 지역특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지역인재 양성	•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공동재원 활용 지역인재양성사업 발굴·추진 • 「연어형지역인재」에 정착지원 • 창업 훈련기관 육성 • 청년창업지원
	지역혁신 거점 개발	•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 •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복합혁신공간(주거·산업· 공공시설) 및 산학연테크워크 공간 조성(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 • 혁신도시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 혁신센터 구축 • 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시설 건립 •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거점 조성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인프라 확충

2. 지방시대 도전과제 및 도전과제 키워드 도출

- 총 74개의 중앙정부 중심 추진과제 중 중앙정부의 선행행위가 종료된 이후 지역에 대한 경제적·재정적 지원이 예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경제적·재정적 자원 획득을 위해 지역의 잠재력을 보여야 하는 하위 과제는 총 14개임
- 위 14개 과제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적·재정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총 4개의 핵심 사업 키워드는 [표 2-8]과 같음
 - 즉, 지방시대 도전과제 키워드는 ① 교육자유특구, ② 기회발전특구, ③ 지방투자,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임

[표 2-8] 지방시대 도전과제 리스트

지방시대 도전과제	도전과제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 • 교육자유특구 내 설립·운영 관련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강화 	교육자유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세제 혜택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3종 특례 적용 및 사후요청에 대한 신속결정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인허가원스톱처리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산업기반시설 우선설치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지원 펀드조성 	기회발전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속지원 •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의 지방투자 인센티브 설계 추진 • ‘지역혁신벤처펀드’ 조성 •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용 	지방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3장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 개발

제1절 지표 개발 개요

제2절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설계

제3절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설계

제1절 지표 개발 개요

1. 지표 개발 방향

- 제2장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는 ‘지방시대 핵심과제’와 ‘지방시대 도전과제’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됨
 -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방시대 9대 키워드 및 각 키워드별 국정과제 하위 과제들을 고려하여 성과중심의 지표를 개발함
 - (지방시대 도전과제) 4대 키워드와 유사한 사업의 성과를 통해 나타난 지방 자치단체의 역량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함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타 지자체와 부산광역시와의 비교 분석에 있으므로, 지표의 명확성³⁾과 측정용이성⁴⁾을 기준으로 지표를 개발함
 -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 중 명확성 및 측정가능성이 높은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함
 - 단, 질적 지표 중 지표 선정의 필요성이 높으며, 측정가능성 및 명확성이 높고, 제3자에 의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표로 포함할지에 대해 검토함

3) 지표의 명확성(specificity)은 제3자가 지표의 내용, 활용 데이터, 측정산식, 측정대상기간 등의 명확성을 의미함

4) 본 연구에서의 측정용이성은 측정가능성(measurability)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며, 측정 가능한 데이터의 존재, 데이터 수집 및 생산 가능성,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적정성 등을 의미함

2.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설계 개요

- (9대 키워드별 주요 정책 수단 식별) 9대 키워드별로 재분류된 하위 과제들의 내용을 통해 현 정부가 중장기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수단을 구체화함
 - 예를 들어, 국정과제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9대 키워드 중 하나인 ‘주민자치 강화’는 그 자체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현 정부가 현 정부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정책 목표에 해당함
 - ‘주민자치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현 정부가 하위 과제로 제시한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확대’의 주요 정책 수단은 ‘주민자치회’임
- (정책 수단 성과지표 후보군 도출) 선행 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측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단일 또는 복수의 정책 수단에 대한 성과지표를 도출한 후, 지표 후보군을 작성함
 - 원칙적으로 각 정책 수단별로 성과지표를 도출하나, 서로 다른 정책 수단일 지라도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가 중복될 경우에는 복수의 정책 수단의 성과지표를 통합하여 도출함
 - 정책 수단의 성과는 크게 산출(output) 중심의 지표와 결과(outcome) 중심의 지표로 측정될 수 있음
 - 정책 수단이 수행된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정책 수단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책 수단의 궁극적 성과보다 이행 그 자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물인 산출 중심의 지표를 사용함
 - 정책수단의 수행 과정 그 자체보다는 정책 목표 달성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우, 정책 수단을 실행한 후 충분한 기간이 지나 정책 대상 집단의 의미 있는 행태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책수단의 이행으로 인한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 중심의 지표를 사용함

3.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설계 개요

- (유사 사업 식별) 지방시대 도전과제에 해당하는 핵심 사업의 지표를 설계하기 위해 각 도전과제 키워드에 해당하는 핵심 사업들과 유사한 사업들을 식별함
 - 예를 들어,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정 구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 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 또는 그 추진 사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중심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과 유사함(박상수·허원제, 2022)
- (유사 사업 성과 요인) 지방시대 도전과제 키워드에 해당하는 핵심 사업들과 유사한 사업에서 목표했던 했던 성과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통해 지방시대 도전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특구 사업은 지정 구역 내 기업 유치 및 성장, 지정 구역이 속한 지역의 삶의 질 등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목적으로 수행됨
 - 지정 구역 지정 이후 얼마나 많은 기업이 유치되었고, 그 기업들의 매출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의 일자리, 소득, 인구규모 등이 지정 이전에 비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통해 해당 지역의 역량을 가늠해볼 수 있음
- (지역 역량 지표 후보군 도출) 위에서 언급한 유사 사업 성과 중심으로 지역 역량 지표 후보군을 도출함
 - 예를 들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 역량 지표 후보로는 기존 유사 사업에서의 ‘기업 유치 수’, ‘유치 기업 매출 증감률’, 지정 지역의 ‘고용 증가율’, ‘GRDP 증가율’, ‘인구 증가율’ 등을 들 수 있음

제2절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설계

1. 9대 키워드별 주요 정책 수단 식별

1) 키워드 1. 주민자치 강화

- 주민자치란,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 과정에 적극적·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원리로,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원리를 표현하는 개념임(김영인, 2005; 이규환, 2006: 89)
- 주민자치는 정치적 측면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며,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기반을 강화시키고, 행정적 측면에서 지방행정에 필요한 적실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김필두·류영아, 2008)
- 지방시대 핵심과제 중 주민자치 강화와 관련된 하위 과제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확대’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수단은 ‘주민자치회’임
-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 단계로, 궁극적인 결과의 달성보다는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산출 중심의 지표 개발이 적절함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13년 31개 읍·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2021년 12월 기준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 1,013개 읍·면·동에서 실시 중임(행정안전부, 2022.01.12.)

2) 키워드 2.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

- 교육자치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찾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일정 지역의 주체들이 지역 내 교육과 관련된 사안을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금창호 외, 2011)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반자치와 지방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실시된 이래로 양자에 대한 통합 및 연계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금창호·이지혜, 2015)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나, 노무현 정부 이후 교육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그 추진 단계의 하나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로 교육 사무에 대한 강한 추진력이 담보되며, 교육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임(금창호·이지혜, 2015)
- 지방시대 핵심과제 중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와 관련된 하위 과제는 ‘지방자치 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이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수단임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는 궁극적인 결과(outcome)의 달성보다는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output)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산출 중심의 지표 개발이 적절함

3) 키워드 3. 지방재정 자립

- 현 정부는 지방분권에서 재정분권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지방재정 자립도 증진을 제안하고 있으며, 2017년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년 7:3으로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할 것을 제시함(이상훈·김경민, 2021)
- 지방 재정자립 강화는 국세, 지방세, 국고보조금 등의 합리적 개선과 재원이양, 자주재원의 확충 등을 통해 가능함
- 지방시대 핵심과제 중 지방재정 자립 또는 재정 분권과 관련된 하위 과제는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이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자립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수단임

-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은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output)이 생산되는가보다는 궁극적으로 자주재원이 얼마나 확충되었는지 즉, 결과(outcome)의 달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의 즉각적 결과물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어 산출 중심의 지표도 추가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산출 및 결과 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음

4) 키워드 4.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투명성은 조직 내부 업무나 성과를 외부 행위자가 감시·평가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을 의미하며(Grimmelikhuijsen, 2010), 공공부문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정보에 얼마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임
-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는 정부 보유 정보에 대한 접근의 허용, 개방형 데이터의 확대, 시민 참여를 통한 공개 예산 책정 등이 있음
- 지방시대 핵심과제 중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와 관련된 하위 과제는 ‘정보공개’이며, 그 정보 공개 대상은 현금성 복지사업 및 의정활동임
- 해당 하위과제는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 집행결과의 분석, 공개, 환류와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 ‘정보공개(현금성 복지사업, 의정활동)’는 궁극적인 결과(outcome)의 달성보다는 양적 또는 질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적절한 산출(output)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산출 중심의 지표 개발이 적절함

5) 키워드 5. 지방행정역량 강화

- 역량이란 특정 환경이나 업무에서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개인의 내적 특성

및 의지를 내포하는 개념(이재성·임승빈, 2004; 홍준현, 2009 재인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은 지방자치의 이념 및 제도를 스스로 실현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지자체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홍준현, 2009)

- 지방행정역량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지자체의 역량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을 제시한 바 있으며 ‘조직의 인적자원 역량’을 공통적으로 활용함
 - 지자체의 역량을 조직구성원, 조직구조, 조직문화 영역으로 분류하는 연구(김병국·권오철, 1999), 내부역량인 인적 역량(업무수행능력, 의지, 태도)과 물질 역량(재정, 조직)과 구조적 요인으로서의 외부 역량(정치, 문화, 경제, 사회)으로 구분하는 연구(소순창, 2006) 등 대동소이한 분류를 활용하고 있음
 - 지역 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중앙-지자체와 지자체 간 인사교류 제도 강화를 통해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 교육 부족으로 인해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지적하에, 개방형 직위제, 지방전문경력관, 전보제도, 인사교류⁵⁾ 등의 제도개선이 제안되어 왔음(최용환, 2020)
-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인력들 중에서도 주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이 주요한 역량 및 전문성으로 인식되는 하위공무원과 달리, 업무조정능력, 대외설득능력, 적극적 추진능력 등 종합적 조정능력이 전문성 혹은 전문역량으로 인식됨(최병대, 2003)
 - 따라서 고위공무원의 직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조정을 위한 인사교류 등의 지원이 필요함
- 한편,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의 특정 요구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역 문제를 연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등 지방행정역량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5)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규정되어 있음

- 지방시대 핵심과제 중 지방행정역량 강화와 관련된 하위 과제는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지방연구원 설립’ 등이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수단임
 - 특히 고위공무원 관련 하위과제는 국·과장급 지방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시행, 국·과장급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 지방연구원 설립의 경우에는 지방연구원의 설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연구원이 실제로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지방연구원 육성’으로 확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높음
-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구성하는 세부 정책수단들의 성과측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음
 -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과 ‘고위공무원 인사교류’는 궁극적인 결과(outcome)의 달성보다는 고위공무원들이 양적·질적으로 얼마나 적절한 교육을 받으며, 고위공무원 간 인사교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적절한 산출(output)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산출 중심의 지표 개발이 적절함
 - 반면, ‘지방연구원 육성’은 지방연구원 설립 및 육성을 통해 지방행정역량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즉 궁극적인 결과(outcome)의 달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나, 적절한 산출(output)이 생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표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음

6) 키워드 6. 지역기업 육성

- 지역기업 육성은 2000년대 이후 지역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전보다 더 강조되기 시작함
 -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지역 내 일자리의 감소는 지역의 인구유출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기업 및 산업의 육성은

지방시대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이른바 ‘지역주력산업육성시책’은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 자치단체별 주력산업 설정과 예산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신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이우배· 황중환, 2017)
 - 특히 지역주력산업육성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 제품의 판매를 통한 매출과 고용의 창출이라는 전반적인 단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이우배· 황중환, 2017)
- 지방시대 핵심과제 중 지역기업 육성과 관련된 하위 과제는 지방규제혁신 강화와 지역주력산업의 전주기 성장경로 지원 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수단은 ‘규제혁신’과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임
- ‘지역기업 육성’을 구성하는 세부 정책 수단들의 성과측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음
 - ‘규제혁신’은 현 시점에서 궁극적인 결과(outcome)의 달성보다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얼마나 혁신했는지, 즉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output)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산출 중심의 지표 개발이 적절함
 -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은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output)이 생산되는가 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실제 지역주력산업 및 기업이 얼마나 육성되었는지, 즉 궁극적인 결과(outcome)의 달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이 적절함

7) 키워드 7. 지역상권 육성

-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의미함(「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상권단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

되고 있으며 ‘상권 활성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임(홍하연, 2022)

- 첫째, 상권 단위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기보다 개별 소상공인 또는 개별 점포에 대한 지원이 대다수임
- 둘째, 기존 상인에 대한 지원에 머물러 창의적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창업유도 및 경쟁력 확보가 미흡함
- 셋째, 축제 등 단기성 사업이 대다수이며 소비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 중심으로 상권이 구성되어 독창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짐

-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로컬브랜드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공간적 측면에서 ‘다른 상권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상권’이라 할 수 있고, 행위적 측면에서 ‘상권 내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혹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현직인이 주변 영업 점포와 차별화하기 위한 콘텐츠를 가지고 영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홍하연, 2022)
- 따라서 기존의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로컬브랜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상권과 차별화된 창의적이며 독창성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지역주민 등이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한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방시대 핵심과제 중 지역상권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은 ‘로컬브랜드 육성’임
 -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한 하위 과제는 ‘동네단위 로컬브랜드 구축’,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주민참여를 통한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발굴’, ‘주민참여로컬브랜딩 아이디어 구체적 사업 연계 지원(생활실험, 학습, 컨설팅 등)’, ‘지역특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임
- ‘로컬브랜드 육성’은 도입 초기 단계로 현 시점에서 궁극적인 결과(outcome)의 달성보다는 관련 제도에 대한 관계자 참여유도, 제도의 단계적 확산, 아이디어 연계 등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output)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산출 중심의 지표 개발이 적절함

8) 키워드 8. 지역인재 양성

- 지역인재양성은 지역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민간부문을 포함한 지역 내 인재 육성 관련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재를 육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네트워크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체계적 노력임(홍영란 외 3, 2012;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 산업의 자원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국가와 지자체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방시대 핵심과제 중 지역인재 양성의 정책수단은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 청년창업지원 등 4가지임
 -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은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 등 지역의 경제·산업체계를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인재양성 체계 구축의 목적과 관련 있는 정책수단임
 -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은 지방소멸위기지역 내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의 유입을 유도 후 안정적 정착이 가능한 창업지원 사업의 정책수단임
 -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 및 ‘청년창업지원’은 각각 창업과 소상공인 혁신을 위한 전문훈련기관 육성,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수단들임
- ‘지역인재 양성’을 구성하는 세부 정책 수단들의 성과측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음
 -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은 도입 초기 단계로 플랫폼 구축여부, 핵심 분야 선정여부, 지역 내 대학 연계 사업 건수 등 궁극적인 결과(outcome)의 달성보다는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output)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산출 중심의 지표 개발이 적절함

-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은 도입 초기 단계로 전담 멘토 배정, 1인당 지원 금액 등 궁극적인 결과(outcome)의 달성보다는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output)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산출 중심의 지표 개발이 적절함
-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은 창업전문훈련기관 수, 전문훈련프로그램 수 등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output)이 생산되는가보다는 궁극적인 결과(outcome)의 달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이 적절함
- ‘청년창업지원’은 실제 청년창업지원 정책의 최종적인 효과는 증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궁극적인 결과(outcome)의 달성보다는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output)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어, 산출 중심의 지표 개발이 적절함

9) 키워드 9. 지역혁신 거점 개발

- 지역혁신 거점개발은 경제의 재도약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중심 발전구조에서 벗어나 개개 지역이 혁신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일체의 시도를 의미함(류승한 외, 2017; 국토연구원)
 - 국가 주도의 산업단지 개발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하고 종전의 대량생산, 시설의 입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고자 함
 - 특히 공간에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질적 문제 해결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방시대 핵심과제 중 지역혁신 거점 개발의 정책수단은 혁신도시, 스타트업·혁신벤처성장거점,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 등 3가지임
 -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되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준비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도 추가로 이전하는 방안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수단임

- ‘스타트업·혁신벤처성장거점’은 스타트업과 혁신벤처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임
 -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기능강화 등 혁신역량 강화 등 유망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거점지역을 조성하는 정책수단임
- ‘지역혁신 거점 개발’을 구성하는 세부 정책 수단들의 성과측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음
- ‘혁신도시’는 이전의 효과와 다양한 성과가 누적되어 있으므로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output)이 생산되는가보다는 궁극적인 결과(outcome)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 ‘스타트업·혁신벤처성장거점’과 관련된 정책 사업은 상당히 다양하므로, 관련 정책 사업의 도입 시기를 고려하여 도입 초기 단계인 경우 산출 중심의 지표 개발을, 도입 중·후기 단계인 경우에는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이 적절함
 -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과 관련된 정책 사업은 상당히 다양하므로, 관련 정책 사업의 도입 시기를 고려하여 도입 초기 단계인 경우 산출 중심의 지표 개발을, 도입 중·후기 단계인 경우에는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이 적절함

[표 3-1] 키워드별 주요 정책 수단의 특성 및 성과 기준

연번	키워드	하위 과제	주요 정책 수단	성과기준
1	주민자치 강화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확대	• 주민자치회	산출
2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산출
3	지방재정 자립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 수입) 확충	산출 및 결과
4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 집행결과 분석, 공개, 환류 •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	• 정보공개(현금성 복지사업, 의정활동)	산출
5	지방행정 역량 강화	• 국·과장급 지방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산출

연번	키워드	하위 과제	주요 정책 수단	성과기준
		• 국·과장급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산출
		• 지방연구원 설립	• 지방연구원 육성(설립 포함)	산출 및 결과
6	지역기업 육성	• 지방규제혁신 강화	• 규제혁신	산출
		• 지역주력산업(기업)의 전주기 성장경로 지원	•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	결과
7	지역상권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단위 로컬브랜드 구축 • 주민참여를 통한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발굴 • 주민참여로컬브랜딩 아이디어 구체적 사업 연계 지원(생활실험, 학습, 컨설팅 등) • 지역특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 로컬브랜드 육성	산출
8	지역인재 양성	•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공동재원 활용 지역인재양성사업 발굴·추진	•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	산출
		• 「연어형지역인재」에 정착지원	• 연어형지역인재 정착지원	산출
		•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	•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	결과
		• 청년창업 지원	• 청년창업 지원	산출
9	지역혁신 거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 •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복합혁신 공간(주거·산업·공공시설) 및 산학연 테크워크 공간 조성(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 • 혁신도시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구축 • 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시설 건립 	• 혁신도시	결과
		•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거점 조성(「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혁신파크」 등)	•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 거점	산출 또는 결과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인프라 확충	•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	산출 또는 결과

2. 정책수단별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후보군

1)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의 성과의 측정과 관련 연구로는 김필두(2014), 김필두·한부영(2017), 박상범·복문수(2019), 최인수 외(2020) 등이 있음
- 김필두(2014)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구축(투입)’, ‘운영효율성(과정)’, ‘운영성과(산출)’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기반구축(투입)에 대한 성과분석 기준으로는 ‘주민자치회의 모형, 조례의 제정, 조례의 내용’ 등을 제시함
 - 운영효율성(과정)에 대한 성과분석 기준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 주민자치사업, 협의협력사업, 위탁사업, 수입, 주민자치회 운영 경비, 사업예산, 회계관리, 주민참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제시함
 - 운영성과(산출)에 대한 성과분석 기준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의 만족도, 주민의 만족도, 공무원의 만족도, 사업의 성과(협력사업/위탁사업/주민자치사업)’ 등을 제시하였음
 - 다양한 기준들 중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관련된 내용은 운영효율성(과정) 기준 중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 주민참여,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주민자치사업, 협의협력사업, 위탁사업’, 운영성과(산출) 기준 중 ‘주민자치위원의 만족도, 주민의 만족도, 공무원의 만족도, 사업의 성과(협력사업/위탁사업/주민자치사업)’ 등임
 - 다만, 위 연구는 주민자치회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의 즉각적인 성과인 ‘주민자치회 전환률,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비율, 주민자치회 주민 참여 수, 협력·위탁·주민자치 사업 수행 건수’ 등의 산출 중심 측정 지표 개발이 가능함
- 김필두·한부영(2017)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및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주민자치회 인지도’ 및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인식’을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성과를 평가함

- 주민자치회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지도,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함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주민자치회의 변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주민의 관심과 참여 변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마을의 변화’에 대해 조사함
 - 위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인식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됨
- 박상범·복문수(2019)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측정지표로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 주민 화합, 지역발전’ 등을 제시함
- 위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수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인식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됨
- 최인수 외(2020)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평가 영역을 ‘근린자치 기반 조성’,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의 목적 달성’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이 중 ‘주민자치회 운영의 목적 달성’이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연관됨
- 주민자치회 운영의 목적 달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 건수, 주민총회 주민 참여인원,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 분과위원회 주민 참여인원’ 등의 지표를 제시함
 - 위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목적 달성 수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객관적 정보에 대해 묻는 내용으로 구성됨(예. 회차별 주민총회 참여자 수)
-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주민자치회의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측정에 있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인식 데이터를 활용한 주관적 성과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표개발과

유사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광역 단위에서 비교가 가능한 주민자치회의 산출 중심 성과지표⁶⁾와 그 측정 방식을 구성하면 [표 3-2]와 같음

[표 3-2] 주민자치회 지표 및 측정 방식

성과지표	측정 방식
주민자치회 전환률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읍·면·동 개수/ 총 읍·면·동 개수 * 100(%)
주민자치 조례 제정률	•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한 읍·면·동 개수/ 총 읍·면·동 개수 * 100(%)
주민총회 평균 개최 횟수	• \sum (당해 연도 읍·면·동별 주민총회 개최 횟수)/ 총 읍·면·동 개수
주민총회 평균 참여 주민 수	• \sum (당해 연도 읍·면·동 주민총회 1회당 평균 참석 주민 수)/ 총 읍·면·동 개수
주민자치회 평균 추진 사업 건수	• \sum (당해 연도 읍·면·동 주민자치회별 협력·위탁·주민자치 사업 수행 건수)/ 총 읍·면·동 개수
주민자치위원 만족도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주민자치위원들이 만족하는 정도
공무원 만족도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읍·면·동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정도

○ 한편, 주민자치회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 ‘주민자치회 전환률’과 ‘주민자치 조례 제정률’의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민자치위원 만족도’와 ‘공무원 만족도’의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표의 명확성은 제3자에 의한 주관적 해석에 의해 지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높음’,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대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적은 개념을

6) 앞서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 단계로, 궁극적인 결과의 달성보다는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중간’, 생소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큰 경우에는 ‘낮음’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표의 측정용이성은 데이터가 이미 공개되어 있어, 데이터의 수집 또는 생산에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높음’, 설문조사 실시 등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낮음’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3-3] 주민자치회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주민자치회 전환률	높음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읍·면·동 개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높음
		• 총 읍·면·동 개수(공통)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높음
주민자치 조례 제정률	높음	•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한 읍·면·동 개수	국가법령정보센터	높음
주민총회 평균 개최 횟수	높음	• 당해 연도 읍·면·동별 주민총회 개최 횟수	설문조사	낮음
주민총회 평균 참여 주민 수	높음	• 당해 연도 읍·면·동 주민총회 1회당 평균 참석 주민 수	설문조사	낮음
주민자치회 평균 추진 사업 건수	중간	• 당해 연도 읍·면·동 주민자치회별 협력·위탁·주민자치 사업 수행 건수	설문조사	낮음
주민자치위원 만족도	중간	• 주민자치위원 대상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데이터	설문조사	낮음
공무원 만족도	중간	• 지방공무원 대상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데이터	설문조사	낮음

2)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의 성과 측정 관련 연구로는 이상호·박수정(2019), 최정연·남창우(2022) 등이 있음

- 이상호·박수정(2019)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실제 정책 연계 및 협력 사례 현황을 실무 담당자 면담을 통해 제도적 측면과 정책 집행과정 측면에서 분석함
 - 해당 연구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으나, 평생교육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교육공동체 등 간 활발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본 연구 지표개발에 적용 가능함
 - 예컨대, 정책 수립 및 집행과 연계 유지를 위한 광역시-교육청-진흥원-학습관 간 업무협의회 개최 횟수, 지속성, 참여도 등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최정연·남창우(2022)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정책사업 공동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관계 구성원 인식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 문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정책사업 연계·협력 인식을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운영, 인사교류, 정책사업 연계·협력 인식 3가지 범주,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사교류 실태에 대한 인식, 인사교류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인식, 인사교류의 쟁점사항, 구성원 간 접촉 횟수, 구성원과 접촉한 주된 사유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인사교류가 전무한 실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43.2%)이 높았고, 3년 이내로 인사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48.6%)는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등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성과지표 자체를 다룬 연구보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에 대한 인식 측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인식 데이터를 활용한 주관적 성과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더욱이 현재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인사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인사교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보다, 향후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준비 과정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표개발과 유사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광역 단위에서 비교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의 산출 중심 성과 지표와 그 측정 방식을 구성하면 [표 3-4]와 같음

[표 3-4]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지표 측정 방식

성과지표	측정 방식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횟수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횟수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만족도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내용 만족도
인사교류 건수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건수
인사교류에 대한 교육청 공무원 만족도	• 인사교류 방식, 횟수, 기간, 복귀 후 처우 등 운영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정도
인사교류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만족도	• 인사교류 방식, 횟수, 기간, 복귀 후 처우 등 운영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정도

- 한편,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5]와 같음

[표 3-5]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교육행정협의회 평균 운영 횟수	높음	•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횟수	각 지자체	낮음*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만족도	중간	•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내용 만족도	설문조사	낮음
인사교류 건수	높음	•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자료	각 지자체	낮음*

7) 앞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는 시범사업 단계로, 궁극적인 결과의 달성보다는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인사교류에 대한 교육청 공무원 만족도	중간	• 인사교류 방식, 횟수, 기간 등 운영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들 대상 만족도 조사 데이터	설문조사	낮음
인사교류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만족도	중간	• 인사교류 방식, 횟수, 기간 등 운영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대상 만족도 조사 데이터	설문조사	낮음

* 개별 지자체에 대한 측정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 가능성이 높으나, 지자체 간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별도의 자료 수집 절차가 필요함

3)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유태현(2017), 김남욱(2018) 등이 있음
- 유태현(2017)은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지방의 중앙의존성을 낮추고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제시함
 -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 요율 책정 현실화, 관할 지방공기업 수익증대 방안 모색, 불필요한 각종 시설의 과감한 정비,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경영마인드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강화 방안으로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운용 방식 개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공동이용 방식의 활성화, 국세의 지방 이양,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강화,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 발굴과 과세 연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정비 등이 필요함
 - 더불어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이해 당사자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요구됨
- 김남욱(2018)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지방재정 수요 증가가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지방세외수입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조례 제정, 인공지능·

빅데이터·드론 등을 통한 지방세외수입 신세원의 발굴, 지방세외수입의 전담 부서 신설과 전문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함

-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독촉, 압류, 공매 등)를 수행하고, 징수율 제고가 요구되나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위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측정할 수 있는 산출 및 결과 성과지표⁸⁾와 그 측정 방식을 구성하면 [표 3-6]과 같음

[표 3-6]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지표 및 측정 방식

성과지표	측정 방식
공청회 및 교육 건수	• 자주재원 확충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착을 위한 공청회(관계자 교육) 개최 건수
전문부서 지정 및 인력운영	• 자주재원 확충 관련 부서의 구성원 인원 수 합계
신규 세원 발굴 노력	• 신규 세원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 정도(기존의 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 사용료 현실화 등 포함)
체납세 건수 증감율	• (당해년도 지방세 체납 총 건수-전년도 지방세 체납 총 건수)/ 전년도 지방세 체납 총 건수 * 100
체납세 금액 증감율	• (당해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전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 전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 * 100
지방세 증감율	• (당해년도 지방세 총 징수액-전년도 지방세 총 징수액)/ 전년도 지방세 총 징수액 * 100
세외수입 증감율	• (당해년도 세외수입 총액-전년도 세외수입 총액/ 전년도 세외수입 총액 * 100

○ 한편, 자주재원 확충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7]과 같음

8) 앞서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은 산출과 결과 지표 모두를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표 3-7】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관계자 공청회 개최 및 교육	높음	• 공청회 및 교육 운영건수	각 지자체	낮음*
전문부서 지정 및 인력운영	높음	• 전문부서 인력 수	각 지자체	낮음*
신규 세원 발굴 노력	높음	• 신규 세원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 정도에 대한 응답 데이터	설문조사	낮음
체납세 건수 증감율	높음	• 지방세 체납 총 건수	지방세통계연감	높음
체납세 금액 증감율	높음	• 지방세 총 체납액	지방세통계연감	높음
지방세 증감율	높음	• 지방세 총 징수액	지방세통계연감	높음
세외수입 증감율	높음	• 세외수입 총액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높음

* 개별 지자체에 대한 측정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 가능성이 높으나, 지자체 간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별도의 자료 수집 절차가 필요함

4) 정보공개: 현금성복지사업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 정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주요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설문원, 2018)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 및 업무들 중에서도 현금성 복지사업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조하고 있음
- 먼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현금성 복지사업은 아직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선심성 정책들이 난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홍근석, 2022), 그 중에서도

현금성 복지 사업의 정확한 사업 범위와 금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함

- 현금성 복지사업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의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현금 및 지역화폐’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중 현금성 사업으로 지출되는 복지사업을 의미함(전성만 등, 2022)
-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지방재정365’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 내역이 한 곳에서 통합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3년 6월 현재 현금성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성복지비 총금액⁹⁾과 세출예산액 대비 현금성복지비(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현금성복지비 총금액과 현금성복지비 비중의 경우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간 비교 지표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현금성복지사업과 함께 현 정부가 정보 공개를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의정활동으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음

-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분야를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로 구분하고,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 회기운영 등 9개 지표, 의원 활동에 대해서는 회의록(본회의, 상임위) 등 9개 지표, 의회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 기구의 의원입법지원현황 등 5개 지표 등 총 23개 지표를 설정하였음¹⁰⁾

9) 지방자치단체 예산항목 기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통계목으로 편성된 예산 총액을 의미함(지방재정365. 검색일: 2023.06.07.)

10) 정보공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회운영 분야에는 의회 회기운영,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원별 검직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국제교류 현황, 의원 정책연구 현황, 학술연구용역 현황, 의원 역량강화 현황, 행사개최 현황 등 총 9개 항목, 의원활동 분야에는 회의록(본회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행정사무조사, 지방의회 질의 답변 현황, 의안 처리현황, 위원회 심사안건 검토 보고 및 심사보고서, 의원별 회의 출석률 현황, 의원별

- 이 밖에 김성호 등(2002)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개발과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결산심의 분야의 결산 보고서 홍보실적, 위원회 활동 분야에서는 소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실적, 주민대표 활동 분야에서는 의정활동 공개실적을 평가지표로 설정한 바 있음
 - 조선일(2005)은 전남 동부지역 중심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예산심의·결산심의 부문의 결산보고서, 회의개최·위원회 활동, 대민·대외활동 부문의 의정활동 공개실적 등의 지표들을 관리해야 함을 강조함
-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현금성복지사업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산출 중심 성과지표¹¹⁾와 그 측정 방식을 구성하면 [표 3-8]과 같음

[표 3-8] 정보공개 지표 및 측정 방식: 현금성 복지사업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성과지표	측정 방식
현금성복지사업 정보 공개 수준	• 지방재정365 상에 공개된 공통항목만 공개한 경우 0, 현금성 복지사업 세부 내역 및 예결산액까지 공개한 경우는 1
지방의회 정보 공개 수준(양적)	• 실제 정보공개 항목 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항목 수(23개) * 100
지방의회 정보 공개 수준(질적)	• 지방의회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질적 평가 결과

- 한편 현금성복지사업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9]와 같음

의정보고회 개최 현황 등 총 9개 항목, 의회사무 분야에는 사무기구의 의원입법지원현황, 사무기구의 예결산분석 지원 현황, 의회 민원처리 현황, 의회발간물 현황, 의회자료체계구축 현황 등 총 5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

- 11) 앞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결과의 달성보다는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표 3-9] 정보공개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현금성 복지사업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현금성복지사업 정보 공개 수준	높음	• 현금성복지사업 세부 정보 공개 데이터	각 지자체	낮음*
지방의회 정보 공개 수준(양적)	높음	• 지방의회활동 세부 정보 공개 데이터	각 지자체	낮음*
지방의회 정보 공개 수준(질적)	높음	• 지방의회활동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데이터(회의록 공개 횟수, 정보 업데이트 횟수 등)	인터뷰 또는 설문 조사	낮음

* 개별 지자체에 대한 측정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 가능성이 높으나, 지자체 간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별도의 자료 수집 절차가 필요함

5)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 고위공무원의 맞춤형 교육에 대해 직접적으로 탐구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맞춤형 교육에 대한 성과지표를 구성하여 이를 고위공무원이라는 대상의 특성에 맞추어 수정 적용할 수 있음
- 맞춤형 교육은 개별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의 다른 말로, 교수 학습을 교육 대상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정해주는 것을 의미함(Tetzlaff et al., 2020)
 - 이러한 맞춤형 교육은 교육 대상의 특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며, 교육 대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수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됨(Patrick et al., 2013)
- 맞춤형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의 특성, 욕구, 역량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함(Pane et al., 2015)
- 국정과제에서 나타난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은 완전히 개인화된 교육이라기보다는 국과장급 공무원이라는 특정 집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맞춤형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및 피드백 등 교육

영역별 설계 과정에 교육 대상의 특성 및 역량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맞춤형 교육에 대해 교육 대상이 만족하였는지 등이 산출(output)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음

- 고위공무원 집단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핵심 역량 영역¹²⁾에 필요한 교육 내용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고위공무원들의 맞춤형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함

○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산출 중심 성과지표¹³⁾와 그 측정 방식을 구성하면 [표 3-10]과 같음

[표 3-10]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지표 및 측정 방식

성과지표	측정 방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도	• 고위공무원 역량 영역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품질	• 고위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점수
교육에 대한 고위공무원 만족도	•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및 피드백 등 교육 영역 전반에 대한 고위공무원들의 만족도

○ 한편,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의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11]과 같음

12)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의 역량을 사고, 업무, 관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문제인식, 전략적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 등 6개 세부 영역으로 나누고 있음(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검색일: 2023.06.07.)

13) 앞서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결과의 달성보다는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표 3-11]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도	높음	• 고위공무원 대상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자료	각 지자체	낮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품질	중간	• 고위공무원 대상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평가 데이터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낮음
교육에 대한 고위공무원 만족도	중간	• 고위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이수자의 만족도 조사 데이터	설문조사	낮음

* 개별 지자체에 대한 측정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 가능성이 높으나, 지자체 간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별도의 자료 수집 절차가 필요함

6)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 정부 부문에서의 인사교류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정부와 민간 간 등 교류주체에 따라 4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이 중 지방시대 국정과제에서 의미하는 형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인사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배귀희·류현숙(2010)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제도 운영실태 및 성과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함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장기적 발전 방안을 도출함
 - 인사교류의 효과성과 복귀 후 관련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인식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됨
 - 인사교류의 긍정적 효과 항목은 정부인력 활용의 극대화, 중앙-지방간 상호 이해 증진, 중앙-지방간 정책협조, 정책수립과 지방의 현장경험, 전문인력의 확보 및 활용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증진, 승진 등 탄력적인 조직운영 및 관리운영체계의 강화, 인사교류를 통한 인력관리기법 개발 가능, 중앙-지방간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가능, 개인의 적성 활용 기회 제공, 전문성과 경험확대

- 등 개인의 능력향상, 관련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개인의 애로사항 해결 등으로 제시함
- 인사교류의 부정적 효과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조직의 배타성, 직무내용의 차이, 교류 대상에서 유능한 인력의 배제, 교류제도의 미비, 교류대상자가 직무복귀 후 받게 될 인사상의 불이익, 교류 필요성에 대한 기관장 및 상사의 무관심 몰이해, 교류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미비, 기관장의 비협조, 교류의 실익부족 등을 활용함
 - 인사교류의 목적달성도에 대한 항목은 중앙-지방간 정보공유, 상호이해 및 지방역량 증가와 균형발전에 대한 목적 달성도 등으로 구성함
- 권경득·김판석·오성호·박경원(2003)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실태분석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의 '수요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함
 - 수요요인은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활용의 극대화,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의 증진,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의 연계성 및 협조강화, 승진 등 인사관리상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및 기획능력의 제고, 개인의 직무상 애로 해결, 거주지 등 개인의 근무환경 상 애로해결, 경험확대, 개인의 능력향상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이상의 고위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인사교류를 통한 중장기적 성과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국정과제에서 강조하는 바는 지방의 고위공무원 인사교류의 양적 확대, 즉 인사교류의 산출 측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지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사교류를 통해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로는 인사교류 건수, 인사교류 당사자의 만족도, 인사교류 기관 차원의 만족도 등이 존재함
-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고위공무원 인사교류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산출 중심 성과지표¹⁴⁾와 그 측정 방식을 구성하면 [표 3-12]와 같음

[표 3-12]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지표 및 측정 방식

성과지표	측정 방식
인사교류 건수	•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건수 + 지방-지방 간 인사교류 건수
인사교류 개인 만족도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제도 운영 및 인사교류를 통한 개인적 차원의 성과에 대해 인사교류 당사자가 만족하는 정도
인사교류 기관 만족도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제도 운영 및 인사교류를 통한 기관 차원에서의 성과에 대해 인사교류 대상 기관 구성원들(인사교류 당사자 제외)이 만족하는 정도

○ 한편,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13]과 같음

[표 3-13]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인사교류 건수	높음	• 중앙-지방 간, 지방-지방 간 인사교류 현황 자료	인사혁신처 & 설문조사	낮음*
인사교류 당사자 만족도	중간	• 인사교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자료	설문조사	낮음
인사교류 기관 만족도	중간	• 인사교류 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자료	설문조사	낮음

*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현황 자료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일괄적으로 수집 가능하나, 지방-지방 간 인사교류 현황 자료는 일괄적 수집이 어려우며, 개별 지자체에 대한 측정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 가능성이 높으나, 지자체 간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별도의 자료 수집 절차가 필요함

7) 지방연구원

○ 지방시대 국정과제에서는 ‘지방연구원 설립’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과제는 실제로 지방연구원이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지방연구원의 설립

14) 앞서 고위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결과의 달성보다는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보다는 ‘지방연구원 육성’의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정형록 등(2012)은 경기개발연구원(현 경기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 연구함
 - 평가분야는 크게 ‘책임경영’, ‘주요사업’, ‘창의경영’ 3개로 구분되며, 이 중 지방연구원의 실질적인 연구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역은 ‘주요사업’과 ‘창의경영’임 ‘주요사업’의 평가항목은 연구사업 추진과제의 합리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계획 설정의 타당성,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의경영’의 평가항목은 연구 성과의 활용, 고객 성과로 구성됨
- 행정안전부(2022)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연구원을 포함한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제안모델을 연구함
 - 기관 유형별(신용보증재단, 지방연구원, 문화·예술재단, 여성·청소년재단, 복지재단,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기업진흥 및 지원재단 등) 중 지방연구원 사업평가지표 중심으로 살펴보면, 1인당 연구과제 수, 1인당 연구보고서 수, 연구과제 게시 실적, 정책반영 실적, 연구발표실적, 산·학·연 협동연구실적, 워크숍·세미나 실적, 연구비 집행관리 책무성 강화 등으로 구성됨
-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지방연구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산출 및 결과 중심 성과지표¹⁵⁾와 그 측정 방식을 구성하면 [표 3-14]와 같음

15) 앞서 지방연구원 육성에 대해서는 산출과 결과 지표 모두를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표 3-14] 지방연구원 지표 및 측정 방식

성과지표	측정 방식
1인당 평균 연구과제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c{\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과제 수})}{\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1인당 평균 연구보고서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c{\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보고서 수})}{\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 연구보고서는 당해기관 당해연도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합계(ISBN은 1.5건으로 간주하여 가점)
1인당 협동연구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c{\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국내·외 협동연구건수})}{\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워크숍·세미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c{\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워크숍·세미나 개최건수})}{\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수}}$
1인당 학회발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c{\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국내외 학회발표 건수})}{\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지방자치단체 정책 반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c{\text{지방자치단체 정책 반영 건수}}{\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과제 수})} * 100$
연구 성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연구원 연구 성과의 내용, 공유 방식, 정책활용성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만족 정도

○ 한편, 지방연구원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15]와 같음

[표 3-15] 지방연구원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1인당 평균 연구과제 수	높음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과제 수(이하 중복 생략)	지방연구원	낮음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이하 중복 생략)	지방연구원	낮음
1인당 평균 연구보고서 수	높음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보고서 수	지방연구원	낮음
1인당 협동연구 실적	높음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국내·외 협동연구건수	지방연구원	낮음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워크숍·세미나 실적	높음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워크숍·세미나 개최건수	지방연구원	낮음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수	각 지자체	낮음*
1인당 학회발표 실적	높음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국내외 학회발표 건수	지방연구원	낮음
지방자치단체 정책 반영률	높음	• 연구과제 수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정책 반영 건수	지방연구원	낮음
연구 성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만족도	중간	• 지방연구원 연구 성과의 내용, 공유 방식, 정책활용성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료	설문조사	낮음

* 개별 지자체에 대한 측정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 가능성이 높으나, 지자체 간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별도의 자료 수집 절차가 필요함

8) 규제혁신

- 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을 제시하고 있음
 - 해당 지표 설정 목적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테마별로 행정안전부에서 발굴, 통보하여 지자체에서 신속히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¹⁶⁾
- 한편,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의 성과 측정과 관련 연구로는 김병식(2002), 배영임·신혜리(2021), 이영범·이은국(2003) 등이 있음
- 김병식(2002)은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성과를 외형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규제개혁의 외형적 성과에 대해서는 1998년부터 4년 동안의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사무 일괄 조사, 폐지 및 개선 조치, 누락규제 발굴, 규제개혁 부진 기관에 대한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 점검 강화 등의 수행실태 결과 등 분석하여 제시함

16) 내고장 알리미 홈페이지(검색일: 2023.06.09.)

- 인식적 측면은 도내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규제 개혁에 대한 ‘만족도’와 규제개혁이 ‘주민편의 증진에 미친 영향’으로 측정 하였음
- 배영임·신혜리(2021)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전반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한 성과분석을 시도하였음
 - 정부 규제혁신의 성과로는 법·제도 기반구축, 사회적 소통과 합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 분야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성과로는 지원제도의 합리성,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담당 인력의 태도와 전문성, 평가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지원내용의 타당성 등의 지표를 제시함
- 이영범·이은국(2003)은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업 생산성 향상, 국가 경쟁력 증진 등 정부 규제의 궁극적인 목표에 기반한 평가모형과 지표를 제안함
 - BSC 모형을 중심으로 재무적 관점(규제의 비용, 가치 또는 편익), 고객 관점(규제 인지도 및 순응도, 규제 준수 편리성, 규제 홍보 활용 정도, 피규제집단에 대한 정보), 내부 프로세스 관점(규제집행의 비용효율성, 시의적절성), 학습 및 성장 관점(규제 환류장치, 담당 인력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성과측정 시스템을 제시함
-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¹⁷⁾와 그 측정 방식을 구성하면 [표 3-16]과 같음

[표 3-16] 규제혁신 지표 및 측정 방식

성과지표	측정 방식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 (정비 완료된 자치법규 건수/ 전년도 통보된 정비대상 과제건수) * 100 ※ 정비 완료된 자치법규 건수: 당해연도에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 완료 및 공포(예정)된 건수 ※ 정비대상 과제건수: 행정안전부에서 전년도에 발굴 및 통보한 정비과제 건수

17)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결과의 달성보다는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성과지표	측정 방식
혁신 필요 규제사무 발굴 건수	• 주민 불편 초래 규제, 기업 활동 저해 규제, 구시대적 규제 등 혁신이 필요한 규제사무의 발굴 건수
규제사무 혁신 추진율	• (혁신완료 규제사무 수/ 혁신필요 규제사무 발굴건수) * 100
규제혁신에 대한 지역기업 만족도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에 대한 지역기업의 만족도
규제혁신에 대한 주민 만족도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 한편, 규제혁신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17]과 같음

[표 3-17] 규제혁신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높음	•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원천 자료	각 지자체	낮음*
혁신 필요 규제사무 발굴 건수	중간	• 주민 불편 초래 규제, 기업 활동 저해 규제, 구시대적 규제 등 혁신이 필요한 규제사무의 발굴 자료	각 지자체	낮음
규제사무 혁신 추진율	중간	• 혁신필요 규제사무 발굴건수 대비 혁신 완료 규제사무 데이터	각 지자체	낮음
규제혁신에 대한 지역기업 만족도	중간	•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자료	설문조사	낮음
규제혁신에 대한 주민 만족도	중간	• 일반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자료	설문조사	낮음

* 개별 지자체에 대한 측정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 가능성이 높으나, 지자체 간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별도의 자료 수집 절차가 필요함

9)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

-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 정책은 지역별 주력 산업을 선정하여 지역 주도의 기업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성장정체 및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음
- 2014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 중심의 63개 지역주력산업을 신설한 이후 2017년 10월 지역주력산업은 48개로 축소 조정된 바 있으며, 2020년 11월에는 기존 산업의 대체·확장을 통해 디지털 뉴딜(20개), 그린 뉴딜(19개), 고부가가치화(9개) 산업으로 개편되었고, 2023년 2월에는 이를 다시 주축산업(41개)과 미래신산업(19개) 등 총 60개 산업으로 재편함
 -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3년 현재 초정밀 소재부품, 저온고압에너지저장 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등 3개 산업이 지역주력산업으로 선정됨

[표 3-18] 광역시도별 주력산업 현황

지역	지역주력산업	지역	지역주력산업
부산	초정밀 소재부품, 저온고압 에너지저장 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성능 그린바이오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전북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전남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 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대전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경북	첨단 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고성능 화학소재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 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제주	지능형 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솔루션
충북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부품	세종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고성능 바이오 소재

출처: 공공데이터포털(20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_지역특화(주력)산업

- 중앙관계부처(2023) 합동 작성 자료에서는 지역주력산업 지원의 성과를 지원 사업에 참여한 수혜기업의 매출액 및 신규고용규모, 비수혜기업 대비 매출액 증가율 및 고용증가율, 유망기업의 앵커기업으로의 성장 사례 건수, 지역 기업들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만족도) 등을 통해 평가하였음
- 지역주력산업 및 기업 육성의 성과 측정과 관련 연구로는 김구희 등(2015), 이우배·황종환(2017), 곽경훈 등(2019), 최문형·정문기(2021), 권경환·최연태(2014) 등이 있음
- 김구희 등(2015)은 지역산업진흥사업 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지역기업의 성과를 기업 매출액 증가율과 종사자 수 증가율로 측정하였음
- 이우배·황종환(2017)은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을 주제로 연구하였음
 - 사업화지원사업의 성과는 ‘투자수익율’ 개념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기업별 지원 액수 대비 사업화 참여를 통한 기업의 매출액의 증가 정도를 파악하였음
 - 이는 단순 매출액 증가분을 활용하면 기업규모에 따라 성과 왜곡이 유발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지표라고 판단됨
- 곽경훈 등(2019)은 광주지역 주력산업 R&D 지원사업 효율성 평가를 주제로 연구함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성과요소 중 ‘매출액’은 총매출액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성과의 향상 정도를 측정하며, ‘개발기술적용매출액’과 ‘과제기여도’는 R&D를 통해 나타난 직접적인 성과와 간접적인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선정하였음
 - ‘과제기여도’는 기술개발을 통해 신출된 기술 또는 제품이 자사의 역량, 매출액 증대, 고용창출에 미치는 기여도로 정의됨
- 최문형·정문기(2021)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의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과의 영향을 주제로 연구함

- 해당 연구는 전국 단위의 지식기반산업 영역에서 산업구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향요인 차이를 실증 분석함
- 지식기반산업의 구조적 특성, 즉 특정 지역의 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정도를 나타내는 ‘특화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하위 산업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다양성’, 특정 지역의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적인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경쟁도’ 측정을 위하여 각각 ‘입지계수’, ‘엔트로피 지수’, ‘경쟁도 지수’를 활용함
- 주요 종속변수인 지역경제성과는 지역내총생산(GRDP)을 활용하여 측정함
- 권경환·최연태(2014)는 기초지자체 산업단지 지원정책이 산업단지 성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주제로 연구하였음
 - 해당 연구에서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통해 생산액, 피고용자수, 수출액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1차적 산출지표로, 이로 인한 지역총생산(GRDP)을 결과지표로 설정하였음
- 위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의 결과중심 성과지표는 주로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에 대한 효과 및 지역의 경제성장 성과와 관련되어 있음
-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중심 성과지표¹⁸⁾와 그 측정 방식을 구성하면 [표 3-19]와 같음

[표 3-19]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 지표 및 측정 방식

성과지표	측정 방식
수혜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 (수혜기업들의 수혜 후 3년 간 평균 매출액-수혜기업들의 수혜 전 3년 간 평균 매출액)/ 수혜기업들의 수혜 전 3년 간 평균 매출액 * 100
수혜기업 신규고용 규모	• 전체 수혜기업의 신규고용인원 누적 총 합계
수혜기업 투자수익률	• (수혜기업들의 수혜 후 3년 간 평균 매출액-수혜기업들의 수혜 전 3년 간 평균 매출액)/ 수혜기업들에 대한 3년 간 평균 지원 총 금액

18) 앞서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결과의 달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성과지표	측정 방식
주력산업 특화성	• (지역 내 주력산업 총 사업체 수/ 지역 내 총 사업체 수)/ (전국 주력산업 총 사업체 수/ 전국 총 사업체 수)
주력산업 다양성	• $-\sum_{i=1}^I (p_i * \log_2(p_i))$ * p_i = 지역 내 주력산업의 i 번째 하위 산업의 총 종사자수/ 지역 내 주력산업의 총 종사자 수
주력산업 경쟁도	• (지역 내 주력산업 총 사업체 수/ 지역 내 주력산업 총 종사자 수)/ (전국 주력산업 총 사업체 수/ 전국 주력산업 총 종사자 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 (지원 사업 실시 후 최근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지원 사업 실시 직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지원 사업 실시 직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100 *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 주민등록인구

○ 한편,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20]과 같음

[표 3-20] 지역주력산업(기업)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수해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높음	• 수해 전후 3년 간 수해기업의 매출액 (이하 중복 생략)	설문조사	낮음
수해기업 신규고용 규모	높음	• 수해기업 신규고용인원	설문조사	낮음
수해기업 투자수익률	높음	• 3년 평균 주력 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총 금액	설문조사	낮음
주력산업 특화성	높음	• 지역 내 주력산업 총 사업체 수 (이하 중복 생략)	각 지자체	낮음
		• 지역 내 총 사업체 수	KOSIS	높음
		• 전국 주력산업 총 사업체 수 (이하 중복 생략)	관계중앙부처	낮음
		• 전국 총 사업체 수	KOSIS	높음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주력산업 다양성	높음	• 지역 내 주력산업의 하위산업별 종사자 수	각 지자체	낮음
		• 지역 내 주력산업 총 종사자 수 (이하 중복 생략)	각 지자체	낮음
주력산업 경쟁도	높음	• 전국 주력산업 총 산업체 수	관계중앙부처	낮음
		• 전국 주력산업 총 종사자 수	관계중앙부처	낮음
1인당 지역내 총 생산 증가율	높음	• 지원사업 실시 직전 3년 및 실시 후 최근 3년 간 지역내총생산	KOSIS	높음
		• 지원사업 실시 직전 3년 및 실시 후 최근 3년 간 주민등록인구	KOSIS	높음

10) 로컬브랜드 육성

- 로컬브랜드 육성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는 홍하연(2022)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드상권의 육성 및 조성방향’ 연구가 있음
 - 해당 연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치소비, 경험기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골목상권 연계, 독창적 로컬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 사후 평가지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다양한 선행연구 검토와 실무자 회의, 전문가 자문, 인식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85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이를 재그룹화하여 최종적으로 5개 키워드를 기준으로 평가요소들을 배치함
 - 5개의 최종 키워드는 ‘로컬 콘텐츠(Local contents)’, ‘창조적 소상공인(Originality of Market)’, ‘로컬생태계 조성(Communication)’, ‘정주환경 접근성(Accessibility)’, ‘상권 인프라(Landscape)’ 임
 - ‘로컬 콘텐츠’는 타 지역과 차별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며, 점포 및 어메니티의 다양성 및 풍부함에 대한 평가 키워드이며,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는 소프트·하드웨어 콘텐츠 존재, 인지도 있는 대표 로컬 콘텐츠의 존재 등을 제시함
 - ‘창조적 소상공인’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로컬크리에이터19)’와 유사 개념으로

상권 내 프랜차이즈가 아닌 지역 고유의 점포가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평가 키워드이며,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고유 점포, 업종의 다양성 등을 제시함

- ‘로컬생태계 조성’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로컬 공동체의 관계의 질, 활동 다양성 및 적극성을 평가하는 키워드이며,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는 상인공동체 구성여부, 상권지원기구 조직화 여부, 상권공동체 주도 행사 개최 수 등을 제시함
- ‘정주환경 접근성’은 주민들의 정주환경 내 생활밀접업종의 풍부함, 상권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평가하는 키워드이며,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는 주변 거주지 및 직장과의 거리, 생활밀접업종 점포 비중,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제시함
- ‘상권 인프라’는 주민들이 걷기 좋고, 휴식을 위해 머물 수 있도록 조성된 상권인지를 평가하는 키워드이며,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는 광장 등 공공공간 존재, 녹지 등 환경친화적 공간 존재, 보행자중심거리 적용 등을 제시함
- 이상의 5개 키워드는 주로 결과 중심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은 도입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되 산출 중심의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에서는 로컬 브랜드 육성을 위한 하위과제로 ‘동네단위 로컬브랜드 구축’,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주민참여를 통한 로컬브랜드 아이디어 발굴’, ‘주민참여로컬브랜드 아이디어 구체적 사업 연계 지원(생활실험, 학습, 컨설팅 등)’, ‘지역특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로컬브랜드 육성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산출 중심 성과지표²⁰⁾와 그 측정 방식을 구성하면 [표 3-21]과 같음

19) 창업진흥원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역의 자연환경·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창업진흥원 홈페이지 (검색일: 2023.06.11.)

20) 앞서 로컬브랜드 육성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결과의 달성보다는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표 3-21] 로컬브랜드 육성 지표 및 측정 방식

성과지표	측정 방식
로컬브랜드 육성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횟수	• 로컬 브랜드 육성과 관련하여 개최한 공청회 및 토론회 총 건수
로컬브랜드 아이디어 발굴 건수	• 주민참여를 통한 로컬브랜드 아이디어 발굴 건수
신규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건수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신규 참여 건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예산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체 지원 예산 규모
로컬브랜드상권에 대한 이해관계자 만족도	• 로컬브랜드 상권인프라, 상인공동체, 상권지원기구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
로컬브랜드상권에 대한 주민 만족도	• 로컬브랜드 상권의 인프라, 접근성, 로컬 콘텐츠 등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만족도

○ 한편, 로컬브랜드 육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22]와 같음

[표 3-22] 로컬브랜드 육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 용이성
로컬브랜드 육성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횟수	높음	• 로컬 브랜드 육성과 관련하여 개최한 공청회 및 토론회 건수	각 지자체	낮음*
로컬브랜드 아이디어 발굴 건수	높음	• 주민참여를 통한 로컬브랜드 아이디어 발굴 건수	각 지자체	낮음*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건수	높음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신규 참여 건수	각 지자체	낮음*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예산	높음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체 지원 예산 규모	각 지자체	낮음*
로컬브랜드상권에 대한 이해관계자 만족도	중간	• 로컬브랜드 상권인프라, 상인공동체, 상권지원기구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 조사 지표	설문조사	낮음
로컬브랜드상권에 대한 주민 만족도	중간	• 로컬브랜드 상권의 인프라, 접근성, 로컬 콘텐츠 등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지표	설문조사	낮음

* 개별 지자체에 대한 측정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 가능성이 높으나, 지자체 간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별도의 자료 수집 절차가 필요함

11)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 RIS를 중심으로

-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egional Innovation Strategy, RIS)’임
- RIS는 2020년부터 본격화된 사업으로 대학과 지자체의 파트너십을 위한 ‘지역 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방대학에서 양성하고,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11시 시도에 6개의 지역혁신플랫폼이 구축되었으며, 2023년에는 3개의 지역혁신플랫폼을 신규로 선정함
 - 2023년 신규로 선정된 지역혁신플랫폼에는 부산이 포함되어 있음

[표 3-2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선정 지역

지자체	핵심분야	참여대학
광주·전남 (‘20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신산업 • 미래형운송기기 	전남대, 목포대 등 15개 대학
울산·경남 (‘20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 스마트제조 ICT • 스마트공동체 • 미래모빌리티 • 저탄소·그린에너지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등 13개 대학
충북 (‘20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바이오 • 정밀의료·기기 • 화장품·천연물 	충북대, 한국교통대 등 14개 대학
대전·세종·충남 (‘21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 모빌리티 ICT 	충남대, 공주대 등 24개 대학
강원 (‘22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의료 • 디지털헬스케어 • 스마트수소에너지 	강원대, 연세대 미래, 강릉원주대 등 15개 대학
대구·경북 (‘22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보기기 • 미래차 전환부품 	경북대, 영남대 등 23개 대학

지자체	핵심분야	참여대학
부산 (’23년 예비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항만물류(한국해양대) 친환경 스마트 선박(부산대)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동아대) 	부산대 등 21개 대학
전북 (’23년 예비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수송기기(전북대) 에너지신산업(군산대) 농생명·바이오(원광대) 	전북대 등 9개 대학
제주 (’23년 예비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정바이오(제주대) 그린에너지·미래 모빌리티(제주대) 지능형 서비스(제주대) 	제주대 등 4개 대학

- RIS의 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찾기는 어려우나,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교육부, 2022)’의 내용을 통해 지역 관점의 RIS의 성과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음
 -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지역혁신 플랫폼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 지역 내 대학, 기업, 지역혁신기관, 공공기관 등 기관 간 연계, 지역혁신플랫폼별 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핵심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고려하고 있음
- 제2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포럼 자료집의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 2021 주요성과 발표’ 내용에서는 RIS의 성과를 플랫폼 구축성과, 대과제별 사업추진성과, 사업간 연계 추진성과로 구분하고 있음
 - 플랫폼 구축 성과에 대해서는 핵심 참여 기관 간의 연계 구축, 플랫폼 운영체계 구축, 교육혁신체계 구축, 정보시스템을 통한 협력시스템 구축, 성과관리 및 확산 체계 구축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 대과제별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핵심분야 기술개발 성과, 재직자 및 지역 확산 자원 역량강화, 기술고도화, 창업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학생 취업연계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 사업간 연계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타 부처 연계사업 발굴 실적을 주로 언급함

- 이 외에 5개년 추진 목표를 인재양성, 기술고도화, 기업지원, 창업활성화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2023년 RIS에 신규로 선정된 지역이므로 산출 중심의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구성한 산출 중심 성과지표²¹⁾와 그 측정 방식을 구성하면 [표 3-24]와 같음

[표 3-24]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 지표 및 측정 방식: RIS를 중심으로

성과지표		측정 방식
참여기관 간 연계 활성화	참여기관 간 협약 체결 수	• \sum (참여기관 간 체결 협약 수)
	정보 공유 및 활용 시스템	• 참여기관 정보 공유 및 활용 시스템 구축 여부
	참여기관 공동운영 교육프로그램 수	• \sum (참여기관 공동운영 교육프로그램 수)
지역인재양성	지역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 \sum (지역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핵심분야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 \sum (핵심분야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핵심분야 기술개발	핵심분야 관련 국내외 논문 및 특허 수	• \sum (핵심분야 관련 국내외 논문 및 특허 수)
	핵심분야 관련 기술이전 수	• \sum (핵심분야 관련 기술이전 수)
	핵심분야 관련 R&D 참여 학생 수	• \sum (핵심분야 관련 R&D 참여 학생 수)
창업 활성화	핵심분야 관련 창업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 \sum (핵심분야 관련 창업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핵심분야 관련 창업기업 수	• \sum (핵심분야 관련 창업기업 수)

* 지역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재직자, 직업계고, 초·중·고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리빙랩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등

- 한편, RIS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25]와 같음

21) 앞서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결과의 달성보다는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표 3-25]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RIS를 중심으로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참여기관 간 협약 체결 수	높음	• 참여기관별 RIS 관련 협약 체결 수	설문조사	낮음
참여기관 정보 공유 및 활용 시스템 구축 여부	높음	• 플랫폼의 모든 참여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	설문조사	낮음
참여기관 공동운영 교육프로그램 수	높음	• 참여대학별 공동운영 교육프로그램 수	설문조사	낮음
지역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높음	• 참여대학별 지역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설문조사	낮음
지역핵심분야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높음	• 참여대학별 지역핵심분야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설문조사	낮음
핵심분야 관련 국내외 논문 및 특허 수	높음	• 참여대학별 핵심분야 관련 국내외 논문 및 특허 수	설문조사	낮음
핵심분야 관련 기술이전 수	높음	• 참여대학별 핵심분야 관련 기술이전 수	설문조사	낮음
핵심분야 관련 R&D 참여 학생 수	높음	• 참여대학별 핵심분야 관련 R&D 참여 학생 수	설문조사	낮음
핵심분야 관련 창업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높음	• 참여대학별 핵심분야 관련 창업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설문조사	낮음
핵심분야 관련 창업기업 수	높음	• 참여대학별 핵심분야 관련 창업기업 수	설문조사	낮음

12)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 국정과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어형 지역인재’는 과거에 교육, 취업 등의 이유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였으나, 이후 다시 비수도권, 즉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이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인재들을 지칭함
- 국토연구원(2022)에 따르면, 지역인재 중 특히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압도적인 이유는 ‘일자리’이며, 그 다음으로로는 ‘교육’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역 정착 과정에서 일자리와 더불어 주거비용 및 대중교통의 편의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자료에서는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에게 있어 지역정보에 대한 공유뿐 아니라 또래집단 교류가 지역사회 참여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배타성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
- 이처럼 지역으로 회귀하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주거비용, 교통편의성, 또래집단 형성, 지역배타성 극복 등 물질적, 관계적, 정신적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의 산출 중심 성과지표²²⁾와 그 측정 방식을 구성하면 [표 3-26]과 같음

[표 3-26]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지표 및 측정 방식

성과지표	측정 방식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대상자 수	• \sum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대상자 수)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다양성	• \sum (지원 영역별*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유무 (유=1, 무=0))
1인당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sum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총 지원 대상자 수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의 만족도	•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지원대상자들이 만족하는 정도

* 지원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예. 취업지원, 주거지원, 관계지원 등)

- 한편,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27]과 같음

22) 앞서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결과의 달성보다는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표 3-27] 언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언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대상자 수	높음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언어형 지역인재 대상자 수(이하 중복 생략)	각 지자체	낮음*
언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다양성	높음	• 지원 영역별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유무	각 지자체	낮음*
1인당 언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높음	• 지자체의 언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총액	각 지자체	낮음*
언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의 만족도	중간	• 언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데이터	설문조사	낮음

* 개별 지자체에 대한 측정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 가능성이 높으나, 지자체 간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별도의 자료 수집 절차가 필요함

13)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

-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에 대한 성과는 창업전문훈련기관보다 더 큰 범위를 포괄하는 직업훈련기관²³⁾ 육성에 대한 성과 연구 문헌들을 참조하되, 창업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조정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장혜정 등(2020)에 따르면, 협의의 직업훈련기관 육성의 성과는 먼저 개별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적합성과 성과 적정성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개별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심사에 반영됨
 - 이 중에서도 성과 적정성은 성과지수와 성과창출가능성으로 평가되는데, 성과지수의 지표에는 취업률, 고용유지율, 훈련생 만족도, 훈련이수자 평가, 중도 탈락률이 포함되며, 성과 창출 가능성은 훈련 교·강사 전문성, 훈련방법 적정성, 훈련장비 적정성 등이 포함됨

23) 직업훈련기관은 크게 직업교육기관과 협의의 직업훈련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직업교육기관에는 특성화고교나 대학, 협의의 직업훈련기관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직업훈련기관 등이 해당됨

- 훈련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는 기관 건전성 평가(1단계)와 2단계 성과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는 역량평가(2단계)로 구성됨
 - 장혜정 등(2020)은 추가적으로 직업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훈련생 내/외부 역량평가, 훈련생 중간평가 반영도, 고용유지 훈련수료자의 현업적용도, 고용유지 훈련 수료자의 사업체 만족도, 관련 직종 취업률, 자격취득률 등의 추가지표를 제안하였음
- 한편, 심현민과 설병문(2022)은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의 경우 경험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높으며, 획일화된 창업교육보다는 각각의 창업아이템에 특화된 시뮬레이션 교육, 또는 기업연계 실무교육 등 다양한 경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로 측정 가능한 창업훈련전문기관의 결과 중심 성과지표²⁴⁾ 및 그 측정방식을 구성하면 [표 3-28]과 같음

[표 3-28] 창업훈련전문기관 육성 지표 및 측정 방식

성과지표	측정 방식
창업훈련기관의 수	• \sum (지역 내 창업훈련기관 수)
경험 중심 창업훈련프로그램	• $\frac{\sum(\text{창업훈련기관별 경험 중심 창업훈련프로그램 시수의 비중})}{\sum(\text{창업훈련기관별 창업 훈련프로그램 총 시수})}$
창업훈련프로그램 수료자 수	• \sum (창업훈련기관별 창업훈련프로그램 수료자 수)
창업훈련프로그램 수료자 만족도	• 창업훈련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수료자들이 만족하는 정도

- 한편, 창업훈련전문기관 육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29]와 같음

24) 앞서 창업훈련전문기관 육성에 대해서는 창업훈련기관이 얼마나 양적·질적으로 향상되고,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질 좋은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극적인 결과의 달성 달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표 3-29] 창업훈련전문기관 육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창업훈련기관의 수	높음	• 지역 내 창업훈련기관 수	각 지자체	낮음*
경험 중심 창업훈련프로그램	중간	• 창업훈련기관별 경험 중심 창업훈련 프로그램 시수 • 창업훈련기관별 창업훈련프로그램 총 시수	설문조사	낮음
창업훈련프로그램 수료자 수	높음	• 창업훈련기관별 창업훈련프로그램 수료자 수	각 지자체	낮음*
창업훈련프로그램 수료자 만족도	중간	• 창업훈련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데이터	설문조사	낮음

* 개별 지자체에 대한 측정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 가능성이 높으나, 지자체 간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별도의 자료 수집 절차가 필요함

14) 청년창업지원

- 청년창업은 청년실업률 및 총 실업률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산업경쟁력 제고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안태욱·강태원, 2020)
- 청년창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창구·서영욱(2018)은 청년 창업 정책 유형을 [표 3-30]과 같이 정리한 바 있음

[표 3-30] 청년창업지원정책 유형

순위	창업지원정책 유형
1	• 창업 후 성공까지 경제적 생계유지 지원(창업수당 및 급여 등)
2	• 초기단계 금융지원(크라우드 펀딩, 엔젤/벤처투자, 융자/보증 등)
3	• 공간/시설/장비 지원 (공간 및 시설/장비 임대료 감면 등)
4	• 시제품 제작 지원(디자인개선, 목형/금형 제작, 시장조사 등)
5	• 창업 세금감면 지원(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6	• 판로 확대 및 시장진출 지원(국내 및 해외진출 판로 확대 등)

순위	창업지원정책 유형
7	• 창업진입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휴/겸직 창업 특례제도 등)
8	• R&D 지원(인증, 특허, 생산기술, 기술이전)
9	• 창업절차 간소화(창업절차 수, 창업 소요일 단축, 비용감면 등)
10	• 기업가정신 제고 및 창업교육 지원(강좌, 멘토링 및 컨설팅 등)
11	• 인적자원 지원(스톡옵션, 병역특례/인턴제, 직원교육/훈련 등)
12	• 성장단계금융지원(M&A, 성장단계 펀드 조성, 기업공개 등)

출처: 이창구·서영욱(2018) p. 202

- 그들은 또한 세계 50여 개국 주요 도시의 창업생태계 경쟁력을 측정하여 발표하는 미국 Startup Genome의 2018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창업생태계의 측정 지표에 대해 소개하였음
- 해당 보고서에서는 창업생태계를 크게 생태계성과, 투자, 시장접근성, 인재, 창업경험 지수, 창업가 특징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 중 생태계 성과(기술 창업수, 기술창업성장지수, 생태계 가치), 투자(창업초기 평균 투자규모, 창업초기 투자 성장지수, VD 투자경험지수), 시장접근성(해외고객 비중, 글로벌 연결성) 등이 창업지원의 중장기적 성과지표로 고려될 수 있음
- 최세경과 곽규태(2017)는 청년창업지원의 성과변인에 대해 다양한 변수들을 제시하였음
 - 그들이 제시한 변수로는 평균 매출액 증가율, 평균종사자수증가율, 예산 투입 대비 매출 성과, 종사자 1인 증가 당 예산 투입액, 백만원 당 매출액 증가율, 백만원 당 종사자수 증가율 등이 있음
- 심현민·설병문(2022)은 지식과 경험의 부족, 초기 자금 확보의 어려움, 인적 네트워크 부족 등 청년창업가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한 바 있음
 - 먼저 그들은 청년사업가의 창업 준비부터 시제품 시장테스트까지 창업의 전주기에 걸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또한, 청년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교육 환경, 인적 네트워크 환경, 외부

자금 조달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음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로 측정 가능한 청년창업지원 정책의 결과 중심 성과지표²⁵⁾ 및 그 측정방식을 설정하면 [표 3-31]과 같음

[표 3-31] 청년창업지원 지표 및 측정 방식

성과지표	측정 방식
청년창업지원 대상자 수	• \sum (지원 사업별 청년창업지원 대상자 수)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전주기성	• \sum (창업 단계별*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유무(유=1, 무=0))
1인당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sum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총 지원 대상자 수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의 만족도	•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지원대상자들이 만족하는 정도

* 창업 단계별 프로그램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

- 한편, 청년창업지원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22]와 같음

[표 3-32] 창업훈련전문기관 육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청년창업지원 대상자 수	높음	• 청년창업지원 사업별 청년창업지원 대상자 수(이하 중복 생략)	각 지자체	낮음*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전주기성	중간	• 창업 단계별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유무	각 지자체	낮음*
1인당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높음	• 지자체의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총액	각 지자체	낮음*

25) 앞서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결과의 달성보다는 정책이 목적인 적절한 산출이 생산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의 만족도	중간	•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데이터	설문조사	낮음

* 개별 지자체에 대한 측정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 가능성이 높으나, 지자체 간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별도의 자료 수집 절차가 필요함

15) 혁신도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서는 혁신도시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발전시켜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핵심 정책 수단임을 밝히고 있음
- 혁신도시의 성과에 대한 연구 중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헌은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보고서임
 - 해당 보고서에서는 혁신도시에 대해 크게 국가균형발전, 혁신거점 성장(혁신/정주, 주변지역 성과확산(상생), 추진체계 등의 평가 부문을 설정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인구분산 효과(혁신도시로의 수도권 인구이동)와 인구·산업·경제의 수도권 집중도와 불평등도(혁신도시 건설 전후로 지역격차 추이 분석) 등을 분석함
 - 혁신성장의 효과 부문은 혁신성장 기반 평가와 혁신성과 평가로 나누어 분석하며, 이 중 혁신성장 기반 평가에는 혁신거점으로서의 기능평가, 창업기능 및 지식기반수준 평가, 지역 내 집적경제수준 평가 등이 고려될 수 있고, 혁신성과 평가에서는 일자리 창출(혁신도시 고용자수 증가), 지식창출(특허, 연구개발 사업 실적), 지역소득 증가효과(혁신도시 주민소득 및 GRDP 창출)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정주환경 성과평가 부문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인구현황 및 인구구성 현황(계획 대비 인구달성률, 혁신도시 인구구성, 이전공공기관 가족동반이주율), 정주여건

- 만족도(교통, 교육, 의료, 문화·복지, 상업 등 도시 정주 인프라 구축 정도 및 만족도), 스마트 혁신도시 정주체계 구축현황 등에 대해 분석함
- 상생발전 효과 부문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주변도시의 연계현황(통근통행, 업무통행 등 분석, 혁신도시의 주변지역 소비특성 등 분석), 혁신도시-주변 도시 간 상생프로그램 운영실적(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이전공공기관 지역물품 구매 현황 및 지역 식자재 구매 현황) 등을 분석함
- 추진체계 성과평가 부문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운용체계(혁신도시 발전재단, 협의회 등 운용 실적, 혁신도시 운용에 대한 주요 현안), 혁신도시 기금조성 및 실적 등에 대해 분석함
- 이 중 국가균형발전 부문의 경우 국가 전체 단위에서 분석이 가능한 지표로 판단되며, 혁신성장의 효과 부문의 대부분의 지표들의 경우 혁신도시를 포함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등 가장 직접적으로 혁신도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핵심 지표는 혁신성장의 효과부문의 일부 지표와 정부환경 성과평가 부문의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로 측정 가능한 혁신도시의 결과중심 성과지표²⁶⁾ 및 그 측정방식을 구성하면 [표 3-33]과 같음

[표 3-33] 혁신도시 지표 및 측정 방식

성과지표	측정 방식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 분양률	• 혁신도시 내 분양 완료된 클러스터 용지/ 혁신도시 내 전체 클러스터 용지 면적 * 100
계획대비 인구달성률	• 혁신도시 내 총인구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인구 수 * 100
이전공공기관 가족동반이주율	• 가족동반이전 직원 수/ 이전공공기관 직원 수 * 100
혁신도시 인구 평균 연령	• 혁신도시 인구 평균 연령
정주환경 만족도	•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혁신도시 거주자들의 만족도

26) 앞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이전의 효과와 다양한 성과가 누적되어 있으므로 궁극적인 결과의 달성 달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성과지표	측정 방식
정주인프라 구축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공급계획 공동주택 수 • (교통) 1일당 고속열차 운행 횟수(서울행), 1일당 고속/ 시외버스 운행 횟수(서울행), 시내버스 노선 개수 및 1일 운행 횟수 • (교육) 혁신도시 내 각급 학교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각급 학교 수 • (돌봄) 혁신도시 내 유아돌봄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유아돌봄시설 수 • (의료) 혁신도시 내 의료시설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의료시설 수 • (공공)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공공시설 수 • (복합혁신센터) 복합혁신센터 구축 여부

○ 한편, 혁신도시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34]와 같음

[표 3-34] 혁신도시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높음	•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면적 (총 면적/분양완료 면적)	지역별 혁신도시 홈페이지	높음
계획대비 인구달성률	높음	• 혁신도시 내 총 인구 수 •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인구 수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높음
이전공공기관 가족동반이주율	높음	• 이전공공기관 직원 중 가족동반이전 직원 비중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 전추진단	높음
혁신도시 인구 평균 연령	높음	• 혁신도시 인구 평균 연령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높음
정주환경 만족도	중간	•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혁신도시 거주자들의 만족도 조사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 전추진단	높음
정주인프라 구축 수준	중간	• 혁신도시 내 유형별(주거, 교통, 교육 등) 정주인프라 구축 규모 •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된 유형별 정주인프라 규모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 전추진단	높음

16)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거점 조성: 캠퍼스혁신파크를 중심으로

- 국정과제의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은 ‘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융합지구’임
-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를 통해 창업,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사업이라는 점이며, 특히 대학과 지역 기업들을 공간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중 ‘혁신캠퍼스타운’이나 ‘산학융합지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학의 역할이나, 대학이 가진 다양한 자원과 공간에 대한 고민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사업이 ‘캠퍼스혁신파크’임(류승한·조성철, 2019)
- 본 연구에서는 사업 간 유사성에 비추어 캠퍼스혁신파크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2022년까지 캠퍼스혁신파크 선정 대학은 총 7개였으며²⁷⁾, 2023년 단국대(천안)와 부산의 부경대가 캠퍼스혁신파크 신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음
-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대학 캠퍼스 내 유희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산학연 혁신허브²⁸⁾로 조성하는 것임
-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의 주요 기대효과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창업 후 성장기업의 생존율 향상 등임(교육부, 2023)
- 해당 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성과지표 및 그 측정방식을 구성하면 [표 3-35]와 같음

27)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28) 창업 기업, 창업 후 성장 기업에 대하여 업무공간을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공간

[표 3-35]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거점 조성 지표 및 측정 방식: 캠퍼스혁신파크를 중심으로

성과지표	측정 방식
지구 조성 상태	•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여부
분양률	• 캠퍼스혁신파크 내 산업시설구역 분양 완료 면적/분양대상 면적
기업 유치율	• 캠퍼스혁신파크 내 입주업체 수/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당시 계획 입주업체 수
고용량 달성률	• 캠퍼스혁신파크 내 총 고용자 수/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당시 계획 고용자 수
누계생산액	• 캠퍼스혁신파크 입주 기업들의 입주 후 총 생산 금액
누계수출액	• 캠퍼스혁신파크 입주 기업들의 입주 후 총 수출 금액
창업기업 생존율	• 캠퍼스혁신파크 내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기업 생존율
창업기업가 만족도	• 캠퍼스혁신파크 운영에 대한 창업기업가들의 만족도

○ 한편, 캠퍼스혁신파크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36]과 같음

- 전반적으로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시행 초기이므로 지표 측정을 위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표 3-36]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거점 조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캠퍼스혁신파크를 중심으로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상태	높음	•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여부 (완료=1, 조성중 또는 미개발=0)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높음*
캠퍼스혁신파크 분양률	높음	• 캠퍼스혁신파크 내 산업시설구역 분양률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높음*
기업 유치율	높음	• 캠퍼스혁신파크 내 입주업체 수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높음*
		•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당시 계획 입주업체 수	각 대학 또는 지자체	낮음
고용량 달성률	높음	• 캠퍼스혁신파크 내 총 고용자 수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높음*
		•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당시 계획 고용자 수	각 대학 또는 지자체	낮음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누계생산액	높음	• 캠퍼스혁신파크 입주 기업들의 입주 후 총 생산 금액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높음*
누계수출액	높음	• 캠퍼스혁신파크 입주 기업들의 입주 후 총 수출 금액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높음*
창업기업 생존율	높음	• 캠퍼스혁신파크 내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기업 생존율	각 대학 또는 지자체	낮음
창업기업가 만족도	중간	• 캠퍼스혁신파크 운영에 대한 창업기업가들의 만족도 조사 자료	설문조사	낮음

* 향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를 통해 자료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2023년 현재 대부분의 캠퍼스혁신파크가 조성 이전이므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분석이 어려움

17)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은 국가혁신클러스터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고, 혁신도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기존의 산업단지, 특구 등 주요 지역 거점을 연계하고, 역량을 집결하여 민간투자 및 유망 신사업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대단위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류승한, 2018)
 -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부산 포함)에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어 있음
-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성과에 대한 기존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국토교통부(2020)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보고서 상의 혁신성장의 효과 부문의 지표들이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총 고용량, 청년층 취업, 상용노동자, 특허출원건수 등은 혁신도시 사업만의 성과로 보기보다 혁신도시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의 평가 지표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혁신클러스터에 대한 평가 내용에는, 위 보고서에서 언급한 지표들 외에 해외수출계약 체결액,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 건수 및 투자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음(충청비즈, 2021),(아시아경제, 2022)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성과지표 및 그 측정방식을 설정 하면 [표 3-37]과 같음

[표 3-37] 유망신사업 거점지역 육성 지표 및 측정 방식: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과지표	측정 방식
총 고용량 증가율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고용자 수-이후 5년 평균 고용자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고용자 수 * 100
청년층 취업 증가율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청년취업자 수-이후 5년 평균 청년취업자 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청년취업자 수 * 100
상용노동자 증가율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상용노동자 수-이후 5년 평균 상용노동자 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상용노동자 수 * 100
특허출원건수 증가율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특허출원건수 -이후 5년 평균 특허출원건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특허출원건수 * 100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액 증가율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액 -이후 5년 평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액)/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액 * 100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 -이후 5년 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 * 100
해외수출계약 체결액	• 클러스터 내 기업의 해외수출계약 체결 총금액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 건수	•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건수
클러스터 내 기업 투자금액	• 클러스터 내 기업 투자 총금액

○ 한편, 국가혁신클러스터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38]과 같음

[표 3-38] 유망신사업 거점지역 육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총 고용량 증가율	높음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전후 지역 총 고용자 수	전국사업체 조사	높음
청년층 취업 증가율	높음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전후 지역 청년층 취업자 수	경제활동 인구조사	높음
상용노동자 증가율	높음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전후 지역 상용노동자 수	경제활동 인구조사	높음
특허출원건수 증가율	높음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전후 지역 특허출원건수	지식재산권 통계	높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적 증가율	높음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전후 지역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금액	국가연구 개발사업 통계	높음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높음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전후 지역 내 총생산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전후 지역 인구 수	통계청	높음
해외수출계약 체결액	높음	• 클러스터 내 기업의 해외수출계약 체결 총금액	각 지자체 또는 산업 통상자원부	낮음*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 건수	높음	•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건수	각 지자체 또는 산업 통상자원부	낮음*
클러스터 내 기업 투자금액	높음	• 클러스터 내 기업 투자 총금액	각 지자체 또는 산업 통상자원부	낮음*

* 개별 지자체에 대한 측정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 가능성이 높으나, 지자체 간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별도의 자료 수집 절차가 필요함

제3절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설계

1. 4대 키워드별 주요 정책 수단 식별

1) 키워드 1. 교육자유특구

-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통한 학교의 규제 개선과 대안학교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제도임
- 교육자유특구는 학교 설립, 운영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특별 구역을 의미 하며, 교육자유특구를 설정해 특구 내 초·중·고교 설립,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된다면 학생선발권, 교과 구성, 교원 채용, 재정지원, 설립 주체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가능함
 - 교육자유특구가 현실화되면 ‘지방 명문 초·중·고교’가 부활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연구소가 특구 내에 대안학교를 설립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캠퍼스형 고등학교, 스마트시티 학교, 대안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이 가능해질 것임
 - 교육자유특구는 학교 현장에서는 획일화된 교육 과정을 벗어나 각 지역 실정,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교 서열화 및 일부 지역의 우수 인재 집중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2023년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원안의 교육자유특구 설치 조항이 삭제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향후 별도의 설치 근거 법률 제정 시도가 있을 예정임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도 중 교육자유특구의 특성과 유사성을 보이는 사업(이하 ‘유사 사업’이라고 함)을 선정하고, 유사 사업에서 활용되었던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함

2) 키워드 2. 기회발전특구

- 기회발전특구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방주도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로써 상향식 제도 운영, 다양한 세제혜택과 요건 완화 등의 지원 내용을 포함함(‘2022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04.27.)
 - 근거 법률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3년 3월 2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정의함으로써 공간적 범위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함
- 동 법안 제23조제5항(「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할 수 있음)에 따라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적용이 가능함
- 동 법안 제23조제4항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함
- 기회발전특구의 특징을 종합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지정 구역에 입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세제혜택, 규제특례 적용,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도 중 기회발전특구의 유사사업을 선정하고, 유사 사업에서 활용되었던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함

3) 키워드 3. 지방투자

- 지방투자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정부, 2022.07.)
- 지방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유치를 통한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 유치를 위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속 지원하고자 함
 - 벤처투자 환경조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지역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펀드 조성 및 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엔젤투자허브를 운영하고자 함
- 과거 네거티브 방식의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은 수도권 기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 중심의 정책 필요성이 제기됨(조혜영 외, 2014),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정·시행됨
- 박재곤 외(2005)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는 수요·공급 창출을 통해 소득·생산을 증가시키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유치, 벤처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을 지방투자의 주요 내용으로 보고 이와 유사한 사업 및 연구, 법령자료 검토를 통해 지방투자 역량평가 지표를 구성하고자 함

4) 키워드 4. 공공기관 지방이전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정책구상 발표 후,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으로 추진되었으며, 2019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12.25.)

- 10개 혁신도시(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와 세종시, 개별이전을 포함하여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2018~2030)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이행 계획으로는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사업 추진’, ‘이전기관 지자체 협업을 통한 기업, 대학교 유치 촉진’, ‘이전 공공기관 오픈캠퍼스 과정 운영’ 등이 있음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관계부처합동, 2018)
 - 혁신도시 시즌1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협력 선순환체계가 부재하여 자체 발전동력이 미흡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이 일회성, 일방향이므로 지역발전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임
 - 따라서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지역 혁신주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혁신도시 사업의 성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혁신도시 사업의 성과 지표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지역 역량 평가 기준으로 삼고자 함

2. 정책수단별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후보군

1) 교육자유특구

(1) 유사 사업의 선정

- 교육자유특구와 같이 특정 지역 내 교육관련 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있음
 - (추진목적) 교육국제화특구는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적용됨
- (운영특례) 교과과정 및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0조(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교원의 자격, 수업 운영, 학년제, 교과용 도서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수업연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제11조(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등 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 (행·재정적 지원) 학교부지, 시설 건축, 학교 운영자금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5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국·공유 재산을 활용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19조(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등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함
- 교육자유특구와 교육국제화특구의 목적은 다르나, 적용 범위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것, 특구 내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특례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자유특구와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음
- 다만, 현재 교육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나 운영특례,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적으며, 교육자유특구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연구용역이 근시일 내에 완료될 예정임
- 교육자유특구와 교육국제화특구를 비교하면 [표 3-39]와 같음

[표 3-39] 교육자유특구 유사 사업 비교

구분	교육자유특구	교육국제화특구
근거 법률	미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추진 목적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통한 학교의 규제 개선과 대안학교 운영 활성화(대통령 인수위)	제1조(목적)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
적용 범위	미정	전국 시·도

구분	교육자유특구	교육국제화특구
운영특례	미정	제10조(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11조(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등
행·재정지원	미정	제15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제19조(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등

(2) 유사 사업의 성과 관련 선행연구 검토

- 홍영란 외(2017)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국제화특구 성과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교육국제화특구 성과 진단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제1주기 사업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제2주기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평가지표는 5개 평가영역, 12개 세부 평가영역, 24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첫 번째 평가영역은 ‘사업추진 성과’로 초·중·고 교육, 산업인력양성, 교육국제화 인프라 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국제화자율 시범학교 지정·운영 노력·실적 및 성과, 교육국제화 전담 교원 양성 노력·실적 및 성과, 글로벌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규제 완화 노력·실적 및 성과 등을 활용함
 - 두 번째 평가영역은 ‘지역 연계 및 기여도’이며 지역연계, 지역의 기존 인프라 활용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관계기관협의체 등) 구축·활용 실적 및 성과를 측정함
 - 세 번째 평가영역은 ‘예산 운용 성과’로,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함
 - 네 번째 ‘성과평가’ 부문으로는 성과평가 체제 구축 및 실시, 결과의 활용을 위한 평가 체제 구축 여부와 성과평가 및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사업의 성과향상 노력 정도를 측정함
 - 다섯 번째는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사업성과’ 부분으로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함

(3)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 후보군 도출

- 홍영란 외(2017)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성과지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사업의 성과 및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지역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는 [표 3-40]과 같음
 -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지역의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사 특구(교육국제화특구) 내 교육기관들이 양적·질적으로 해당 특구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됨

[표 3-40] 교육자유특구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 후보군 및 측정 방식

후보 지표	측정 방식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 수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초·중·고교) 수
글로벌 교육과정 실적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과정 수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과정의 다양성
글로벌 활동 및 프로그램 실적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활동 및 프로그램 수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활동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산업인력양성 실적	•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 수 •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교육국제화특구 참여자 만족도	•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운영자, 참여자 등) 만족도

- 한편,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41]과 같음

[표 3-41] 교육자유특구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 수	높음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 (초·중·고교) 현황 자료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	낮음*
글로벌 교육과정 실적	높음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과정 현황 자료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	낮음*
글로벌 활동 및 프로그램 실적	높음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활동 및 프로그램 현황 지표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	낮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산업인력양성 실적	높음	•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 현황 자료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	낮음*
		•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자료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	낮음*
특구 참여자 만족도	중간	•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만족도 조사 자료	설문조사	낮음

* 개별 지자체에 대한 측정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 가능성이 높으나, 지자체 간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별도의 자료 수집 절차가 필요함

2) 기회발전특구

(1) 유사 사업의 선정

-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지정 구역 내 입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세제혜택과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을 들 수 있음
-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비수도권의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관계 중앙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 (추진목적)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적용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도에 적용될 수 있음
 - (세제 혜택)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감면과 제 지원(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의 사용료, 하천 점용료, 하천수 사용료 등)이 가능함(동법 제96조)
 - (규제 특례) 메뉴판식 규제특례(특구사업자에게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법령 미비 등의 사유로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규제 신속확인(동법 제85조), 실증특례(동법 제86조), 임시허가(동법 제90조)
 - (행·재정적 지원) 법령 미비 등의 사유로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규제 신속확인(동법 제85조), 실증특례(동법 제86조), 임시허가(동법 제90조)등의 지원이 가능함
-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동법 제2조)'으로서 동법 제4조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곳을 말함
- (추진목적) 연구개발특구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동법 제1조)
 - (적용범위) 연구개발특구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법률상 지역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는 않음
 - (세제 혜택) 연구개발특구사업의 개발 시행자 및 입주 연구소기업 및 첨단 기술기업은 동법 제14조에 따라 세제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 (규제 특례) 연구개발특구 입주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은 제15조 및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각종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행·재정적 지원) 동법 제16조의4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동법 제2조)’으로서 동법 제4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곳을 말함
- (추진목적)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동법 제1조)
 - (적용 범위)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법률상 지역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는 않음
 - (세제 혜택) 경제자유구역사업의 개발 시행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14조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며, 입주 기업은 동법 제16조에 따라 세제 및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규제 특례)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은 제17조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으며, 제24조의3에 따라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을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재정적 지원) 동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동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등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각 사업의 목적은 다르나, 적용 범위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것,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특례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회발전특구와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기회발전특구와 3개 유사 사업을 비교하면 [표 3-42]와 같음

[표 3-42] 기회발전특구 유사사업 비교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근거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예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추진 목적	지방주도의 특화산업 선정·개발을 통한 기업과 개인의 지방이전 촉진 및 민간자본을 활용한 지역 균형발전	제1조(목적)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	제1조(목적) : 지역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상호협력 활성화,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	제1조(목적) :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 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외국인투자자 기업 유치를 촉진
적용 범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비수도권 시·도	전국 시·도	전국 시·도
세제 혜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법인세, 기업승계세 등 완화	제96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규제특례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각 조항	제15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행정·재정지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 산업기반시설 우선 설치, 펀드 조성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등

(2) 유사 사업의 성과 관련 선행연구 검토

가. 규제자유특구 성과 관련 선행연구

- 이재훈 외(2021)는 특구 성과목표에 적합한 지표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만의 고유 성과지표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연 달성 성과지표’와 ‘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를 나누어 제시함
 - 당연 달성 성과지표로는 규제유예 수, 신규 채용 수 등으로 구성되며 당연히 달성 가능한 지표로 분류함
 - 성과 목표 관련 지표로는 유의미한 실증 수행 여부, 관련 법령 개정·폐지 건수, 그 외 관련 노력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이 지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규제특례와 지역균형발전의 목표를 분리하여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성과 목표 분리 방안’과 ‘정량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실증 수행 완료 여부 및 소요 시간, 법령 정비 여부 수, 실증 결과 기반 시제품 제작 건수 등과 ‘정성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지자체 유관 사업과의 상승효과, 지자체 기존 산업과의 상승효과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함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평가(정기적 또는 수시평가)의 주요 내용을 고시해야 함
 - 법제처²⁹⁾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평가 시 고려사항으로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 규제특례 등의 활용실적 및 효과, 사업 추진 성과 및 달성도를 제시함
 - 최근 중소벤처기업부(2023)에서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4년 성과 평가 자료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성과를 규제혁신, 기술혁신, 지역혁신 성과로

29)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39&ccfNo=1&cciNo=3&cnpcClsNo=3&menuType=cnpccls&search_put=%EAB7%9C%EC%A0%9C%EC%9E%90%EC%9C%A0%ED%8A%B9%EA%B5%AC)

나누었으며, ‘규제혁신’의 경우 특례부여 건수, 규제법령 정비 건수, 임시허가 건수, ‘기술혁신’의 경우 특허 건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수상 이력, ‘지역혁신’의 경우 투자유치 금액, 매출액, 일자리 창출 건수, 정규직 비중, 기업유치 건수 등을 세부 측정 항목으로 제시함

나. 연구개발특구 성과 관련 선행연구

- 강영주(2013)는 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성과와 지역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4개 분야(지역 경제력, 혁신역량, 삶의 질, 사회제도적 기반)로 구분하고 18개 부문, 75개 항목을 선정함
 - 지역 경제력 평가 지표는 경제성, 생산성, 인력, 산업구조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체수 증가율, 종사자수 증가율, 경제활동인구 변화율, 특화산업 사업체수 집적도 변화, 특화산업 매출액 집적도 변화 등으로 구성됨
 - 혁신역량 평가 지표는 특구 내 기업 R&D 인력 증감, 혁신지원기관수,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되어 지식 투입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삶의 질 기반 평가를 위한 지표로는 경제, 안전, 교통, 교육, 편의 등으로 나뉘며 1인당 지방세/소득, 종합병원 수, 교통 접근성, 교통 혼잡도, 문화시설, 녹지/공원, 대학진학률 등이 있음
 - 사회제도적 역량 평가 지표로는 자율성, 개방성, 안정성, 지원 의지 등으로 나누어지며 노사관계 안정성, 지역 내 밸류체인 구비 정도, 산학연 기술 및 교육훈련, 금융기관 자본조달 용이성 등이 있음
- 이인우 외(2016)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성향점수매칭법(PSM,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여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가 특구 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매출액 증대 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
 - 성과 평가를 위해 매출액 증가율, 연구개발비 증가율, 종업원 수 증가율을 사용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매출액, 연구개발비,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확보함
 - 평가요소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반영이 필요한 부분으로 기술기반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민간 참여 확대 지원, 기업 간 협력(네트워크) 등이 제시됨

다. 경제자유구역 성과 관련 선행연구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지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함(2021.12.20.)
- 활용된 주요 지표는 입주사업체 수, 외국투자기업 수, 전체 고용인원, 전체 입주사업체 매출액, 연구개발비 지출액, 총 매출액, 중점 유치산업 사업체 수, 수출액, 투자액 등이 있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
 - 그 외 정성 평가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현장점검, 실무자 면담, 기관장 면접 등을 통해 수집함

라. 유사사업 공통 성과지표의 특성

- 유사사업의 공통된 성과지표는 주로 특구로 인한 지역의 일자리 및 경제력 파급 효과 및 특구 자체의 성과와 관련되어 있음
 - 특구로 인한 지역의 일자리 및 경제력 파급 효과는 특구가 속한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사업체수 증가율, 지역 내 기업종사자수 증가율, 경제활동인구 변화율 등으로 측정 가능함
 - 특구 자체의 성과는 입주 사업체 수(또는 최초 계획 대비 사업체 입주 완료율), 특구 전체 고용인원 규모, 전체 입주사업체의 평균 매출액(또는 증감률), 연구개발비 평균 지출액(또는 증감률) 등으로 측정 가능함

(3)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 후보군 도출

- 유사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기회발전특구사업의 성과 및 지역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는 [표 3-43]와 같음

[표 3-43] 기회발전특구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 후보군 및 측정 방식

후보 지표	측정 방식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100 *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주민등록인구
지역 내 사업체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지역내사업체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사업체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사업체 수 평균 * 100
지역 내 종사자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지역내기업종사자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기업종사자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기업종사자 수 평균 * 100
지역 내 총인구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지역내총인구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총인구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총인구 수 평균 * 100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지역내경제활동인구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경제활동인구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경제활동인구 수 평균 * 100
사업체 입주 완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기준 유사 특구 입주 완료 총 사업체 수 / 최초 입주 계획된 사업체 수 * 100
고용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특구 내 전체 입주기업의 고용인원 수
평균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특구 내 전체 입주기업의 평균 매출액
연구개발비 평균 지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특구 내 전체 입주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

- 특구로 인한 지역 일자리 및 경제력 파급효과 후보군은 대부분이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없고 비교적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므로 지표의 명확성과 측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됨
- 다만, 각 특구의 관련조직(위원회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측정 가능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 기회발전특구와 유사 사업의 성과 정보에 대해 공시하고 있는 기관 및 홈페이지,
- 그리고 공시 중인 성과 정보는 다음과 같음
 - (규제자유특구)
 - 홈페이지 : rfz.go.kr

- 공시자료 : 홈페이지를 통해 특구 현황, 특례부여 현황 등을 공개함
- (연구개발특구)
 - 홈페이지 : www.innopolis.or.kr
 - 공시자료 :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체 수, 매출액, 고용현황, 총연구개발비, 국내특허등록수(누적), 해외특허등록수(누적), 코스닥 등록기업 수, 연구소 기업 수, 첨단기술기업 수, 기술이전 금액/기술이전 건수 등이 공개 (2021.12. 기준)되어 있고 2007-2018년 데이터는 '통계자료 신청' 메뉴를 통해 연도별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
 - 홈페이지 : www.fez.go.kr
 - 공시자료 : KOSIS를 통해 2017년부터의 데이터를 연도/구역별로 나누어 제공하며 입주사업체, 고용, 매출, 매입, 산업구조, 투자, 생산, 물류, 연구개발, 인센티브 현황을 공개함

[표 3-44] 기회발전특구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증가율	높음	• 유사특구 설치 전후 3년 간 지역내총생산 금액	KOSIS	높음
		• 유사특구 설치 전후 3년 간 주민등록 인구	KOSIS	높음
지역 내 사업체 증가율	높음	• 유사특구 설치 전후 3년 간 지역 내 사업체 수	KOSIS	높음
지역 내 종사자 증가율	높음	• 유사특구 설치 전후 3년 간 지역 내 기업 종사자 수	KOSIS	높음
지역 내 총인구 증감률	높음	• 유사특구 설치 전후 3년 간 주민등록 인구	KOSIS	높음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증감률	높음	• 유사특구 설치 전후 3년 간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수	KOSIS	높음
사업체 입주 완료율	높음	• 최초 입주계획 사업체 대비 수 입주 완료 총사업체 수	유사특구 홈페이지	높음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고용 규모	높음	• 특구 내 입주기업의 고용인원 수	유사특구 홈페이지	높음
평균 매출액	높음	• 특구 내 입주기업의 평균 매출액	유사특구 홈페이지	높음
연구개발비 평균 지출액	높음	• 특구 내 전체 입주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	유사특구 홈페이지	높음

3) 지방투자

(1) 유사 사업의 선정

- ‘지방투자’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유치, 그리고 벤처투자 환경조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함
-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유치측면에서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이 있음
 -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120대 국정과제 중 115대 세부 내용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지속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점, 적용범위 및 보조금 지급 내용의 유사성, 사업의 궁극적 추진 목적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 대상 사업으로 선정함
-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며, 지방에 신·증설하는 기업과 수도권 기업이 지방이전 등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설비보조금과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추진배경)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동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7조)
 - (추진목적) ‘국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을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동법 제1조)

- (적용범위) 제8조(지원대상)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 기업, 지방에 사업을 신·증설하려는 기업, 상생형일자리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대상이며, 적용 가능한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임 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소비성 서비스업) 및 제60조의2제1항(부동산업 및 건설업)은 제외함
 - (지원범위) 산업통상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구분(균형발전 상·중·하, 균형발전 상위지역), 보조금 유형(입지, 설비),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동법 제14조, 별표5)
 - (보조금 및 인센티브) 동법 제13조(지원내용)에 따르면 토지 매입을 위한 입지보조금, 설비 투자를 위한 설비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제14조2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으로 벤처투자 환경조성 측면에서는 중소, 벤처기업의 활성화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조성하여 기업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 사업으로 중소기업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사업이 있음
- 중소기업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사업은 공간적 범위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소, 벤처기업의 활성화라는 목적의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검토 대상 사업으로 선정함

(2) 유사 사업의 성과 관련 선행연구 및 선행지표 검토

가. 유사사업 관련 성과지표

-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사업의 실적, 타당성,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 등을 위한 평가 기준을 별표 및 서식에 제공함
- 사업실적평가는 보조금 지급 기업의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율,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을 활용함(동법 제2조5항)

- 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한 주요 내용은 사업실적 평가(상등)지표를 포함하고, 투자계획 평가(신규투자금액, 투자자금조달, 사업성 분석, 투자기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가점(벤처기업, ESG인증기업, 균형발전하위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등)으로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매년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22조6항), 해당 보고서에 활용되는 지표는 사업이행여부, 국비 정산금액, 지방비 정산금액, 투자금액(계획/결과 별도기재), 신규 고용인원(계획/결과 별도기재), 매출액, 총 고용인원,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등이 있음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2020)에서는 중소기업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함

- 위 연구는 매년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주)한국벤처투자에서 그 운용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펀드별 평가 대상, 항목, 방법 등을 모두 다르게 설계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수행됨
- 모태펀드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는 모태펀드의 운영 평가와 모태펀드의 투자 평가로 나뉘며, 모태펀드 운영평가는 미래성장사업 육성, 시장실패영역(사업) 투자, 사후관리 및 운용 프로세스 개선 등의 목표 달성 정도를, 모태펀드의 투자평가는 VC산업 활성화, VC산업 선진화 지원, 투자기업의 성장 및 수익성 등에 대해 평가함

나. 유사사업 성과지표의 특성

○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및 중소기업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자금의 출처, 투자 주체 및 방식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나, 최종적으로는 보조를 받거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양적, 질적 성장을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됨

- 이러한 성과지표는 투자 기업의 매출액, 고용증가율, 정규직 증가율, 부채비율 등임

- 지역에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지방투자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주력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등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

(3)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 후보군 도출

- 유사 사업의 공통 평가지표를 종합 검토하여 지방투자 사업의 성과 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 및 그 측정방식을 구성하면 [표 3-45]와 같음

[표 3-45] 지방투자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 후보군 및 측정 방식

후보 지표	측정 방식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 (당해연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총 매출액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 * 100
투자 대상 기업의 부채 증가율	• (당해연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총 부채액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부채액)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부채액 * 100
투자 대상 기업의 고용 증가율	• (당해연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총 종사자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종사자)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종사자 * 100
투자 대상 기업의 정규직 증가율	• (당해연도 투자 대상 기업의 정규직 수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정규직 수)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정규직 수 * 100
지역주력산업 기업 투자비중	• 지역별 지역주력산업 기업 투자액 / 지역별 총 투자액 * 100
창업초기기업 투자비중	• 지역별 창업초기기업(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투자액 / 지역별 총 투자액 * 100

- 한편,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용이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표 3-46]과 같음

[표 3-46] 지방투자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 후보군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높음	• 유사사업의 지역별 최근 2년 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총 매출액	유사사업 주관기관	낮음
투자 대상 기업의 부채 증가율	높음	• 유사사업의 지역별 최근 2년 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총 부채액	유사사업 주관기관	낮음

구분	지표의 명확성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지표의 측정용이성
투자 대상 기업의 고용 증가율	높음	• 유사사업의 지역별 최근 2년 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총 종사자 수	유사사업 주관기관	낮음
투자 대상 기업의 정규직 증가율	높음	• 유사사업의 지역별 최근 2년 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총 정규직 수	유사사업 주관기관	낮음
지역주력산업 기업 투자비중	높음	• 유사사업의 지역별 지역주력산업 기업 투자액	유사사업 주관기관	낮음
		• 유사사업의 지역별 총 투자액(이하 중복 생략)	유사사업 주관기관	낮음
창업초기기업 투자비중	높음	• 유사사업의 지역별 창업초기기업(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투자액	유사사업 주관기관	낮음

4) 공공기관 지방이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사업의 일부 내용으로 속해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지역경쟁력은 기존의 혁신도시 사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했는가로 평가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도전과제에 대한 지역경쟁력 지표로 혁신도시 사업에서의 성과지표를 활용함(p.88-91 참조)

제4장

지표 우선순위 및 측정타당성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지방시대 상위 목표 및 정책수단
우선순위 검토

제3절 지방시대 지표 간 우선순위 및
측정타당성 검토

제1절 개요

1. 검토 목적

-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지방시대 지표후보군에 대하여 각 정책수단별 지표 우선순위 및 개별 지표에 대한 측정타당성에 대해 검토함
 - 각 정책수단별 지표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관리해야 할 지표의 중요도를 식별하기 위함임
 - 개별 지표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측정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또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지표에 의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정성적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측정 내용의 타당성(Content validity)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수행함³⁰⁾

2. 검토 과정 및 내용

- 지방시대 지표 우선순위 검토 과정
 -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지표 후보군에 대하여 분석적 계층화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변형하여 적용함
 - AHP는 전문가들의 지식에 기반한 정성적 판단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분석이

30) 타당성 검토는 내용 타당성 이외에도 내적 일관성 및 신뢰성 분석, 수렴 타당성, 판별 타당성에 따라 검토될 수 있으며, 이 중 내용 타당성을 제외한 나머지 타당성은 정량적 분석에 의해 검증될 수 있음(강동석·유시형, 2009). 본 연구의 경우 정량적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성적 분석을 통한 내용 타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함

- 곤란한 경쟁적인 지위에 있는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기준의 중요도 또는 가중치를 구하는 분석방법임
-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수의 의사결정 목표 또는 기준을 계층화하고 이를 다시 주요인과 그 요인을 이루는 세부 항목들로 분해한 후 요인 및 항목 간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수행해야 함
 - AHP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목표 또는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이나, 하나의 계층에 존재하는 n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nC2$ 회의 쌍대 비교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항목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문가 집단의 판단 시간 및 피로도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은 17개, 도전과제 정책수단은 4개이기 때문에 핵심과제 정책수단들에 대해서는 136회, 도전과제 정책수단들에 대해서는 6회의 쌍대비교가 필요함
 -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책지표 후보군의 개수는 총 118개이며, 하나의 정책수단에 대한 지표 후보군의 개수가 최소 3개에서 10개로 하나의 정책수단에 대해 최소 3회에서 최대 45회의 쌍대비교를 수행해야 함
 - 본 연구진은 본 연구 수행에 있어 엄격한 AHP 방식을 적용할 시, 전문가 집단의 판단 시간 및 피로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오히려 연구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AHP 방식을 변형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쌍대 비교가 아닌 지표 간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였음
 - 예를 들어, A라는 정책수단에 정책지표 후보군이 10개인 경우, 전문가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적어 제출함
 - 전문가 집단에 대한 조사 결과가 취합된 후에는 개별 지표에 대해 1순위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수, 2순위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수, 3순위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수를 구하고, 각각의 수에 임의의 가중치를 곱하여 총합산값(이하 '지표 중요도'라 함)을 구함
 - 위에서 1순위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수, 2순위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수, 3순위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수에 임의의 가중치를 곱한 이유는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총 합산값에도 반영하기 위함임

- 다만, 구체적인 가중치의 값은 연구진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1순위에는 5, 2순위에는 3, 3순위에는 1을 적용함

[그림 4-1] 지표 중요도 산출 공식

$$\text{○ 지표 중요도} = 1\text{순위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수} * 5 + 2\text{순위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수} * 3 + 3\text{순위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수} * 1$$

- 지표 중요도 값은 정책수단별 1순위 및 2순위 지표를 식별하여 지방시대 압축(compact) 지표체계를 설계하는 데 사용됨
- 지방시대 지표 측정타당성 검토 과정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측정 내용의 타당성(Content validity)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본 연구진은 전문가들에게 개별 지표에 대해 측정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각 전문가들은 지표별로 측정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1,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하였음
 - 개별 지표의 측정타당도는 전문가들의 응답값 합산 점수를 총 전문가 수로 나눈 백분율로 산정함

[그림 4-2] 지표 측정타당도 산출 공식

$$\text{○ 지표 측정타당도} = \text{전문가 응답값 합산 점수} / \text{총 전문가 수} * 100$$

- 개별 지표의 측정타당도는 해당 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나타난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자문을 수행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됨
- 지방시대 정책지표 전문가 조사 내용
 - 전문가 조사 내용은 크게 지방시대 목표 간 우선순위 및 목표실현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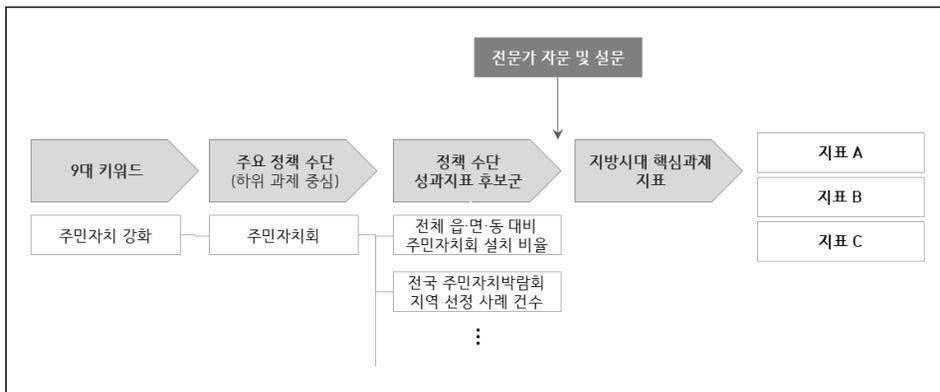
정책수단 간 우선순위 조사,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별 지표 후보군 우선순위 조사, 지방시대 도전과제 정책수단별 지표 후보군 우선순위 조사 등 총 3부분으로 나누어 수행되었음

- 설문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부록>의 내용을 참고 바람

3. 검토 결과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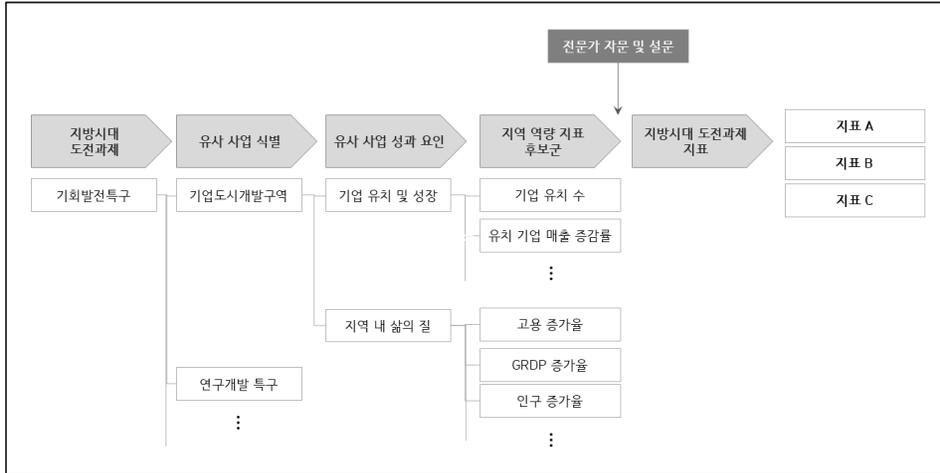
-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확정) 지표 후보군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및 설문을 통해 지표의 측정 타당성을 제고하여, 각 정책수단별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를 확정함

[그림 4-3]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의 확정 과정



-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확정) 지표 후보군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및 설문을 통해 지표의 측정 타당성을 제고하여, 각 정책수단별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를 확정함

[그림 4-4]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의 확정 과정



- (지방시대 간소화 지표체계 구성) 지표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1순위 및 2순위 지표들로 구성된 간소화 지표체계를 구성함

4. 전문가 집단

- 지방시대 정책지표 전문가 조사에는 지방행정, 정책수단, 지표 설계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 중 연구진이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한 총 13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음
- 지방시대 정책지표 전문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비수도권(부산 포함) 소재 대학 교수 5명, 수도권소재 대학 교수 1명, 국책연구기관 소속 박사급 연구인력 3명, 기타 연구기관 소속 박사급 연구인력 4명으로 구성됨

[표 4-1] 전문가 조사 참여 인력 개요

구분	소속	직위
전문가 1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전문가 2	동아대학교	교수
전문가 3	충북대학교	교수
전문가 4	수원대학교	교수
전문가 5	서울대학교	박사급 연구인력
전문가 6	서울대학교	박사급 연구인력
전문가 7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전문가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급 연구인력
전문가 9	경기연구원	박사급 연구인력
전문가 10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전문가 11	서울대학교	박사급 연구인력
전문가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급 연구인력
전문가 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급 연구인력

제2절 지방시대 상위 목표 및 정책수단 우선순위 검토

1. 지방시대 상위 목표 간 우선순위

- 윤석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지방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의 거시적인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로 해석될 수 있음
- ‘지방시대’를 구성하는 두 가지의 상위 목표 간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발전’이 ‘지방자치강화’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30.8%의 전문가들이 지역발전보다 지방자치강화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69.2%의 전문가들은 지방자치강화보다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2.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간 우선순위

1)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 지방시대 목표 중 ‘지방자치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총 17개) 간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4-2]와 같음
 - 17개 정책 수단 중 ‘지방자치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1순위), ‘자주재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2순위), ‘정보공개 강화 (현금성 복지사업, 의정 활동 중심)’(3순위)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책 수단으로 조사되었음

[표 4-2]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주민자치회	1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2
정보공개 강화 (현금성 복지사업, 의정활동 중심)	3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4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	5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6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7
규제혁신	7
지방연구원 육성(설립 포함)	9
청년창업 지원	10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	11
로컬브랜드 육성	11
연어형지역인재 정착지원	11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	11
혁신도시	11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 거점	11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	11

2)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 지방시대 목표 중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총 17개) 간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4-3]과 같음
 - 17개 정책 수단 중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1순위),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2순위), ‘혁신도시’(3순위)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책 수단으로 조사되었음

[표 4-3]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	1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	2
혁신도시	3
로컬브랜드 육성	4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5
규제혁신	5
연어형지역인재 정착지원	7
정보공개 강화 (현금성 복지사업, 의정활동 중심)	8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	9
지방연구원 육성(설립 포함)	10
청년창업 지원	10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 거점	10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13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	13
주민자치회	15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15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15

3. 지방시대 도전과제 정책수단 간 우선순위

- 지방시대 도전과제 정책수단(총 4개) 간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4-4]와 같음
- 4개 정책 수단 중 ‘지방투자’(1순위), ‘기회발전특구’(2순위), ‘공공기관지방이전(2차)’(3순위), ‘교육자유특구’(4순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정책 수단으로 조사되었음

[표 4-4] 지방시대 도전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지방시대 도전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지방투자	1
기회발전특구	2
공공기관 지방이전(2차)	3
교육자유특구	4

제3절 지방시대 지표 간 우선순위 및 측정타당성 검토

1.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우선순위 및 측정타당성 검토

1)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별 지표 우선순위

- 총 17개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별 지표 중요도를 산정한 결과는 [표 4-5]와 같음
 - 각 정책수단별 1순위와 2순위 지표를 추출하여 지방시대 콤팩트(compact) 지표체계를 구성함

[표 4-5]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별 지표 후보군 우선순위 검토 결과

정책수단명	지표명	우선순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평균 참여 주민 수	1
	주민총회 평균 개최 횟수	2
	주민자치 조례 제정률	3
	주민자치회 전환률	4
	주민자치회 평균 추진 사업 건수	5
	주민자치위원 만족도	6
	공무원 만족도	7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인사교류	인사교류 건수	1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횟수	2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만족도	3
	인사교류에 대한 교육청 공무원 만족도	4
	인사교류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만족도	5
자주재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지방세 증감율	1
	신규 세원 발굴 노력	2
	세외수입 증감율	3
	전문부서 지정 및 인력운영	4
	체납세 금액 증감율	5
	체납세 건수 증감율	6
	공청회 및 교육 건수	7

정책수단명	지표명	우선순위
정보공개 (현금성 복지사업, 의정활동 중심) 강화	지방의회 정보 공개 수준(양적)	1
	현금성복지사업 정보 공개 수준	2
	지방의회 정보 공개 수준(질적)	3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도	1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품질	2
	교육에 대한 고위공무원 만족도	3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인사교류 건수	1
	인사교류 개인 만족도	2
	인사교류 기관 만족도	3
지방연구원 육성 (설립 포함)	지방자치단체 정책 반영률	1
	1인당 평균 연구과제 수	2
	연구 성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만족도	3
	1인당 평균 연구보고서 수	4
	1인당 협동연구 실적	5
	워크숍·세미나 실적	6
	1인당 학회발표 실적	7
규제혁신	혁신 필요 규제사무 발굴 건수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2
	규제사무 혁신 추진율	3
	규제혁신에 대한 지역기업 만족도	4
	규제혁신에 대한 주민 만족도	5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	수혜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1
	수혜기업 신규고용 규모	2
	수혜기업 투자수익률	3
	주력산업 특화성	4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4
	주력산업 경쟁도	6
	주력산업 다양성	7
로컬브랜드 육성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예산	1
	신규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건수	2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발굴 건수	3
	로컬브랜드상권에 대한 이해관계자 만족도	4
	로컬브랜드상권에 대한 주민 만족도	5
	로컬브랜드 육성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횟수	6

정책수단명	지표명	우선순위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	지역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1
	참여기관 공동운영 교육프로그램 수	2
	핵심분야 관련 기술이전 수	3
	핵심분야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4
	정보 공유 및 활용 시스템	5
	참여기관 간 협약 체결 수	6
	핵심분야 관련 창업기업 수	6
	핵심분야 관련 국내외 논문 및 특허 수	8
	핵심분야 관련 R&D 참여 학생 수	9
	핵심분야 관련 창업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10
연어형지역인재 정착지원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대상자 수	1
	1인당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의 만족도	3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다양성	4
창업전문 훈련기관 육성	창업훈련기관의 수	1
	경험 중심 창업훈련프로그램	2
	창업훈련프로그램 수료자 수	3
	창업훈련프로그램 수료자 만족도	4
청년창업 지원	청년창업지원 대상자 수	1
	1인당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전주기성	3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의 만족도	4
혁신도시	계획대비 인구달성률	1
	정주인프라 구축 수준	2
	정주환경 만족도	3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 분양률	3
	이전공공기관 가족동반이주율	5
	혁신도시 인구 평균 연령	6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 거점	기업 유치율	1
	창업기업 생존율	2
	고용량 달성률	3
	지구 조성 상태	4

정책수단명	지표명	우선순위
	누계생산액	5
	분양률	6
	창업기업가 만족도	7
	누계수출액	8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	총 고용량 증가율	1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 건수	2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3
	청년층 취업 증가율	4
	클러스터 내 기업 투자금액	4
	상용노동자 증가율	6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액 증가율	7
	특허출원건수 증가율	8
	해외수출계약 체결액	9

2)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측정타당성 검토 결과

- 총 101개의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후보군 중 측정타당도가 80% 미만으로 조사된 지표는 총 9개로 조사됨([표 4-6] 참조)

[표 4-6] 측정타당도 기준 미달 지표

정책수단명	지표명	측정 방식	측정타당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조례 제정률	•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한 읍·면·동 개수/ 총 읍·면·동 개수 * 100(%)	76.9%
	공무원 만족도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읍·면·동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정도	61.5%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인사교류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만족도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내용 만족도	69.2%
자주재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전문부서 지정 및 인력운영	• 자주재원 확충 관련 부서의 구성원 인원 수 합계	61.5%
	신규 세원 발굴 노력	• 신규 세원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 정도(기존의 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 사용자 현실화 등 포함)	76.9%

정책수단명	지표명	측정 방식	측정타당도
지방연구원 육성 (설립 포함)	워크숍·세미나 실적	• $\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워크숍·세미나 개최건수}) / \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수}$	76.9%
	1인당 학회발표 실적	• $\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국내외 학회발표 건수}) / \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76.9%
	연구 성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만족도	• 지방연구원 연구 성과의 내용, 공유 방식, 정책활용성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만족 정도	69.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가족동반이주율	• 가족동반이전 직원 수 / 이전공공기관 직원 수 * 100	76.9%

○ 측정타당도 기준에 미달한 9개 지표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표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 측정방식을 수정함(표 4-7 참조)

[표 4-7] 측정타당도 기준 미달 지표 관련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및 반영 내용

정책수단명	지표명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및 반영 내용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조례 제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조례 제정 주체가 시·군·구임을 고려하고 지표 측정 방식 수정 필요 • (반영 구분 및 내용) [측정방식 변경] (변경 전)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한 읍·면·동 개수 / 총 읍·면·동 개수*100(%) ⇒ (변경 후)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 개수 / 총 시·군·구 개수 *100(%) • (기타 의견) 위 측정 방식은 광역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하며,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이 지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조례 제정 여부를 측정해야 함
	공무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읍·면·동 공무원 전체가 아닌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만족도 측정 필요 • (반영 구분 / 반영 내용) [측정방식 변경] (변경 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읍·면·동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정도 ⇒ (변경 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주민자치회 업무 담당 읍·면·동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정도

정책수단명	지표명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및 반영 내용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만족도 조사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만족도 조사 내용에 대한 간략한 예시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 (반영 구분 / 반영 내용) [측정방식 변경]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내용 만족도 ⇒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성과(상호 이해 증진, 교육 협력 증대, 지자체 교육 관련 업무의 효율성, 교육 경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만족도
자주재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전문부서 지정 및 인력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① 전문부서 지정과 인력운영은 별개의 측정 지표가 필요하며, '인력'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음 ② 지표명의 '전문부서'라는 단어는 독립부서 창설을 요구하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담부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영 구분 / 반영 내용) [측정방식 변경] (변경 전) 자주재원 확충 관련 부서의 구성원 인원 수 합계 ⇒ (신규 추가) 자주재원 확충 전담 부서 지정 여부, (측정 방식 변경) 자주재원 확충 관련 업무 담당 인력 수 합계, [지표명 변경] (변경 전) 전문부서 지정 및 인력운영 ⇒ (변경 후)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운영
	신규 세원 발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① 신규 세원발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② 신규 세원의 적절한 예시 제시 필요 • (반영 구분 / 반영 내용) [측정방식 변경] 신규 세원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 정도(기존의 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 사용자 현실화 등 포함) ⇒ 신규 세원(관광세, 광고세 등)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증가액(기존의 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 사용자 현실화 등도 포함)
지방연구원 육성 (설립 포함)	워크숍·세미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지자체와의 연구 성과 공유 등 워크숍 및 세미나의 목적을 한정할 필요 • (반영 구분 / 반영 내용) [측정방식 변경] \sum(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워크숍·세미나 개최건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수 ⇒ \sum(지자체 대상 연구 성과 공유 워크숍·세미나 개최건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수
	1인당 학회발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연구원 수행과제 결과 공유 등 학회발표 목적을 한정할 필요 • (반영 구분 / 반영 내용) [측정방식 변경] \sum(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국내외 학회발표 건수)/ \sum(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 \sum(연구원 수행과제 관련 국내외 학회발표 건수)/ \sum(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정책수단명	지표명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및 반영 내용
	연구 성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지방자치단체 정책 반영률' 지표와 측정 개념 상 중복성이 높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음 • (반영 구분 / 반영 내용) [지표 삭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1인 가구 등을 고려하여 가족이 있는 직원에 한하여 지표를 구성할 필요 • (반영 구분 / 반영 내용) [측정방식 변경] 가족동반이전 직원 수/이전공공기관 직원 수 * 100 ⇒ 가족동반이전 직원 수/이전공공기관 내 가족이 있는 직원 수 * 100

2.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우선순위 및 측정타당성 검토

1) 지방시대 도전과제 정책수단별 지표 우선순위

- 총 4개 지방시대 도전과제 정책수단별 지표 중요도를 산정한 결과는 [표 4-8]과 같음
 - 각 정책수단별 1순위와 2순위 지표를 추출하여 지방시대 콤팩트(compact) 지표체계를 구성함

[표 4-8] 지방시대 도전과제 정책수단별 지표 후보군 우선순위 검토 결과

정책수단명	유사사업명	지표명	우선순위
교육자유특구	교육국제화특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산업인력양성 실적	1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 수	2
		글로벌 교육과정 실적	2
		글로벌 활동 및 프로그램 실적	4
		교육국제화특구 참여자 만족도	5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1
		지역 내 사업체 증가율	2
		지역 내 종사자 증가율	3
		사업체 입주 완료율	4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증감률	5
		연구개발비 평균 지출액	6

정책수단명	유사사업명	지표명	우선순위
		지역 내 총인구 증감률	7
		고용 규모	7
		평균 매출액	7
지방투자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중소기업 모태조합 (모태펀드) 출자사업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1
		투자 대상 기업의 고용 증가율	2
		지역주력산업 기업 투자비중	3
		투자 대상 기업의 부채 증가율	4
		투자 대상 기업의 정규직 증가율	5
		창업초기기업 투자비중	5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혁신도시	계획대비 인구달성률	1
		정주인프라 구축 수준	2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 분양률	3
		정주환경 만족도	3
		이전공공기관 가족동반이주율	5
		혁신도시 인구 평균 연령	6

2)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측정타당성 검토 결과

- 총 17개의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후보군 중 측정타당도가 80% 미만으로 조사된 지표는 총 3개로 조사됨([표 4-9] 참조)

[표 4-9] 측정타당도 기준 미달 지표

정책수단명	유사사업명	지표명	측정 방식	측정타당도
교육자유특구	교육국제화특구	글로벌 교육과정 실적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 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 과정의 다양성	69.2%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비 평균 지출액	• 유사 특구 내 전체 입주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	76.9%
공공기관지방 이전(2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가족동반이주율	• 가족동반이전 직원 수/ 이전공 공기관 직원 수 * 100	76.9%

- 측정타당도 기준에 미달한 3개 지표에 대해서는 해당 지표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 측정방식을 수정함([표 4-10] 참조)

[표 4-10] 측정타당도 기준 미달 지표 관련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및 반영 내용

정책수단명	유사사업명	지표명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및 반영 내용
교육자유특구	교육국제화특구	글로벌 교육과정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글로벌교육 과정의 다양성'이라는 측정지표에서는 '글로벌교육 과정의 수'와 차별적으로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방식이 드러나지 않음 • (반영 구분 및 내용) [측정방식 변경] (변경 전)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과정의 다양성 ⇒ (변경 후)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과정의 내용, 수준,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비 평균 지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연구개발특구 이외의 특구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부적절 • (반영 구분 및 내용) [지표 삭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가족동반이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 1인 가구 등을 고려하여 가족이 있는 직원에 한하여 지표를 구성할 필요 • (반영 구분 및 내용) [측정방식 변경] 가족동반 이전 직원 수/이전공공기관 직원 수 * 100 ⇒ 가족동반이전 직원 수/이전공공기관 내 가족이 있는 직원 수 * 100



제5장

결론

제1절 지방중심형 지방시대 지표체계

제2절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방안



제1절 지방중심형 지방시대 지표체계

1. 통합 지표체계 (Full Model)

-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지방중심형 지방시대 통합 지표체계는 다시 핵심과제 모형과 도전과제 모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지방시대 핵심과제 통합 지표체계는 [표 5-1]과 같음

[표 5-1] 지방시대 핵심과제 통합 지표체계

정책수단		정책지표		측정 방식
수단명	주관 부서	지표명	우선순위	
주민자치회	자치분권과	주민총회 평균 참여 주민 수	1	• \sum (당해 연도 읍·면·동 주민총회 1회당 평균 참석 주민 수) / 총 읍·면·동 개수
		주민총회 평균 개최 횟수	2	• \sum (당해 연도 읍·면·동별 주민총회 개최 횟수) / 총 읍·면·동 개수
		주민자치 조례 제정률	3	•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 개수 / 총 시·군·구 개수 * 100(%)
		주민자치회 전환률	4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읍·면·동 개수 / 총 읍·면·동 개수 * 100(%)
		주민자치회 평균 추진 사업 건수	5	• \sum (당해 연도 읍·면·동 주민자치회별 협력·위탁·주민자치 사업 수행 건수) / 총 읍·면·동 개수
		주민자치위원 만족도	6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주민자치위원들이 만족하는 정도
		공무원 만족도	7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주민자치회 업무 담당 읍·면·동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정도

정책수단		정책지표		측정 방식
수단명	주관 부서	지표명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인사교류	인사과	인사교류 건수	1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건수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횟수	2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횟수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만족도	3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성과 (상호 이해 증진, 교육 협력 증대, 지자체 교육 관련 업무의 효율성, 교육 경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만족도
		인사교류에 대한 교육청 공무원 만족도	4	• 인사교류 방식, 횟수, 기간, 복귀 후 처우 등 운영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정도
		인사교류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만족도	5	• 인사교류 방식, 횟수, 기간, 복귀 후 처우 등 운영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정도
자주재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세정정책 담당관	지방세 증감율	1	• (당해년도 지방세 총 징수액-전년도 지방세 총 징수액)/ 전년도 지방세 총 징수액 * 100
		신규 세원 발굴 노력	2	• 신규 세원(관광세, 광고세 등)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증가액(기존의 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 사용자 현실화 등도 포함)
		세외수입 증감율	3	• (당해년도 세외수입 총액-전년도 세외수입 총액/ 전년도 세외수입 총액 * 100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운영	4	• 자주재원 확충 전담 부서 지정 여부(지정1, 미지정0) • 자주재원 확충 관련 업무 담당 인력 수 합계
		체납세 금액 증감율	5	• (당해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전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 전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 * 100
		체납세 건수 증감율	6	• (당해년도 지방세 체납 총 건수-전년도 지방세 체납 총 건수)/ 전년도 지방세 체납 총 건수 * 100
		공청회 및 교육 건수	7	• 자주재원 확충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착을 위한 공청회 (관계자 교육) 개최 건수
정보공개 (현금성 복지사업, 의정활동 중심) 강화	복지 급여 관련 부서 ³¹⁾ / 의회사무처	지방의회 정보 공개 수준(양적)	1	• 실제 정보공개 항목 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항목 수 (23개) * 100
		현금성복지사업 정보 공개 수준	2	• 지방재정365 상에 공개된 공통항목만 공개한 경우 0, 현금성 복지사업 세부 내역 및 예결산액까지 공개한 경우는 1
		지방의회 정보 공개 수준(질적)	3	• 지방의회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질적 평가 결과

정책수단		정책지표		측정 방식
수단명	주관 부서	지표명	우선순위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인사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도	1	• 고위공무원 역량 영역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품질	2	• 고위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점수
		교육에 대한 고위공무원 만족도	3	•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및 피드백 등 교육 영역 전반에 대한 고위공무원들의 만족도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인사과	인사교류 건수	1	•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건수 + 지방-지방 간 인사교류 건수
		인사교류 개인 만족도	2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제도 운영 및 인사교류를 통한 개인적 차원의 성과에 대해 인사교류 당사자가 만족하는 정도
		인사교류 기관 만족도	3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제도 운영 및 인사교류를 통한 기관 차원에서의 성과에 대해 인사교류 대상 기관 구성원들(인사교류 당사자 제외)이 만족하는 정도
지방연구원 육성 (설립포함)	기획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정책 반영률	1	• 지방자치단체 정책 반영 건수 / \sum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과제 수) * 100
		1인당 평균 연구과제 수	2	• \sum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과제 수) / \sum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1인당 평균 연구보고서 수	3	• \sum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보고서 수) / \sum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 연구보고서는 당해기관 당해연도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합계(ISBN은 1.5건으로 간주하여 가점)
		1인당 협동연구 실적	4	• \sum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국내·외 협동연구 건수) / \sum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워크숍·세미나 실적	5	• \sum (지자체 대상 연구 성과 공유 워크숍·세미나 개최 건수)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수
		1인당 학회발표 실적	6	• \sum (연구원 수행과제 관련 국내외 학회발표 건수)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규제혁신	규제혁신 추진단	혁신 필요 규제사무 발굴 건수	1	• 주민 불편 초래 규제, 기업 활동 저해 규제, 구시대적 규제 등 혁신이 필요한 규제사무의 발굴 건수

정책수단		정책지표		측정 방식
수단명	주관 부서	지표명	우선순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 완료된 자치법규 건수/ 전년도 통보된 정비대상 과제건수) * 100 ※ 정비 완료된 자치법규 건수: 당해연도에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 완료 및 공포(예정)된 건수 ※ 정비대상 과제건수: 행정안전부에서 전년도에 발굴 및 통보한 정비과제 건수
		규제사무 혁신 추진율	3	• (혁신완료 규제사무 수/ 혁신필요 규제사무 발굴건수) * 100
		규제혁신에 대한 지역기업 만족도	4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에 대한 지역기업의 만족도
		규제혁신에 대한 주민 만족도	5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지역주력산업 (기업) 지원	제조혁신과	수혜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1	• (수혜기업들의 수혜 후 3년 간 평균 매출액-수혜기업들의 수혜 전 3년 간 평균 매출액)/수혜기업들의 수혜 전 3년 간 평균 매출액 *100
		수혜기업 신규고용 규모	2	• 전체 수혜기업의 신규고용인원 누적 총 합계
		수혜기업 투자수익률	3	• (수혜기업들의 수혜 후 3년 간 평균 매출액-수혜기업들의 수혜 전 3년 간 평균 매출액)/수혜기업들에 대한 3년 간 평균 지원 총 금액
		주력산업 특화성	4	• (지역 내 주력산업 총 사업체 수/지역 내 총 사업체 수)/ (전국 주력산업 총 사업체 수/전국 총 사업체 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사업 실시 후 최근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지원 사업 실시 직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지원사업 실시 직전 3년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평균 * 100 * 1인당 지역내 총생산:지역내총생산/주민등록인구
		주력산업 경쟁도	6	• (지역 내 주력산업 총 사업체 수/지역 내 주력산업 총 종사자 수)/(전국 주력산업 총 사업체 수/ 전국 주력산업 총 종사자 수)
		주력산업 다양성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m_{i=1}^I (p_i * \log_2(p_i))$ * p_i = 지역 내 주력산업의 i번째 하위 산업의 총 종사자수/ 지역 내 주력산업의 총 종사자 수

정책수단		정책지표		측정 방식
수단명	주관 부서	지표명	우선순위	
로컬브랜드 육성	기획담당관/ 청년희망 정책과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예산	1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체 지원 예산 규모
		신규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건수	2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신규 참여 건수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발굴 건수	3	• 주민참여를 통한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발굴 건수
		로컬브랜드상권에 대한 이해관계자 만족도	4	• 로컬브랜드 상권의 인프라, 상인공동체, 상권지원기구 등 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
		로컬브랜드상권에 대한 주민 만족도	5	• 로컬브랜드 상권의 인프라, 접근성, 로컬 콘텐츠 등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만족도
		로컬브랜드 육성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횟수	6	• 로컬 브랜드 육성과 관련하여 개최한 공청회 및 토론회 총 건수
지자체· 교육청· 지방대학 협력사업	지산학 협력과	지역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1	• \sum (지역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참여기관 공동운영 교육프로그램 수	2	• \sum (참여기관 공동운영 교육프로그램 수)
		핵심분야 관련 기술이전 수	3	• \sum (핵심분야 관련 기술이전 수)
		핵심분야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4	• \sum (핵심분야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정보 공유 및 활용 시스템	5	• 참여기관 정보 공유 및 활용 시스템 구축 여부
		참여기관 간 협약 체결 수	6	• \sum (참여기관 간 체결 협약 수)
		핵심분야 관련 창업기업 수	6	• \sum (핵심분야 관련 창업기업 수)
		핵심분야 관련 국내외 논문 및 특허 수	8	• \sum (핵심분야 관련 국내외 논문 및 특허 수)
		핵심분야 관련 R&D 참여 학생 수	9	• \sum (핵심분야 관련 R&D 참여 학생 수)

정책수단		정책지표		측정 방식
수단명	주관 부서	지표명	우선순위	
		핵심분야 관련 창업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10	• \sum (핵심분야 관련 창업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지산학 협력과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대상자 수	1	• \sum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대상자 수)
		1인당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	• \sum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총 지원 대상자 수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의 만족도	3	•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지원대상자들이 만족하는 정도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다양성	4	• \sum (지원 영역별*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유무(유=1, 무=0))
창업전문 훈련기관 육성	창업벤처 담당관	창업훈련기관의 수	1	• \sum (지역 내 창업훈련기관 수)
		경험 중심 창업훈련프로그램	2	• \sum (창업훈련기관별 경험 중심 창업훈련프로그램 사수의 비중)/ \sum (창업훈련기관별 창업 훈련프로그램 총 사수)
		창업훈련프로그램 수료자 수	3	• \sum (창업훈련기관별 창업훈련프로그램 수료자 수)
		창업훈련프로그램 수료자 만족도	4	• 창업훈련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수료자들이 만족하는 정도
청년창업 지원	청년희망 정책과/ 창업벤처 담당관	청년창업지원 대상자 수	1	• \sum (지원 사업별 청년창업지원 대상자 수)
		1인당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	• \sum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총 지원 대상자 수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전주기성	3	• \sum (창업 단계별*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유무(유=1, 무=0))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의 만족도	4	•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지원대상자들이 만족하는 정도
혁신도시	지산학 협력과	계획대비 인구달성률	1	• 혁신도시 내 총인구 수/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인구 수 * 100

정책수단		정책지표		측정 방식
수단명	주관 부서	지표명	우선순위	
		정주인프라 구축 수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공급계획 공동주택 수 • (교통) 1일당 고속열차 운행 횟수(서울행), 1일당 고속/시외버스 운행 횟수(서울행), 시내버스 노선 개수 및 1일 운행 횟수 • (교육) 혁신도시 내 각급 학교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각급 학교 수 • (돌봄) 혁신도시 내 유아돌봄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유아돌봄시설 수 • (의료) 혁신도시 내 의료시설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의료시설 수 • (공공)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공공시설 수 • (복합혁신센터) 복합혁신센터 구축 여부
		정주환경 만족도	3	•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혁신도시 거주자들의 만족도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3	• 혁신도시 내 분양 완료된 클러스터 용지/혁신도시 내 전체 클러스터용지 면적 *100
		이전공공기관 가족동반이주율	5	• 가족동반이전 직원 수/이전공공기관 내 가족이 있는 직원 수 * 100
		혁신도시 인구 평균 연령	6	• 혁신도시 인구 평균 연령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 거점	창업벤처 담당관	기업 유치율	1	• 캠퍼스혁신파크 내 입주업체 수/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당시 계획 입주업체 수
		창업기업 생존율	2	• 캠퍼스혁신파크 내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기업 생존율
		고용량 달성률	3	• 캠퍼스혁신파크 내 총 고용자 수/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당시 계획 고용자 수
		지구 조성 상태	4	•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여부
		누계생산액	5	• 캠퍼스혁신파크 입주 기업들의 입주 후 총 생산 금액
		분양률	6	• 캠퍼스혁신파크 내 산업시설구역 분양 완료 면적/분양 대상 면적
		창업기업가 만족도	7	• 캠퍼스혁신파크 운영에 대한 창업기업가들의 만족도
		누계수출액	8	• 캠퍼스혁신파크 입주 기업들의 입주 후 총 수출 금액

정책수단		정책지표		측정 방식
수단명	주관 부서	지표명	우선순위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	제조혁신과	총 고용량 증가율	1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고용자 수-이후 5년 평균 고용자수)/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고용자 수 *100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 건수	2	•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건수
		1인당 지역내 총 생산 증가율	3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 -이후 5년 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100
		클러스터 내 기업 투자금액	4	• 클러스터 내 기업 투자 총금액
		청년층 취업 증가율	4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청년취업자 수-이후 5년 평균 청년취업자 수)/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청년취업자 수 *100
		상용노동자 증가율	6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상용노동자 수-이후 5년 평균 상용노동자 수)/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상용노동자 수 * 100
		국가연구개발사업 수 주액 증가율	7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액 -이후 5년 평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액)/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액 * 100
		특허출원건수 증가율	8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특허출원건수 -이후 5년 평균 특허출원건수)/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특허출원건수 * 100
		해외수출계약 체결액	9	• 클러스터 내 기업의 해외수출계약 체결 총금액

○ 지방시대 도전과제 통합 지표체계는 [표 5-2]와 같음

31) 현재 부산광역시의 복지급여담당부서로는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등이 있음

[표 5-2] 지방시대 도전과제 통합 지표체계

정책수단			정책지표		측정 방식
수단명	유사사업	주관부서	지표명	우선순위	
교육 자유특구	교육 국제화특구	창조 교육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산업인력 양성 실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 수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 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초·중·고교) 수
			글로벌 교육과정 실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과정 수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과정의 내용, 수준,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
			글로벌 활동 및 프로그램 실적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활동 및 프로그램 수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활동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교육국제화 특구 참여자 만족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운영자, 참여자 등) 만족도
기회발전 특구	규제자유특 구/연구개 발특구/경 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과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100 *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내총생산 / 주민등록인구
			지역 내 사업체 증가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지역내사업체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사업체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사업체 수 평균 * 100
			지역 내 종사자 증가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지역내기업종사자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기업종사자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기업종사자 수 평균 * 100
			사업체 입주 완료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연도 기준 유사 특구 입주 완료 총 사업체 수 / 최초 입주 계획된 사업체 수 * 100

정책수단			정책지표		측정 방식
수단명	유사사업	주관부서	지표명	우선순위	
			지역 내 경제 활동인구 증감률	5	•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지역내경제활동인구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경제활동인구 수 평균)/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경제활동인구 수 평균 * 100
			지역 내 총인구 증감률	6	•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지역내총인구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총인구 수 평균)/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총인구 수 평균 * 100
			고용 규모	6	• 유사 특구 내 전체 입주기업의 고용인원 수
			평균 매출액	6	• 유사 특구 내 전체 입주기업의 평균 매출액
지방투자	지방 투자촉진 보조사업/ 중소기업 모태조항 (모태펀드) 출자사업	투자 유치과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1	• (당해년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총 매출액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 * 100
			투자 대상 기업의 고용 증가율	2	• (당해년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총 종사자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종사자)/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종사자 * 100
			지역주력산업 기업 투자비중	3	• 지역별 지역주력산업 기업 투자액/ 지역별 총 투자액 * 100
			투자 대상 기업의 부채 증가율	4	• (당해년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총 부채액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부채액)/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부채액 * 100
			투자 대상 기업의 정규직 증가율	5	• (당해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정규직 수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정규직 수)/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정규직 수 * 100
			창업초기 기업 투자비중	5	• 지역별 창업초기기업(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투자액/ 지역별 총 투자액 * 100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자산학 협력과	계획대비 인구달성률	1	• 혁신도시 내 총인구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인구 수 * 100
			정주인프라 구축 수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공급계획 공동주택 수 • (교통) 1일당 고속열차 운행 횟수(서울행), 1일당 고속/ 시외버스 운행 횟수(서울행), 시내버스 노선 개수 및 1일 운행 횟수 • (교육) 혁신도시 내 각급 학교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각급 학교 수 • (돌봄) 혁신도시 내 유아돌봄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유아돌봄시설 수 • (의료) 혁신도시 내 의료시설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의료시설 수 • (공공)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공공시설 수 • (복합혁신센터) 복합혁신센터 구축 여부

정책수단			정책지표		측정 방식
수단명	유사사업	주관부서	지표명	우선순위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 분양률	3	• 혁신도시 내 분양 완료된 클러스터 용지/ 혁신도시 내 전체 클러스터용지 면적 * 100
			정주환경 만족도	3	•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혁신도시 거주자들의 만족도
			이전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율	5	• 가족동반이전 직원 수/이전공공기관 내 가족이 있는 직원 수 * 100
			혁신도시 인구 평균 연령	6	• 혁신도시 인구 평균 연령

2. 간소화 지표체계 (Compact Model)

-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지방중심형 지방시대 통합 지표체계 중 우선순위(1, 2순위)를 고려하여 간소화 지표체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핵심과제 모형과 도전과제 모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지방시대 핵심과제 간소화 지표체계는 [표 5-3]과 같음

[표 5-3] 지방시대 핵심과제 간소화 지표체계

정책수단명	주관 부서	지표명	측정 방식
주민자치회	자치분권과	주민총회 평균 개최 횟수	• \sum (당해 연도 읍·면·동별 주민총회 개최 횟수)/ 총 읍·면·동 개수
		주민총회 평균 참여 주민 수	• \sum (당해 연도 읍·면·동 주민총회 1회당 평균 참석 주민 수)/ 총 읍·면·동 개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인사과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횟수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횟수
		인사교류 건수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건수

정책수단명	주관 부서	지표명	측정 방식
자주재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세정정책담당관	신규 세원 발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세원(관광세, 광고세 등)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증가액(기존의 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 사용료 현실화 등도 포함)
		지방세 증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지방세 총 징수액-전년도 지방세 총 징수액)/전년도 지방세 총 징수액 * 100
정보공개 (현금성 복지사업, 의정활동 중심) 강화	복지 급여 관련 부서/ 의회사무처	현금성복지사업 정보 공개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365 상에 공개된 공통항목만 공개한 경우 0, 현금성 복지사업 세부 내역 및 예정잔액까지 공개한 경우는 1
		지방의회 정보 공개 수준(양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정보공개 항목 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항목 수 (23개) * 100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인사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공무원 역량 영역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점수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인사과	인사교류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건수 + 지방-지방 간 인사교류 건수
		인사교류 개인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제도 운영 및 인사교류를 통한 개인적 차원의 성과에 대해 인사교류 당사자가 만족하는 정도
지방연구원 육성	기획담당관	1인당 평균 연구과제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ac{\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과제 수})}{\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지방자치단체 정책 반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정책 반영 건수 / $\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과제 수}) * 100$
규제혁신	규제혁신추진단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비 완료된 자치법규 건수 / 전년도 통보된 정비대상 과제건수) * 100 ※ 정비 완료된 자치법규 건수: 당해연도에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 완료 및 공포(예정)된 건수 ※ 정비대상 과제건수: 행정안전부에서 전년도에 발굴 및 통보한 정비과제 건수
		혁신 필요 규제사무 발굴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불편 초래 규제, 기업 활동 저해 규제, 구시대적 규제 등 혁신이 필요한 규제사무의 발굴 건수

정책수단명	주관 부서	지표명	측정 방식
지역주력산업 (기업) 지원	제조혁신과	수혜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 (수혜기업들의 수혜 후 3년 간 평균 매출액-수혜기업 들의 수혜 전 3년 간 평균 매출액)/ 수혜기업들의 수혜 전 3년 간 평균 매출액 * 100
		수혜기업 신규고용 규모	• 전체 수혜기업의 신규고용인원 누적 총 합계
로컬브랜드 육성	기획담당관/ 청년희망정책과	신규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건수	• 전체 수혜기업의 신규고용인원 누적 총 합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예산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체 지원 예산 규모
지자체·교육청· 지방대학 협력사업	지산학협력과	참여기관 공동운영 교육프로그램 수	• \sum (참여기관 공동운영 교육프로그램 수)
		지역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 \sum (지역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연어형지역인재 정착지원	지산학협력과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대상자 수	• \sum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대상자 수)
		1인당 연어형 지역인 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sum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총 지원 대상자 수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	창업벤처담당관	창업훈련기관의 수	• \sum (지역 내 창업훈련기관 수)
		경험 중심 창업훈련프로그램	• \sum (창업훈련기관별 경험 중심 창업훈련프로그램 시수의 비중)/ \sum (창업훈련기관별 창업 훈련프로그램 총 시수)
청년창업 지원	청년희망정책과/ 창업벤처담당관	청년창업지원 대상자 수	• \sum (지원 사업별 청년창업지원 대상자 수)
		1인당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sum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총 지원 대상자 수
혁신도시	지산학협력과	계획대비 인구달성률	• 혁신도시 내 총인구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인구 수 * 100

정책수단명	주관 부서	지표명	측정 방식
		정주인프라 구축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공급계획 공동주택 수 • (교통) 1일당 고속열차 운행 횟수(서울행), 1일당 고속/시외버스 운행 횟수(서울행), 시내버스 노선 개수 및 1일 운행 횟수 • (교육) 혁신도시 내 각급 학교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각급 학교 수 • (돌봄) 혁신도시 내 유아돌봄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유아돌봄시설 수 • (의료) 혁신도시 내 의료시설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의료시설 수 • (공공)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공공시설 수 • (복합혁신센터) 복합혁신센터 구축 여부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 거점	창업벤처담당관	기업 유치율	• 캠퍼스혁신파크 내 입주업체 수/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당시 계획 입주업체 수
		창업기업 생존율	• 캠퍼스혁신파크 내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기업 생존율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	제조혁신과	총 고용량 증가율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고용자 수-이후 5년 평균 고용자수)/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고용자 수 * 100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 건수	•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건수

○ 지방시대 도전과제 간소화 지표체계는 [표 5-4]와 같음

[표 5-4] 지방시대 도전과제 간소화 지표체계

정책수단명	유사사업	주관부서	지표명	측정 방식
교육자유특구	교육국제화특구	청조교육과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 수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초·중·고교) 수
			글로벌 교육과정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과정 수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과정의 내용, 수준,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

정책수단명	유사사업	주관부서	지표명	측정 방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산업인력양성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 수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특구 설치 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100 *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주민등록 인구
			지역 내 사업체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지역내사업체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사업체 수 평균)/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사업체 수 평균 * 100
지방투자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중소기업모태조합 (모태펀드) 출자사업	투자유치과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총 매출액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 * 100
			투자 대상 기업의 고용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총 매출액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 * 100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자산협력력과	계획대비 인구달성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도시 내 총인구 수/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인구 수 * 100
			정주인프라 구축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공급계획 공동주택 수 (교통) 1일당 고속열차 운행 횟수(서울행), 1일당 고속/시외버스 운행 횟수(서울행), 시내버스 노선 개수 및 1일 운행 횟수 (교육) 혁신도시 내 각급 학교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각급 학교 수 (돌봄) 혁신도시 내 유아돌봄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유아 돌봄시설 수 (의료) 혁신도시 내 의료시설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의료시설 수 (공공)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공공 시설 수 (복합혁신센터) 복합혁신센터 구축 여부

제2절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방안

1.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의 필요성

-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시대’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부 추진 과제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주력하여 관리하여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고, 이 과제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지표체계를 개발하였음
- 지표는 정책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환류(피드백)를 형성함으로써 모니터링 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정책 의사결정자 및 집행자가 정책 효과를 판단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 적절하게 설계된 지표는 여타의 피드백 매커니즘에 비해, 직관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으며, 정책적 결정에 있어 증거기반을 형성할 수 있음
 -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방중심형 지방시대 지표체계를 통해 생산된 정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목표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지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표 그 자체는 정책이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일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됨
 - 지표의 의미는 언제나 성공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찾아야 하며, 결코 지표 값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지표 값 개선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일종의 목표 전치(goal displacement)로 인하여 정책 기획 및 집행 과정이 실질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되기 보다는 일정한 지표 값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존재함
- 지표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지표가 현 시점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더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지표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지표의 해석에 있어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음

- 이를 위해서는 지표 개발, 실행, 사후관리 과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2.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 방안 제언

1)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 거버넌스 구축

- 지방시대 지표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표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함
 -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담당자는 지방시대 지표체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표관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 담당자는 지방시대 지표체계와 관련하여 ① 지표 정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② 지표체계 관리 및 운영 협의체((가칭)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여야 하고, ③ 지방시대 지표가 지자체 내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표 결과를 정리하고 시각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복수의 부서의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 지방시대 지표체계 및 지표관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및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 지방시대 지표체계 측정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절차는 개별 부서의 지방시대 지표체계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지자체 내부 시스템을 통한 지방시대 지표 측정 및 분석 결과의 공유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방시대 지표체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음
- 지자체 내에 지방시대 지표로 측정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 간에 지방시대

지표의 개발과 유지, 사후관리 등 지표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칭)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위원회)가 필요함

- 여기에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 지방시대 지표관리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음

○ (가칭)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신규 지표 개발 : ① 신규 지표 개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② 신규 지표에 대해 지표개발 기준 충족 여부 평가, 지표 중요도, 신뢰성, 타당성, 실행가능성, 기존 지표와의 중복성 등에 대한 평가, ③ 신규 지표 후보군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 기준 마련 등
- 지표체계 평가 : ① 지표체계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② 지표체계 내 주요 정책수단 및 세부 지표의 정책적합성, 기존 지표의 연속적 측정 가능성, 지표 측정의 효율성, 지표 측정방식의 표준화 가능성, 지표 간 우선순위 재설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정기적 평가 수행 등
- 지표체계 활용 및 관리 : ① 지표체계 활용을 위한 지침 마련, ② 지표체계 평가 결과에 따른 지표체계 관리 기준 설정, ③ 지표의 유지, 개선, 퇴출, 신규 지표 도입 등에 대한 협의 및 의사결정, ④ 지표 간 우선순위 재설정 등

2) 주기적인 지방시대 지표체계 평가 실시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방시대 지표체계의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표체계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 평가 주기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방시대 지표들 중 다수가 정책과제의 시행기간이 짧음을 산출지표로 개발됨
- 산출지표는 정책 시행기간이 충분히 지난 이후에는 그 중요성이 낮아질 것이며, 정책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실현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결과지표의 중요

성이 점차 부각될 것임

- 따라서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가운데 정책과제의 시행기간에 따른 지방시대 지표체계의 타당성 검증에 적절한 평가 주기를 설정하여야 함
- 다만, 지표에 대한 평가 주기는 짧을수록 지표의 타당성 및 유용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함
- 수시 평가와 정기 평가를 나누어 진행하거나, 예비평가를 통해 정기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함

(2) 평가 기준

- 지표 및 지표체계의 정책 적합성
 - 현재의 지방시대 지표체계 및 세부 지표들은 현 시점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세부과제의 내용 분석 및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음
 - 그러나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과제들 중에는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정책과제들의 내용 및 중요도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시대’ 관련 정책 사업들 또한 신규 시행, 내용 변경, 사업 종료 등 지속적인 변화를 겪게 되므로, 현재의 지방시대 지표체계에 반영되어 있는 정책수단 및 세부지표들의 내용이나 중요도가 변화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지방시대 지표체계 및 세부 지표들이 평가 시점에 중요한 ‘지방시대’ 정책들의 성과를 대표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방시대’ 정책 사업에 적합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등 지표체계의 정책정합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사례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의 변화와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지표의 구조변경이나 개선을 8~11월 사이에 진행하고 있음

○ 지표 측정의 일관성

- 특정한 시점에 측정된 지표의 값에서도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지만, 지표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을 때, 지표를 통해 얻고자 의도했던 완전하고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만약 특정 지표에 대한 측정 일관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지표를 유지할 이유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 지표의 측정 일관성이 낮아지는 경우는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해진 경우, 지표의 목표 최대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를 달성하게 되면 더 이상의 성과 향상이 불가능한 경우(예.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률의 경우 100%를 달성하게 되면 더 이상의 성과 향상이 불가능한 지표임) 등 다양할 수 있음
- 만족도와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지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주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함

○ 지표 측정의 효율성

- 지표 측정을 위해 적절한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 업무 부담과 비용은 중요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지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품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어야 함
- 지표 측정에 있어 새로운 데이터가 요구되는 경우, 새로운 데이터에 따른 품질 증가가 데이터 수집 비용을 정당화하는지를 계산할 필요가 있음

○ 지표의 표준화 가능성

- 지표는 정책 입안자들과 대중들에게 상이한 정책 분야의 상황에 대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유의미한 개요를 제공해야 하므로, 하나의 숫자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지표의 해석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정보는 최소화되어야 함
- 이러한 이유로 지표를 가능한 한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표준화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의 형식은 적절한 분모로 관측치를 나눈

‘비율’의 형태임

- 특히, 여러 대상 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지표들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권장되므로, 지표를 평가함에 있어 그 측정방식에 표준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비율’ 형태의 지표를 사용할 경우 분자와 분모 중 무엇이 지표의 변화를 야기하는지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분모의 변동이 주로 지표의 개선된 해석을 이끈다면, 보다 안정적인 분모를 사용하거나 분모 대신 절대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측정된 수치 자체가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 지표 간 우선순위 재설정 필요성

-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표 우선순위는 현재 시점의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기반으로 산출되었음
- 그러나 ‘지표 및 지표체계의 정책 적합성’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책 현실은 끊임없이 변동되며, 데이터의 수집 가능성 및 정책 내용의 중요성 또한 변화하므로 지표의 우선순위는 변화할 수 있음
- 또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 이외에 정책현장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견해가 반영될 필요성도 존재함(다만, 이 경우, 공무원들이 관리 및 측정이 용이하다거나,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표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의 견해를 적절히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결정한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적절한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자 노력하여야 함

참고문헌

[논문 및 보고서]

- 강동석·유시형. (2009). 공공정보시스템 효과성 측정지표의 타당성 검증에 관한 연구-행정 정보 DB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정보처리학회논문지」, 16(3), 417-422.
- 강영주. (2013). 「R&D특구 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교육부. (202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 하수정·이차희·심혜민·이종표. (2022).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11호. 국토연구원 정기간행물.
- 곽경훈·조건·이경재. (2019). SBM 모형을 활용한 광주지역 주력산업 R&D 지원사업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32(3), 519-538.
- 관계부처합동(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2018). 「『혁신도시 시즌2』추진방안」.
- 권경득·김판석·오성호·박경원. (2003).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4), 1-29.
- 권경환·최연태. (2014). 기초지자체 산업단지 지원정책이 산업단지 성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18(3), 551-583.
- 금창호·김민희·안영훈·이지혜·하봉운·이보라·전성훈. (2011). 「교육자치-일반자치 일원화 연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보고서.
- 금창호·이지혜. (2015).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방안」. 지방행정연구, 29(4), 3-25.
- 김구희·원유호·이주형. (2015). PLS 회귀분석을 이용한 지역산업진흥사업 성과영향요인 분석: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7(2), 29-51.
- 김규환·남영준. (2008). 공공도서관의 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113-139.
- 김남욱. (2018).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8(4), 63-106.

- 김병국·권오철. (1999).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역량 평가체계의 구축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병식. (2002).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 개혁작업 성과에 대한 대상집단의 인식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행정규제개혁 작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6(2), 133-149.
- 김성호·황아란·안영훈. (2002).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개발과 적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영인. (2005). 주민자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지방행정」, 54(622), 34-42.
- 김태룡·안희정. (2007).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경향: 성과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9(4), 1097-1118.
- 김태환·민선희·김은란·서연미·김진범·권영섭·변필성·임상연·남기찬·배윤경·권규상·허동숙·김병진·배인성·이효란·이혜민·표희진·남기천. (2020).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국토교통부 연구보고서.
- 김필두. (201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28(3), 35-60.
- 김필두·류영아. (2008).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필두·한부영(2017),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류승한·송정현. (2017).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 지역혁신거점 조성전략」.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 류승한. (2018).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 「국토」, 439, 22-27.
- 류승한·조성철. (2019).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상범·복문수. (2019). 주민자치회 활성화 영향요인의 분석 및 정책적 제언: 광주·전남 지방자치회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3), 81-110.
- 박상수·허원제. (2022). 「기회발전특구(ODZ) 조세지원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재곤·이원빈. (2005).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와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배귀희·류현숙. (201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의 성과평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인사교류자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4), 289-319.

- 배영임·신혜리. (2021). IPA를 활용한 정부 규제혁신정책의 성과분석: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5(1), 59-78.
- 설문원. (2018).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기록학연구」, (55), 5-38.
- 소순창. (2006).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의 지표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4), 117-138.
- 심현민·설병문. (2022). 청년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전문가를 대상으로. 「벤처창업 연구」, 17(2), 1-13.
- 안태욱·강태원. (2020).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애로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 연구」, 15(2), 67-80.
- 유태현. (2017). 국세-지방세의 구조 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방안. 「지방재정」, 34(4), 12-35.
- 이규환. (2006). 「한국지방행정학: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이상호·박수정. (2019).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정책 연계·협력 사례 현황 분석: A 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40(3), 103-130.
- 이상훈·김경민. (2021).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효과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2021(15), 1-191.
- 이영범·이은국. (2003). 「규제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보고서.
- 이우배·황종환. (2017).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지원사업의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2(1), 103-126.
- 이인우·정양현·박창규·오영환·우청원. (2016).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원사업 성과분석: 성향점수매칭 PSM 방법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1(1), 141-163.
- 이재성·임승빈. (2004).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평가의 모델: 시론적 탐색.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4, 381-402.
- 이재훈·박일주. (2021).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제언」.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연구보고서.

- 이창구·서영옥. (2018). 지역 창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지역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6), 182-207.
- 장해정·고혜원·박천수·손희전. (2020).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육성 및 성과관리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보고서.
- 전성만·김진·유자영. (2022).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 2017~2021년 세부 사업별 지출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3), 37-61.
- 전성민·최영근·이승용. (2020). 「중소기업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사업의 효과성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
- 정형록·최연식·김미옥. (2012).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지표설정에 관한 사례연구. 「회계정보 연구」. 30(1), 125-162.
- 조선일. (2005).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와 과제: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 학회보」, 12(1), 167-191.
- 조혜영·김광국·이경아. (2014).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보고서.
- 중앙관계부처. (2023). 「지역 기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비상경제장관회의 자료.
- 최문형·정문기. (2021). 지식기반산업의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과의 영향연구-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1), 27-52.
- 최병대. (2003). 공무원의 전문성학보 방안: 서울시 도시계획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125-144.
- 최세경·곽규태. (2017).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과 역할제고 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용환. (2020).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인사제도 개선방안」.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인수·전대욱·장인성. (202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정연·남창우. (2022).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정책사업 공동추진 실태 및 구성원의 인식 분석: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5(4), 215-231.
- 행정안전부. (2022). 「2022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제안모델」. 공기업정책과
- 행정안전부. (2022).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
- 홍근석. (2022).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개선 방향:현금성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2022(5), 10-17.
- 홍준현. (2009). 혁신 확산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역량에 대한 평가. 「지방정부연구」, 12(4), 55-74.
- 홍영란·김태준·현영섭·박용호. (2012).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 대학 및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서영인·정영기·홍성호·강선우. (2017). 교육국제화특구 성과 진단 및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홍하연. (2022).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드상권의 육성 및 조성방향」. 서울신용보증재단.
- 황혜신·허준영·이도석·황덕연·강황선·김용운·강신일·이혜영·조문석·김은주. (2022). 「국정 과제 관리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Grimmelikhuijsen, S. G. (2010). Transparency of public decision-making: towards trust in local government?. *Policy & Internet*, 2(1), 5-35.
- Pane, J. F., Steiner, E. D., Baird, M. D., & Hamilton, L. S. (2015). Continued Progress: Promising Evidence on Personalized Learning. *Rand Corporation*.
- Patrick, S., Kennedy, K., & Powell, A. (2013). *Mean What You Say: Defining and Integrating Personalized, Blended and Competency Educat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12 Online Learning.
- Tetzlaff, L., Schmiedek, F., & Brod, G. (2021). Developing personalized education: A dynamic framework.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863-882.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12.25.).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교육부 보도자료. (2023.1.25.).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안내.
대한민국정부. (2022.07.).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12.20.). 경제자유구역 건조한 성장세 지속.
아시아경제. (2022.04.28.). 전북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상사업 평가서 우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04.27.).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충청비즈. (2021.08.24.). '국가혁신 클러스터' 성과 크대!

[사이트]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introduce/govVisionList.do>)
(검색일 2023. 03. 14)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compAppr/compAppr01/>).(검색일 검색일: 2023.06.07.)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21.12월 기준)'. (등록일 2022.01.12.) (검색일 2023.06.07.)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2023.02.28.). 규제자유특구 4년 성과. (<http://rfz.go.kr/index.html?menuno=196>) (검색일 2023. 05. 14)

부록

지방중심형 지방시대 정책지표에 관한 전문가 조사 (1부)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2023년도 부산광역시 정책과제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중심형 정책지표 개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선정하였으며, '지방시대 본격 추진'을 20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함에 따라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지방시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기획 및 집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대' 구현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연구진은 부산광역시 관점에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분석하여, 부산광역시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주력하여 관리하여야 할 과제를 파악하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관리되어야 할 '지방시대' 지표들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진은 정책 지표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시는 연구자,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주요 내용은 저희가 도출한 지표 후보군의 타당성 및 중요도에 대한 의견 조사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향후 지자체 관점의 '지방시대' 정책지표 개발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며, 또한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이경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지민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유자영 부연구위원

연구 내용 소개

- 본 연구진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10대 국정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를 분석한 후 지방시대 지표 개발 대상 과제들을 과제 발주처인 부산광역시 관점에서 ‘지방시대 도전과제’와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구분하였습니다.
- **(지방시대 도전과제)** 중앙정부의 선행행위(지정, 공모 등)가 존재하나, 해당 행위가 종료된 이후 지역에 대한 경제적·재정적 지원이 예정되어, 부산광역시가 그에 따른 경제적·재정적 자원 획득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
 - **(지방시대 핵심과제)** 중앙정부의 별도의 선행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로써 부산광역시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 지방시대 도전과제
- 지방시대 도전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총 4개이며 키워드별 지방시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4대 키워드별 지방시대 도전과제

연번	키워드	지방시대 도전과제
1	교육자유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 • 교육자유특구 내 설립·운영 관련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강화
2	기회발전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세제 혜택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3중 특례 적용 및 사후요청에 대한 신속결정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인허가원스톱처리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산업기반시설 우선설치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지원 펀드조성
3	지방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속지원 •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의 지방투자 인센티브 설계 추진 • ‘지역혁신벤처펀드’ 조성 •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용
4	공공기관 지방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지방이전

- 지방시대 도전과제는 시행 이전이므로 도전과제와 정책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이전 성과를 측정하여 지역의 역량 및 잠재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시대 도전과제별 유사사업입니다.

【표 2】 지방시대 도전과제별 유사사업

연번	키워드	지방시대 도전과제	유사사업
1	교육자유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 • 교육자유특구 내 설립·운영 관련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국제화특구
2	기회발전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세제 혜택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3종 특례 적용 및 사후 요청에 대한 신속결정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인허가원스톱처리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산업기반시설 우선설치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지원 펀드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자유특구 • 연구개발특구 • 경제자유특구
3	지방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속지원 •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의 지방투자 인센티브 설계 추진 • ‘지역혁신벤처펀드’ 조성 •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 중소기업 모태조합 (모태펀드) 출자사업
4	공공기관 지방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지방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 지방시대 핵심과제

- 지방시대 핵심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총 9개이며, 키워드별 지방시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3] 9대 키워드별 지방시대 핵심과제

연번	키워드	지방시대 핵심과제
1	주민자치 강화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확대
2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3	지방재정 자립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4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 집행결과 분석, 공개, 환류 •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
5	지방행정 역량 강화	• 국·과장급 지방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국·과장급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 지방연구원 설립
6	지역기업 육성	• 지방규제혁신 강화 • 지역주력산업(기업)의 전주기 성장경로지원
7	지역상권 육성	• 동네단위 로컬브랜드 구축 • 주민참여를 통한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발굴 • 주민참여로컬브랜딩 아이디어 구체적 사업 연계 지원(생활실험, 학습, 컨설팅 등) • 지역특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8	지역인재 양성	•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공동재원 활용 지역인재양성사업 발굴·추진 • 「연어형지역인재」에 정착지원 •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 • 청년창업 지원
9	지역혁신 거점 개발	•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 •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복합혁신공간(주거·산업·공공시설) 및 산학연테크워크 공간 조성(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 • 혁신도시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구축 • 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시설 건립 •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거점 조성(「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혁신파크」 등)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인프라 확충

- 다음은 지방시대 핵심과제별 주요 정책수단 및 정책수단별 성과 판단 기준을 나타냅니다.

[표 4] 지방시대 핵심과제별 주요 정책 수단 및 성과 판단 기준

연번	키워드	지방시대 핵심과제	주요 정책 수단	성과 판단 기준
1	주민자치 강화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확대	• 주민자치회	산출
2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산출
3	지방재정 자립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 수입) 확충	산출 및 결과
4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 집행결과 분석, 공개, 환류 •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	• 정보공개 강화 (현금성 복지사업, 의정활동 중심)	산출
5	지방행정 역량 강화	• 국·과장급 지방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산출
		• 국·과장급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산출
		• 지방연구원 설립	• 지방연구원 육성 (설립 포함)	산출 및 결과
6	지역기업 육성	• 지방규제혁신 강화	• 규제혁신	산출
		• 지역주력산업(기업)의 전주기 성장경로지원	•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	결과
7	지역상권 육성	• 동네단위 로컬브랜드 구축 • 주민참여를 통한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발굴 • 주민참여로컬브랜딩 아이디어 구체적 사업 연계 지원(생활실험, 학습, 컨설팅 등) • 지역특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 로컬브랜드 육성	산출
8	지역인재 양성	•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공동 자원 활용 지역인재양성사업 발굴·추진	•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	산출
		• 「연어형지역인재」에 정착지원	• 연어형지역인재 정착지원	산출
		•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	•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	결과
		• 청년창업 지원	• 청년창업 지원	산출

연번	키워드	지방시대 핵심과제	주요 정책 수단	성과 판단 기준
9	지역혁신 거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 •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복합혁신공간(주거·산업·공공시설) 및 산학연테크워크 공간 조성(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 • 혁신도시 문화·보육·주민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 혁신센터 구축 • 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시설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거점 조성(「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혁신파크」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 거점 	산출 또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 	산출 또는 결과

성과 판단 기준

▣ 원칙

- 산출: 정책 수단의 시행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기에 정책 수단 도입으로 인한 중·장기적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결과: 정책 수단이 비교적 오래 전에 시행되었기에 정책 수단 도입으로 인한 중·장기적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예외

- 산출 및 결과 : 구체적인 정책 수단의 성과에 대한 검토 결과 산출 및 결과를 모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경우
- 산출 또는 결과 : 정책 수단을 구성하는 세부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여, 중점적으로 분석될 사업의 시행 시기에 따라 성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I. 지방시대 과제 중요도 조사

※ 윤석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지방시대’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지역이 주도하여 실현하도록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개의 거시적인 목표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설계된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지방자치강화’와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 강화** :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함을 의미
- **지역발전** : 일정한 지역이 지니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개발하여 그 지역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을 의미

※ **파란색 글씨는 작성 예시**이며, 실제 작성하실 때는 파란색 내용을 삭제하신 후 작성해주십시오. 모든 문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강화’와 ‘지역발전’ 중 어떤 목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 목표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방자치강화	지역발전
√	

1-1.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주시시오.

2. 지방자치강화 및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중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 - 9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구분	지방자치강화	지역발전
주민자치 강화	1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	2	
지방재정 자립	3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4	
지방행정 역량 강화	5	
지역기업 육성	6	
지역상권 육성	7	
지역인재 양성	8	
지역혁신 거점 개발	9	

※ 1 :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함, 9 :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음

2-1. 지방자치강화 및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1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키워드를 위와 같이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주시시오.

- 지방자치 강화:

- 지역발전:

3. 다음은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로부터 도출된 지방시대 핵심과제의 주요 정책 수단들입니다. 지방자치강화 및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정책 수단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 - 17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주요 정책 수단	지방자치강화	지역발전
주민자치회	1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2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3	
정보공개 강화 (현금성 복지사업, 의정활동 중심)	4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5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6	
지방연구원 육성(설립 포함)	7	
규제혁신	8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	9	
로컬브랜드 육성	10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	11	
연어형지역인재 정착지원	12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	13	
청년창업 지원	14	
혁신도시	15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 거점	16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	17	

※ 1 :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함, 17 :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음

3-1. 지방자치강화 및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1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 수단을 위와 같이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주시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 강화: • 지역발전:

4. 다음 사업들 중 부산광역시가 지방자치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 - 4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구분	설명	우선순위
교육자유특구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통한 학교의 규제 개선과 대안학교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한 사업	1
기회발전특구	특구를 지정하여 다양한 세제혜택 및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주도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	2
지방투자	기업이전 및 투자 유치, 벤처투자 환경조성을 위한 자금 확보 등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엔젤투자허브 유치 등)	3
공공기관 지방이전(2차)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들을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1차 이전 완료, 2차 이전 예정)	4

4-1. 앞에서 1순위로 선정한 사업에 대해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주시십시오.

Ⅱ. 지방시대 도전과제 유사사업 지표후보군에 대한 조사

※ 이하에서는 4개 지방시대 도전과제의 유사사업에 대한 지표 후보군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파란색 글씨는 작성 예시**이며, 실제 작성하실 때는 파란색 내용을 삭제하신 후 작성해주시시오. 모든 문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교육자유특구 유사사업

※ 교육자유특구의 유사사업은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자유특구와 교육국제화특구는 적용 범위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것, 특구 내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특례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자유특구와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음

1-1. 다음은 교육자유특구 유사사업의 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교육자유특구’ 선정을 위한 지역경쟁력 및 유사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5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 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 수	1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초·중·고교) 수	✓	
글로벌 교육과정 실적	2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과정 수		✓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과정의 다양성	✓	
글로벌 활동 및 프로그램 실적	3	•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활동 및 프로그램 수		✓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 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활동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산업인력양성 실적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	
교육국제화특구 참여자 만족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운영자, 참여자 등) 만족도 	✓	

1-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교육자유특구’ 선정을 위한 지역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래 파란색 글씨는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작성하실 때는 파란색 내용을 삭제하신 후 작성해주십시오.)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2. 기회발전특구 유사사업

※ 기회발전특구의 유사사업은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의 적용 범위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며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특례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회발전특구와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음

2-1. 다음은 기회발전특구 유사사업의 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기회발전특구’ 선정을 위한 지역경쟁력 및 유사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9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 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100 *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주민 등록인구 	✓	
지역 내 사업체 증가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지역내사업체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사업체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사업체 수 평균 * 100 	✓	
지역 내 종사자 증가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지역내기업종사자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기업종사자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기업종사자 수 평균 * 100 	✓	
지역 내 총인구 증감률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지역내총인구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총인구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총인구 수 평균 * 100 	✓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증감률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특구 설치 후 3년 간 지역내경제활동인구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수 평균) / 특구 설치 전 3년 간 지역내경제활동인구 수 평균 * 100 	✓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사업체 입주 완료율	6	• 당해 연도 기준 유사 특구 입주 완료 총 사업체 수/ 최초 입주 계획된 사업체 수 * 100		✓
고용 규모	7	• 유사 특구 내 전체 입주기업의 고용인원 수	✓	
평균 매출액	8	• 유사 특구 내 전체 입주기업의 평균 매출액	✓	
연구개발비 평균 지출액	9	• 유사 특구 내 전체 입주기업의 평균 연구 개발비		✓

2-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기회발전특구’ 선정을 위한 지역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래 파란색 글씨는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작성하실 때는 파란색 내용을 삭제하신 후 작성해주십시오.)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3. 지방투자 유사사업

※ 지방투자 유사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중소기업 모태조합(모태펀드)출자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보조금 지급, 자금 조성 등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투자와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음

3-1. 다음은 지방투자 유사사업의 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지방투자’ 선정을 위한 지역경쟁력 및 유사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6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1	• (당해연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총 매출액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 * 100	√	
투자 대상 기업의 부채 증가율	2	• (당해연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총 부채액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부채액)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부채액 * 100	√	
투자 대상 기업의 고용 증가율	3	• (당해연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총 종사자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종사자)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종사자 * 100	√	
투자 대상 기업의 정규직 증가율	4	• (당해연도 투자 대상 기업의 정규직 수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정규직 수) / 전년도 투자 대상 기업의 정규직 수 * 100	√	
지역주력산업 기업 투자비중	5	• 지역별 지역주력산업 기업 투자액 / 지역별 총 투자액 * 100	√	
창업초기기업 투자비중	6	• 지역별 창업초기기업(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투자액 / 지역별 총 투자액 * 100	√	

3-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지방투자’ 선정을 위한 지역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래 파란색 글씨는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작성하실 때는 파란색 내용을 삭제하신 후 작성해주십시오.)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4.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사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유사사업은 **혁신도시(1차)**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문지 2부 지방시대 핵심과제 ‘혁신도시’설문에서 응답해주신 결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별 지표후보군에 대한 조사

※ 이하에서는 지방시대 핵심과제의 17개 정책수단별 지표 후보군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파란색 글씨는 작성 예시**이며, 실제 작성하실 때는 파란색 내용을 삭제하신 후 작성해주시시오. 모든 문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산출 중심] 주민자치회

1-1. 다음은 산출 중심의 '주민자치회'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주민자치회'의 산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7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주민자치회 전환률	1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읍·면·동 개수/ 총 읍·면·동 개수 * 100(%)	√	
주민자치 조례 제정률	2	•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한 읍·면·동 개수/ 총 읍·면·동 개수 * 100(%)		√
주민총회 평균 개최 횟수	3	• \sum (당해 연도 읍·면·동별 주민총회 개최 횟수)/ 총 읍·면·동 개수		√
주민총회 평균 참여 주민 수	4	• \sum (당해 연도 읍·면·동 주민총회 1회당 평균 참석 주민 수)/ 총 읍·면·동 개수	√	
주민자치회 평균 추진 사업 건수	5	• \sum (당해 연도 읍·면·동 주민자치회별 협력·위탁·주민자치 사업 수행 건수)/ 총 읍·면·동 개수	√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주민자치위원 만족도	6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주민자치 위원들이 만족하는 정도	✓	
공무원 만족도	7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읍·면·동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정도	✓	

1-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산출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2. [산출 중심]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2-1. 다음은 산출 중심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의 산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5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횟수	1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횟수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만족도	2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내용 만족도		√
인사교류 건수	3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건수		√
인사교류에 대한 교육청 공무원 만족도	4	• 인사교류 방식, 횟수, 기간, 복귀 후 처우 등 운영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정도	√	
인사교류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만족도	5	• 인사교류 방식, 횟수, 기간, 복귀 후 처우 등 운영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정도	√	

2-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산출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3. [산출 및 결과 중심]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3-1. 다음은 산출 및 결과 중심의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의 산출 및 결과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7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공청회 및 교육 건수	1	• 자주재원 확충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착을 위한 공청회(관계자 교육) 개최 건수	✓	
전문부서 지정 및 인력운영	2	• 자주재원 확충 관련 부서의 구성원 인원 수 합계		✓
신규 세원 발굴 노력	3	• 신규 세원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 정도(기존의 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 사용료 현실화 등 포함)		✓
체납세 건수 증감율	4	• (당해년도 지방세 체납 총 건수-전년도 지방세 체납 총 건수)/ 전년도 지방세 체납 총 건수 * 100	✓	
체납세 금액 증감율	5	• (당해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전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 전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 * 100	✓	
지방세 증감율	6	• (당해년도 지방세 총 징수액-전년도 지방세 총 징수액)/ 전년도 지방세 총 징수액 * 100	✓	
세외수입 증감율	7	• (당해년도 세외수입 총액-전년도 세외수입 총액)/ 전년도 세외수입 총액 * 100	✓	

3-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산출 및 결과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4. [산출 중심] 정보공개(현금성 복지사업, 의정활동 중심) 강화

4-1. 다음은 산출 중심의 '정보공개 강화(현금성 복지사업, 의정활동 중심)'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정보공개 강화(현금성 복지사업, 의정활동 중심)'의 산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3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현금성복지사업 정보 공개 수준	1	• 지방재정365 상에 공개된 공통항목만 공개한 경우 0, 현금성 복지사업 세부 내역 및 예결산액까지 공개한 경우는 1	✓	
지방의회 정보 공개 수준(양적)	2	• 실제 정보공개 항목 수 / 행정안전부 정보 공개 항목 수(23개) * 100		✓
지방의회 정보 공개 수준(질적)	3	• 지방의회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질적 평가 결과		✓

4-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산출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5. [산출 중심]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5-1. 다음은 산출 중심의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의 산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3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 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도	1	• 고위공무원 역량 영역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부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품질	2	• 고위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점수		√
교육에 대한 고위공무원 만족도	3	•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및 피드백 등 교육 영역 전반에 대한 고위공무원들의 만족도		√

5-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산출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6. [산출 중심]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6-1. 다음은 산출 중심의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고위공무원 인사교류’의 산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3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인사교류 건수	1	•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건수 + 지방 - 지방 간 인사교류 건수	√	
인사교류 개인 만족도	2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제도 운영 및 인사교류를 통한 개인적 차원의 성과에 대해 인사교류 당사자가 만족하는 정도		√
인사교류 기관 만족도	3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제도 운영 및 인사교류를 통한 기관 차원에서의 성과에 대해 인사교류 대상 기관 구성원들(인사교류 당사자 제외)이 만족하는 정도		√

6-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산출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7. [산출 및 결과 중심] 지방연구원 육성

7-1. 다음은 산출 및 결과 중심의 '지방연구원 육성'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지방연구원 육성'의 산출 및 결과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7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 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1인당 평균 연구 과제 수	1	• $\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과제 수}) / \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	
1인당 평균 연구 보고서 수	2	• $\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보고서 수}) / \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
1인당 협동연구 실적	3	• $\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국내·외 협동연구건수}) / \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
워크숍·세미나 실적	4	• $\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워크숍·세미나 개최건수}) / \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수}$	✓	
1인당 학회발표 실적	5	• $\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국내외 학회발표 건수}) / \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인력 수})$	✓	
지방자치단체 정책 반영률	6	• $\text{지방자치단체 정책 반영 건수} / \sum(\text{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 연구과제 수}) * 100$	✓	
연구 성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만족도	7	• 지방연구원 연구 성과의 내용, 공유 방식, 정책활용성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만족 정도	✓	

7-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산출 및 결과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8. [산출 중심] 규제혁신

8-1. 다음은 산출 중심의 ‘규제혁신’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규제혁신’의 산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5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 완료된 자치법규 건수/ 전년도 통보된 정비대상 과제건수) * 100 ※ 정비 완료된 자치법규 건수: 당해연도에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 완료 및 공포(예정)된 건수 ※ 정비대상 과제건수: 행정안전부에서 전년도에 발굴 및 통보한 정비과제 건수 	✓	
혁신 필요 규제사무 발굴 건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불편 초래 규제, 기업 활동 저해 규제, 구시대적 규제 등 혁신이 필요한 규제사무의 발굴 건수 		✓
규제사무 혁신 추진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완료 규제사무 수/ 혁신필요 규제사무 발굴건수) * 100 		✓
규제혁신에 대한 지역기업 만족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에 대한 지역 기업의 만족도 	✓	
규제혁신에 대한 주민 만족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	

8-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산출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9. [결과 중심]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

9-1. 다음은 결과 중심의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의 결과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7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 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수해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1	• (수해기업들의 수해 후 3년 간 평균 매출액 - 수해기업들의 수해 전 3년 간 평균 매출액) / 수해기업들의 수해 전 3년 간 평균 매출액 * 100	✓	
수해기업 신규고용 규모	2	• 전체 수해기업의 신규고용인원 누적 총 합계		✓
수해기업 투자수익률	3	• (수해기업들의 수해 후 3년 간 평균 매출액 - 수해기업들의 수해 전 3년 간 평균 매출액) / 수해기업들에 대한 3년 간 평균 지원 총 금액		✓
주력산업 특화성	4	• (지역 내 주력산업 총 사업체 수 / 지역 내 총 사업체 수) / (전국 주력산업 총 사업체 수 / 전국 총 사업체 수)	✓	
주력산업 다양성	5	• $-\sum_{i=1}^I (p_i * \log_2(p_i))$ * p_i = 지역 내 주력산업의 i 번째 하위 산업의 총 종사자수 / 지역 내 주력산업의 총 종사자 수	✓	
주력산업 경쟁도	6	• (지역 내 주력산업 총 사업체 수 / 지역 내 주력산업 총 종사자 수) / (전국 주력산업 총 사업체 수 / 전국 주력산업 총 종사자 수)	✓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7	• (지원 사업 실시 후 최근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지원 사업 실시 직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지원 사업 실시 직전 3년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평균 * 100	✓	

9-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결과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10. [산출 중심] 로컬브랜드 육성

10-1. 다음은 산출 중심의 ‘로컬브랜드 육성’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로컬브랜드 육성’의 산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6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로컬브랜드 육성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횟수	1	• 로컬 브랜드 육성과 관련하여 개최한 공청회 및 토론회 총 건수	√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발굴 건수	2	• 주민참여를 통한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발굴 건수		√
신규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건수	3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신규 참여 건수		√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예산	4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체 지원 예산 규모	√	
로컬브랜드 상권에 대한 이해관계자 만족도	5	• 로컬브랜드 상권인프라, 상인공동체, 상권 지원기구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	√	
로컬브랜드 상권에 대한 주민 만족도	6	• 로컬브랜드 상권의 인프라, 접근성, 로컬 콘텐츠 등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만족도	√	

10-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산출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11. [산출 중심]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

11-1. 다음은 산출 중심의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 1) 각 지표는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사업'의 산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10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참여기관 간 협약 체결 수	1	• \sum (참여기관 간 체결 협약 수)	√	
정보 공유 및 활용 시스템	2	• 참여기관 정보 공유 및 활용 시스템 구축 여부	√	
참여기관 공동운영 교육프로그램 수	3	• \sum (참여기관 공동운영 교육프로그램 수)	√	
지역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4	• \sum (지역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
핵심분야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5	• \sum (핵심분야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	√	
핵심분야 관련 국내외 논문 및 특허 수	6	• \sum (핵심분야 관련 국내외 논문 및 특허 수)		√
핵심분야 관련 기술이전 수	7	• \sum (핵심분야 관련 기술이전 수)	√	
핵심분야 관련 R&D 참여 학생 수	8	• \sum (핵심분야 관련 R&D 참여 학생 수)	√	
핵심분야 관련 창업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9	• \sum (핵심분야 관련 창업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	
핵심분야 관련 창업기업 수	10	• \sum (핵심분야 관련 창업기업 수)	√	

* 지역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재직자, 직업계고, 초·중·고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리빙랩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등

11-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산출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12. [산출 중심] 연어형지역인재 정착지원

12-1. 다음은 산출 중심의 ‘연어형지역인재 정착지원’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연어형지역인재 정착지원’의 산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4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대상자 수	1	• $\sum(\text{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대상자 수})$	√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다양성	2	• $\sum(\text{지원 영역별*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유무 (유=1, 무=0)})$		√
1인당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3	• $\sum(\text{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text{총 지원 대상자 수}$		√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의 만족도	4	•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지원대상자들이 만족하는 정도	√	

12-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산출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13. [결과 중심]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

13-1. 다음은 결과 중심의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창업전문훈련기관 육성’의 결과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4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 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창업훈련 기관의 수	1	• \sum (지역 내 창업훈련기관 수)	√	
경험 중심 창업훈련 프로그램	2	• \sum (창업훈련기관별 경험 중심 창업훈련 프로그램 시수의 비중) / \sum (창업훈련기관별 창업 훈련프로그램 총 시수)		√
창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자 수	3	• \sum (창업훈련기관별 창업훈련프로그램 수료자 수)		√
창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자 만족도	4	• 창업훈련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수료자들이 만족하는 정도	√	

13-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결과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14. [산출 중심] 청년창업 지원

14-1. 다음은 산출 중심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청년 창업 지원’의 산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4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청년창업지원 대상자 수	1	• \sum (지원 사업별 청년창업지원 대상자 수)	√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전주기성	2	• \sum (창업 단계별*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유무(유=1, 무=0))		√
1인당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3	• \sum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총 지원 대상자 수		√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의 만족도	4	•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지원대상자들이 만족하는 정도	√	

14-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산출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15. [결과 중심] 혁신도시

15-1. 다음은 결과 중심의 ‘혁신도시’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혁신도시’의 결과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6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 분양률	1	• 혁신도시 내 분양 완료된 클러스터 용지/ 혁신도시 내 전체 클러스터용지 면적 * 100	✓	
계획대비 인구달성률	2	• 혁신도시 내 총인구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인구 수 * 100		✓
이전공공기관 가족동반이주율	3	• 가족동반이전 직원 수/ 이전공공기관 직원 수 * 100		✓
혁신도시 인구 평균 연령	4	• 혁신도시 인구 평균 연령	✓	
정주환경 만족도	5	•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혁신도시 거주자들의 만족도	✓	
정주인프라 구축 수준	6	• (주거)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공급계획 공동주택 수	✓	
		• (교통) 1일당 고속열차 운행 횟수(서울행), 1일당 고속/ 시외버스 운행 횟수(서울행), 시내버스 노선 개수 및 1일 운행 횟수	✓	
		• (교육) 혁신도시 내 각급 학교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각급 학교 수	✓	
		• (돌봄) 혁신도시 내 유아돌봄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유아돌봄시설 수		✓
		• (의료) 혁신도시 내 의료시설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의료시설 수	✓	
		• (공공)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수/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공공시설 수		✓
		• (복합혁신센터) 복합혁신센터 구축 여부	✓	

15-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결과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16. [산출 또는 결과 중심]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 거점

16-1. 다음은 산출 또는 결과 중심의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 거점’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1) 각 지표는 ‘스타트업·혁신벤처 성장 거점’의 산출 또는 결과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8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지구 조성 상태	1	•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여부	√	
분양률	2	• 캠퍼스혁신파크 내 산업시설구역 분양 완료 면적/분양대상 면적		√
기업 유치율	3	• 캠퍼스혁신파크 내 입주업체 수/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당시 계획 입주업체 수		√
고용량 달성률	4	• 캠퍼스혁신파크 내 총 고용자 수/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당시 계획 고용자 수	√	
누계생산액	5	• 캠퍼스혁신파크 입주 기업들의 입주 후 총 생산 금액	√	
누계수출액	6	• 캠퍼스혁신파크 입주 기업들의 입주 후 총 수출 금액	√	
창업기업 생존율	7	• 캠퍼스혁신파크 내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기업 생존율	√	
창업기업가 만족도	8	• 캠퍼스혁신파크 운영에 대한 창업기업가들의 만족도	√	

16-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산출 또는 결과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17. [산출 또는 결과 중심]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

17-1. 다음은 산출 또는 결과 중심의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 정책지표 후보군입니다.

- 1) 각 지표는 '유망신산업 거점지역 육성'의 산출 또는 결과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1-9위)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 2) 각 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표	우선 순위	측정방식	타당성 평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총 고용량 증가율	1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고용자 수 - 이후 5년 평균 고용자수)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고용자 수 * 100	✓	
청년층 취업 증가율	2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청년취업자 수 - 이후 5년 평균 청년취업자 수)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청년취업자 수 * 100		✓
상용노동자 증가율	3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상용노동자 수 - 이후 5년 평균 상용노동자 수)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상용노동자 수 * 100		✓
특허출원건수 증가율	4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특허출원건수 - 이후 5년 평균 특허출원건수)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특허출원건수 * 100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액 증가율	5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액 - 이후 5년 평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액)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액 * 100	✓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6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 5년 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 - 이후 5년 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전 5년 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 * 100	✓	
해외수출계약 체결액	7	• 클러스터 내 기업의 해외수출계약 체결 총금액	✓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 건수	8	•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건수	✓	
클러스터 내 기업 투자금액	9	• 클러스터 내 기업 투자 총금액	✓	

17-2.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 별도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산출 또는 결과 지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앞서 제시한 지표들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 추가되어야 할 지표명 :
-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 지표의 중요성 :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고려되어야 함

SQ. 인적 사항

SQ1. 응답자 구분	① 공무원 ② 학계/연구기관 ③ 민간전문가 ④ 기타
SQ2. 해당업무 종사기간	① 5년 미만 ② 5년이상 -10년미만 ③ 10년이상- 20년 이하 ④ 20년 이상
SQ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4. 연령	① 29세 이하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SQ5. 기관명	

★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